

연구보고서 2018-19

#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신윤정 · 우해봉 · 윤자영 · 임지영

**【책임연구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동아시아 가족정책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8-19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신윤정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현대아트컴

## 발간사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글로벌한 현상으로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강한 출산 억제 정책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출산율은 이들 국가들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시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보인 국가는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필적할 만큼 사회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제한된 복지 지원 및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양성 평등에서 한계성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는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비교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된 동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에 직면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간 합계 출산율과 더불어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향후 출산율 전개 과정을 전망하였으며, 퍼지셋 질적비교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인구 정책 형성 및 역사적 전개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유사성과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비교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의 비교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비교 연구에서 보다 탁월한 연구 실적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우해봉 연구위원, 임지영 연구원 그리고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의 공동 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해 주신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훈 연구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연구 분석에 있어서 자료 협조와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해 주신 충남대학교 전광희 교수,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의 토마스 소보트카(Tomáš Sobotka)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7</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b>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 .....</b>	<b>15</b>
제1절 서론 .....	17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	19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 분석 .....	38
제4절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	62
제5절 소결 .....	76
<b>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분석 .....</b>	<b>79</b>
제1절 서론 .....	81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	83
제3절 연구 방법론 .....	88
제4절 기술 분석 결과: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	94
제5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109
제6절 소결 .....	122

---

<b>제4장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분석</b> .....	<b>127</b>
제1절 서론 .....	129
제2절 일본의 인구정책 .....	130
제3절 중국의 인구정책 .....	141
제4절 대만의 인구정책 .....	147
제5절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	153
제6절 한국의 인구정책 .....	158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164
<b>제5장 결 론</b> .....	<b>171</b>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173
제2절 정책적 제언 .....	176
<b>참고문헌</b> .....	<b>187</b>
<b>부록: 부표</b> .....	<b>197</b>

## 표 목차

〈표 2-1〉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을 변화에서의 출산 진도비 변화 기여도 분해 .....	71
〈표 2-2〉 각 출생 코호트의 40~44세 결혼 경험 유무 및 자녀 출생 여부 빈도 .....	74
〈표 3-1〉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비혼'과 '한 번도 동거한 적 없는 사람' 비교, 25~34세 남녀, 2000년 .....	84
〈표 3-2〉 표본 수, 15~49세 .....	91
〈표 3-3〉 여성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96
〈표 3-4〉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	98
〈표 3-5〉 여성의 취업 형태 .....	100
〈표 3-6〉 출산·양육과 자녀와 가족 형태 .....	102
〈표 3-7〉 출산과 자녀양육 관련 인식 .....	104
〈표 3-8〉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정-직장 생활 분할 바람직한 방식 인식 .....	106
〈표 3-9〉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정-직장 생활 분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인식 ...	108
〈표 3-10〉 주요 변수의 원점수 .....	116
〈표 3-1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117
〈표 3-12〉 퍼지 점수 .....	117
〈표 3-13〉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 배열 .....	118
〈표 3-14〉 출산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	119
〈표 3-15〉 출산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	119
〈표 3-16〉 출산율에 대한 충분조건의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 결과 .....	120
〈표 3-17〉 원인집합 배열에 따른 국가 유형 .....	121
〈부표 1〉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1950~2015) .....	197
〈부표 2〉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증가율(1950~2015) .....	199
〈부표 3〉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자녀 출산 평균 연령 .....	201
〈부표 4〉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1930~1974) .....	202
〈부표 5〉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55~2014) .....	204
〈부표 6〉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완결출산율의 추이(1960~2017) .....	206

## 그림 목차

[그림 2-1] 출산 연기에 따른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 .....	24
[그림 2-2]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 유형별 추이 .....	25
[그림 2-3] 노르웨이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	29
[그림 2-4] 노르웨이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	30
[그림 2-5] 노르웨이의 출산 연기와 회복 양상 .....	31
[그림 2-6] 이탈리아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	32
[그림 2-7] 이탈리아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	33
[그림 2-8] 이탈리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연기와 보상 분석 .....	34
[그림 2-9]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1947~2017) .....	42
[그림 2-10]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증가율(1950~2015) .....	43
[그림 2-11]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자녀 출산 평균 연령 .....	44
[그림 2-12]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 (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 (1947~2014) .....	45
[그림 2-13] 대만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 (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 (1976~2014) .....	46
[그림 2-14]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 (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 (1993~2016) .....	47
[그림 2-15]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1932~1974) .....	49
[그림 2-16]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55~2014) .....	51
[그림 2-17]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60~2017) .....	52
[그림 2-18] 일본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	53
[그림 2-19] 싱가포르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61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	54
[그림 2-20] 대만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	55

[그림 2-21] 한국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	56
[그림 2-22] 일본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50년 코호트 CCF=1.97 .....	58
[그림 2-23] 싱가포르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1~1965년 코호트 CCF=1.87 .....	59
[그림 2-24] 대만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1년 코호트 CCF=2.17 .....	60
[그림 2-25] 한국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0년 코호트 CCF=2.08 .....	61
[그림 2-26] 시기별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결과(Zeman et al., 2017) .....	64
[그림 2-27]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 이하로 하락한 이후 최근 코호트까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결과(Zeman et al., 2017) .....	65
[그림 2-28]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 변화 (1941 출생 코호트~1975 출생 코호트) .....	69
[그림 2-29] 일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 변화 (1953 출생 코호트~1964 출생 코호트) .....	70
[그림 2-30]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서의 출산 진도비 변화 기여도 분해 .....	72
[그림 2-31] 각 출생 코호트의 40~44세 결혼 경험 유무별 자녀 출생 여부 빈도 .....	75



---

## Abstract <<

### **A Study on Low-Fertility Response Strategy of East Asian Countries**

Project Head: Yoon-Jeong SHIN

This study provides updated information on fertility trends in the four countries of Japan, Singapore, Taiwan, and Korea and further develops the knowledge on population policies underlying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rates in these countries. The first section looks at general trends in fertility rates by both cohort and period and explores trends in delayed childbirth and the recovery of childbirth of East Asian women.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w birthrate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fuzzy set methodology that explains what aspect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st Asia are influential on birth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e third section takes a closer look at the specific historical roots and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ies in four East Asian countries. Compared with prior research that mainly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mong these countries,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low fertility crisis in East Asia by addressing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opul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fertility rates

---

Co-Researchers: Haebong WOO, Jayoung YOON, Ji-young LIM

## 2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of East Asian countries are not likely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ro-natal policies distinguishing the East Asian countries with low fertility rates from their European counterparts are clearly visible. It follows that public policy responding to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designed based up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countries. Most East Asian governments have announced at some point that public policy has been redirected toward encouraging childbirth, 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underlying assumptions regarding population policies have changed. New ideologies that replace ingrained developmentalism are needed, and welfare systems that address family policy, and not simply pro-natal policy, should be reinforced.

\*Key words: fertility, population policy, East Asia

## 요약 <<

1960~1970년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한 경험과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간 합계출산율 지표와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초저출산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향후 출산율 추이를 전망한다.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권역의 어떠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조건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규명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 전반을 살펴 동아시아 각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동아시아 권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모두 기간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하락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출산을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기된 출산을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출생아 수도 하락한 모

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출산이 높은 연령으로 미루어져 있고 출산량 자체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어 있어 향후에 출산율의 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한국은 최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가, 만혼화 혹은 무자녀화 현상으로 첫째아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퍼지셋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 비교 관점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합원인 조건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는 원인집합 배열은 '성별 분업에 반대하고, 자녀 가치가 높으며, 자녀 양육 부담이 낮고, 출산과 결혼의 연계가 느슨하며,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은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원인집합 배열은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이 높고, 자녀 가치가 낮고, 자녀 양육 부담이 크고,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녀 근로 시간의 격차가 크며,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출산 억제와 관련하여 자유방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체되는 동시에 그 대응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측면에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에서 과거의 발전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인구정책에서 우생학적 고려가 강하고 인민행동당(PAP)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만의 인구정책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과 2016년 이후 한 자녀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에 기초가 되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중국의 사례가 보여 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초저출산 현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구해 온 정책적인 방안은 유럽 국가 등 다른 권역에 속한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며 동아시아 복지 체제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반면 양성 불평등 특히 자녀 양육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 수준이 높게 지속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여 출산 장려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저출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의 특수성과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한국 정부는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 수립,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반적인 사회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응 추진,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저출산, 인구정책, 동아시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60~1970년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선진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선진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등 최근 들어 자유 경제 시장 체제로 전환하여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역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제2차 인구학적 변동(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 발전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출산율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면서 초저출산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생산 동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결부되어 연금과 건강 보험 등 사회복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를 1980년대 말부터, 대만과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었으며 가시적인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미 경험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에서도 1990년대 말에 출산율이 하락한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동유럽 국가를 포함한 서구 유럽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출산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수준이 높고 양성 평등이 확립되어 있는 북구 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급속한 출산율 감소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저출산·인구고령화 이슈에 직면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경험과 사회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의 비교 연구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Jones et al., 2008; Rindfuss and Choe, 2015, 2016). 국내에서도 소수의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 혹은 가족 정책 현황과 정책 과제를 검토한 바 있다(신윤정, 박종서, 김은정, 기재량, 최인선, 2014;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 杜鹏, 陆杰华, 奥山正司, 高橋泉, 2013; Shin, Song, Kim, Ma, Tabuchi, Teng, . . . Anh, 2015). 이러한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가족 정책)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저출산 대응 조치들의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의 출산 및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EU Statistics라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아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는 공통의 데이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공통적인 조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동아시아 저출산 관련 연구와 관련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하락한 출산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Cohort Total Fertility Rates: CTFR)을 활용한 출산율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이 여성의 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출산 연기로 인한 것이므로 여성들의 출산 연기 및 이후 연령에서의 회복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출산율의 전개 과정을 전망한 바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출산율 비교 분석 연구는 주로 기간 합계출산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을 위해서는 횡단면으로 조사된 자료를 코호트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출생 신고 자료, 센서스 자료, 출산 관련 서베이 조사 자료 등을 통합하여 자료를 재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Chuan, 2010).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유럽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

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후발 주자 국가들은 복지국가 발전 단계가 일정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사회와 후기 산업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선진 유럽 국가들이 과거 경험했던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가족 지출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적인 성격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유럽 국가가 추진해 온 가족 정책을 전범(典範)으로 삼았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유형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조치들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기존 서구 국가들이 추진한 조치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출산율 상승의 징후는 관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을 저출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원인 요인으로 미성숙한 복지 국가 이외에 여성과 노동시장, 자녀 양육과 자녀 가치, 성평등 관념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 원인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차이가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요인은 유럽 국가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 중심으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간 합계출산율 지표와 함께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여 초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출산율 전개 과정을 전망하였다.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권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의 어떠한 점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조건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율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규명하였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 전개 과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각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동아시아 권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하였다.

종합건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추이와 이들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낮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 배경 요인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국가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과정과 현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여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장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에서 기간 합계출산율 지표와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출산율 현황을 파악하고, 코호트별 출산 연기와 회복 정도를 분석하며,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출산 진도비 변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코호트 출산율을 분석한 동아시아 국가는 자료가 제공되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이다. 이용 자료는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2017, Human Fertility Database, 각 국가 통계 기구의 자료, 선행 연구 결과 등이다.

3장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분석은 퍼지셋 질적비교 연구를 통해 국가 비교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의 결합원인 조건을 규명하였다. 원인 조건으로 검증할 변수는 성 역할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결혼-출산 패키지 관념, 남녀 근로시간 격차, 여성 고용률로 하였다. 자료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의 2012년 가족 및 변화하는 성 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19개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 영국이다.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원인 조건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나아가, 다양한 원인 조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분석에서는 인구 변동 요인 중 출산력 부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이 처음 형성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들 간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별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검토하였다.

## 제 2 장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 분석

제4절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제5절 소결



# 2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sup>1)</sup> <<

### 제1절 서론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난 출산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하여 향후에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았다. 본 절의 분석 결과는 이후의 장에서 논의할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과 현황,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연구는 주로 기간 지표를 활용하여 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Jones, Straughan and Chan, 2008; Rindfuss and Choe, 2015, 2016). 본 절에서는 기간 합계출산율 지표와 더불어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한다.

학계에서는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Ryder, 1985; Ní Bhrolcháin and Beaujouan, 2012), 실제로 출산율 자료를 통해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출산율이 변동하는 데에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모두 출산율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구분해서 출산율 변화를 분석하지 않고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추이를 함께 고찰하여 동아시아 출산율 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출

1) 본 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산율 현황을 분석하는 데 ‘기간 합계출산율’에 근거하여 출산 수준을 파악하였고 코호트 중심의 완결출산율 측면에서 여성들의 출산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출산 연기와 회복 정도에 대한 분석도 아시아 연구자들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 합계출산율과 더불어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함께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로 초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추이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기간 합계출산율 지표와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의 특징을 살펴보고 출산 수준을 측정하는 데 각 지표가 보여 주는 특성을 검토한다.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2017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출산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 출산율 현황을 분석한다. 코호트 출산율 자료를 통해 이들 국가의 출산 연기와 회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출산율 추이를 가늠해 본다. 특히 동아시아 권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에 대해 출산 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PPR)의 변화가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순위별 출산율의 변화가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한다.

##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 1.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의 연구 동향

1970년대 이후 유럽 국가의 출산율 추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자녀 낳는 연령이 높은 연령으로 미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연기(Postponement Transition)”라는 용어으로써 설명되며 출산율이 저하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었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Goldstein, Sobotka and Jasilioniene, 2009). Sobotka(2017)는 출산 시기의 연기는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 PTFR)의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시적으로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2018)는 1990년대 중반 선진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며 일부 남부 유럽 국가에서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여 주고 있다.<sup>2)</sup>

인구 학자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기간 합계출산율을 통해 출산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Bongaarts and Feeney, 1998; Bongaarts and Sobotka, 2012). 기간 합계출산율은 당해 연도의 14~49세 가임기 여성이 그 시점까지 낳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PTFR가 하락하고 이후 높은 연령에서 여성들이 미루어 왔던

2) 1995년에 이탈리아(1.2명), 스페인(1.2명), 그리스(1.3명) 등 남부 유럽 국가와 체코(1.3명), 루마니아(1.3명), 라트비아(1.3명) 등 체제변환국가 중심으로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프랑스(1.7)와 스웨덴(1.7)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다. 2016년에 와서 남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지속하였으나 체코(1.6명), 루마니아(1.6명), 라트비아(1.7명) 등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회복되었으며, 프랑스(1.9)와 스웨덴(1.9명)도 인구 대체 수준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었다(OECD Family database, 2018).

출산을 실현하면 PTFR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PTFR은 가장 최근 연도의 출산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지표이나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시점의 진정한 출산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기간(period)의 관점에서는 출산율의 저하가 실제적인 출산량의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출산 시기의 연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기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템포 효과(tempo effect)’와 ‘퀀텀 효과(quantum effect)’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으며, 기간 합계출산율에서 템포 효과가 가져온 왜곡 현상을 수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Bongaarts and Feeney, 1998; Sobotka, 2004; Bongaarts and Sobotka, 2012).

Sobotka(2017)는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출산 수준에 대한 편이가 없는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각각의 출생 코호트는 출생부터 청년기, 노년기로 이동하고 이러한 생애 주기의 진전에 따라 출산이 거의 완료되는 50세에 가까운 연령에서 출산율이 측정된다. 따라서 코호트 관점에서 출산량의 변화와 출산 시기의 변화는 관찰된 연령별 코호트 자료로부터 직접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코호트 그 자체의 출산 행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호트가 재생산기간이 완료되는 연령인 50세까지 기다린 후에야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1982년생의 경우 출산이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연령은 2012년 시점인데 완결출산율은 2020년에 가서야 측정할 수 있다. 대부분 40세를 코호트 출산율을 측정하는 안전한 한계치로 사용하지만 40세 이후에도 출산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sup>3)</sup>

3) Frejka and Calot(2001)은 30세 후반 혹은 40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40세 이후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을 무시하고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계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크지 않다고 보았다. 40세 기준으로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추정할

지난 40년 동안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출산 수준과 출산 시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주로 기간(period)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은 19세기 독일 인구학자인 Lexis(1975)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Ryder(1985)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Ni Bhrolcháin and Beaujouan(2012)은 출산율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동력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기간(period)’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주장한 반면에 Lesthaeghe(2001)는 ‘코호트(cohort)’ 효과가 관찰된 출산율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Ryder(1985)는 전통적인 Markov 연쇄에서는 어떤 시간에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그 이전에 나타난 변화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코호트 분석에서는 시간에 걸쳐 일어난 변화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기간 접근 방식은 단일한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거나 경제 위기, 정치적 변화, 발명, 혁명 등 외생적인 쇼크에 대한 반응으로 출산 경향이 전복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생애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연결하여 출산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코호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기간별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코호트의 사람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험하는 사건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Sobotka, Zeman, Lesthaeghe, Frejka(2011)는 기간 합계출산율은 서로 다른 출산 단계를 거치고 있는 다수의 출생 코호트가 같은 기간에 중첩되어 출산율이 측정되기 때문에 출산 연기가 진행되는 양상에서 정확한 출산 수준 측정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출산율의 등락은 서로 다른 출산 단계를

---

경우 15%의 출산량을 추가한다면 50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에 거의 근접한 출산율을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험하고 있는 코호트들 간의 출산 변화의 결과이다. 코호트별로 자녀 낳는 시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령이 높은 코호트의 출산 회복이 젊은 여성들의 출산 연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코호트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경우, 젊은 코호트의 낮은 출산율이 이미 출산 연기가 진행되고 있는 연령대의 낮은 출산율과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 연령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 될 때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이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출산 연기 및 회복의 정도 크기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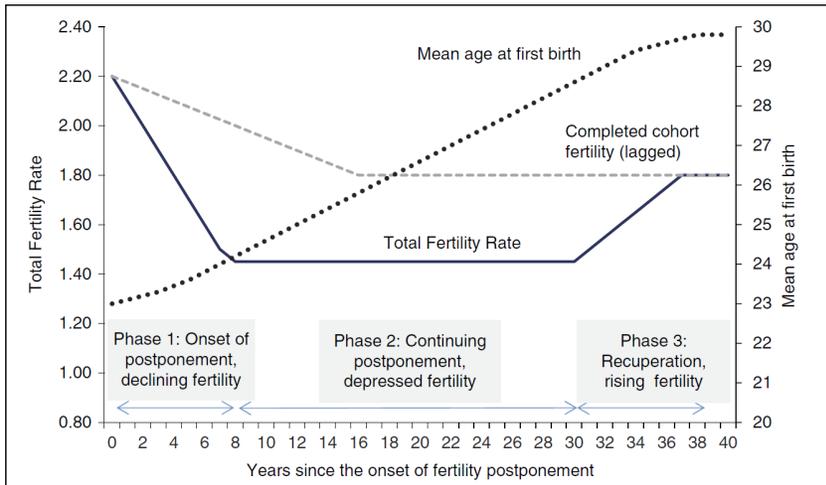
Frejka and Calot(2001)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보여 줄 수 있는 분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이 20세, 25세, 30세에 이르렀을 때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젊은 여성들이 가임 기간에 출산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각 출생 코호트별로 수행함으로써 젊은 여성들의 출산 행위가 이전 세대 코호트의 종적으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이전 세대와 다른 출산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들은 코호트 간의 비교 분석으로 과거의 출산 행태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래의 출산 행태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즉, 코호트 분석을 통해 젊은 여성들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출산력에 대해 과거 세대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여 낮거나, 동등하거나 혹은 더 높은 출산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코호트 여성의 출산 행태가 과거 여성의 출산 행태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적어도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둘째, 코호트 분석은 20대에 이르렀을 때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30대에 이르렀을 때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20대에 출산을 연기한 여성들이 30대에 이르러 그동안 연기한 출산을 얼마나 실현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젊은 코호트 여성이 나이가 들에 따라 출산 행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예견할 수 있다. 과거 코호트부터 현재 코호트까지 분석함으로써 출산 연기와 회복 행태가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Sobotka(2017)는 출산 연기가 기간 합계출산율의 저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기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진 초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아진 주요한 원인이 출산 연기라고 보았다. 그는 ‘출산 연기’ 현상을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장기적인 변화로 보았으며, 각 단계별로 기간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그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에서 여성은 출산을 연기하고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상승하며 기간 합계출산율은 하락한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이 기간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둘째 단계는 출산 연기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기간 합계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기간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 기간에 기간 합계출산율은 출산 연기에 따른 ‘뎀포 효과’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둘째 단계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국가들은 매우 낮은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출산율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셋째 단계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는 단계이다.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의 상승은 그 속도가 늦추어지다가

결국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기간 합계출산율에서 ‘템포 효과’는 사라지고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젊은 여성들이 더 이상 출산을 연기하지 않아 젊은 연령에서의 출산율이 점차 안정된다. 또한 젊은 시절에 미루어 두었던 출산이 높은 연령에서 실현되면 높은 연령에서의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2-1] 출산 연기에 따른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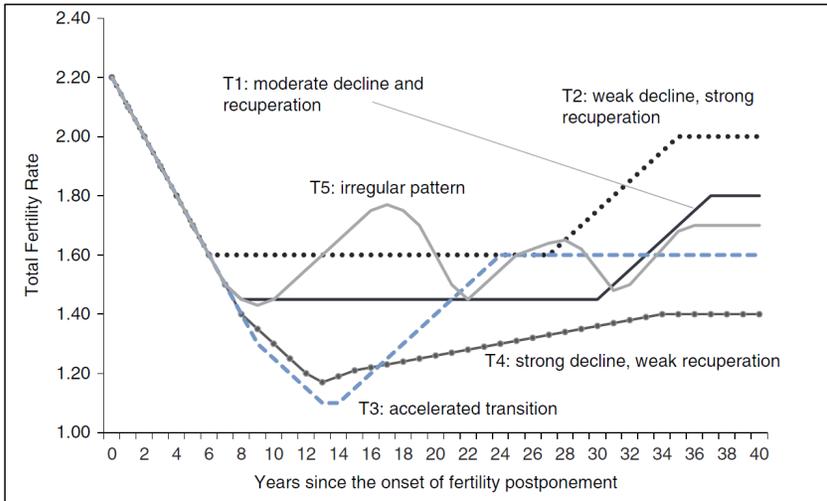
자료: Sobotka, T.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 Biosoc. Sci.*, 49, p.S29.

Sobotka(2017)는 또한 기간 합계출산율의 상승 정도는 출산 연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산량’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출산이 연기되는 기간에 출산량 또한 낮아졌다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매우 느린 속도로 상승하거나 혹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이 연기되는 기간에 출산량도 하락하였기 때문에 출산 연기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기간 합

계출산율은 출산 연기가 시작되었던 시점 이전과 비교하여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Sobotka(2017)는 출산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기간 합계출산율이 변하는 모습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중간 정도 속도로 감소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유형으로 네덜란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미약하게 감소하고 이후에 현격하게 상승하는 유형으로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여 1.3명 이하가 되었으나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유형으로 체코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하락하고 이후에 미약하게 상승하는 유형으로 일본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변동을 보이는 유형으로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2-2]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 유형별 추이



자료: Sobotka, T.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 Biosoc. Sci.*, 49, p.S29.

## 2. 유럽 국가의 선행 연구 결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현황과 코호트 출산율 지표를 통해 출산 연기 및 회복 추이를 국가 간에 비교한 연구는 대부분 Frejk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Frejka and Calot, 2001; Frejka and Sardon, 2004; Frejka, Jones, Sardon, 2010; Frejka and Gietal-Basten, 2016; Frejka, 2017). 본 절에서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 분석한 Frejka and Calot(2001)과 동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분석한 Frejka, Jones, Sardon (2010)의 연구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다.

Frejka and Calot(2001)은 유럽 국가의 1930~1960년대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여 30세 이후에 이루어진 코호트 완결출산율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유럽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1931년에 출생하여 1970년에 출산을 완료한 여성들의 평균 코호트 출산율은 2.5명, 1946년에 출생하여 2000년에 출산을 완료한 여성들의 평균 코호트 출산율은 2.1명, 1962년에 출생하여 21세기 초반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의 평균 코호트 출산율은 1.9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럽 국가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 출생 코호트별로 출산력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인구 대체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931년 출생 코호트는 인구 대체 수준을 넘는 출산력을 보인 반면에, 1946년 출생 코호트는 인구 대체 수준에 근접한 정도 그리고 1962년 코호트는 인구 대체 수준에 미달하는 출산력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각 지역 단위(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등)로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절에서는 Frejka and Calot(2001)이 심층 분석 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노르웨이는 연

기된 출산율이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되어 기간 합계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한 대표적인 국가이며, 이탈리아는 연기된 출산율이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되지 않아 기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두 국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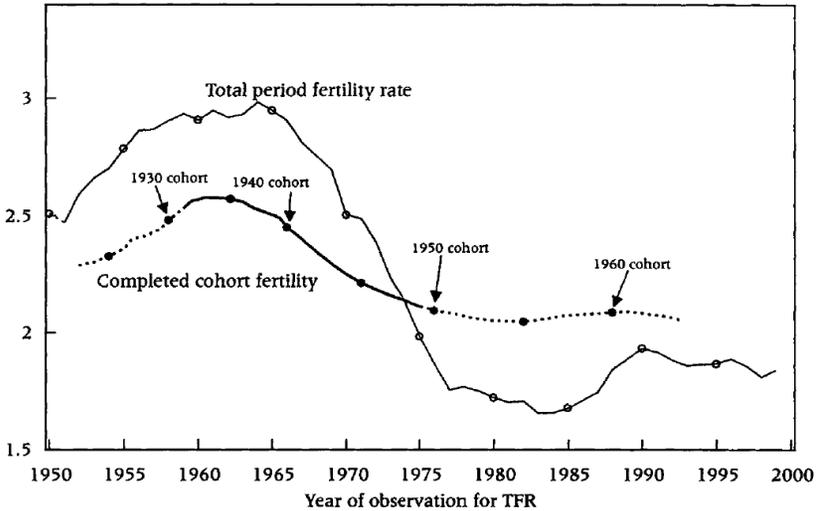
노르웨이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베이비붐 시기를 거치면서 1964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3.0명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기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0년대 초반 1.7명까지 하락하였다. 기간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약간 상승하여 1990년 1.9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8~1999년에 약 1.8명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1999년 유럽 평균 수준인 1.6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선진 국가 전역에서 나타난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도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Frejka and Calot(2001)은 노르웨이가 유럽 평균 수준을 웃도는 기간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가족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출산율 수준에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노르웨이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족 정책의 특징을 연구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세기 중반 이후 노르웨이 국민들은 산업화 혹은 후기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 역시 꾸준히 상승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되어 1990년에 여성 고용자 중 85%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석유를 생산하는 노르웨이는 경제 위기에 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노르웨이의 인구는 인종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동질적이었다. 생활수준 특히 주거 환경은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출산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었으나 사회 정책 자체가 재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가족과 아동을 지지하는 법률과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가 1980년대 후반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유급 육아휴직은 점차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에 부부 모두 42주 육아휴직을 보내면서 임금의 전체를 급여로 지원받거나 혹은 52주의 육아휴직을 보내면서 임금의 80%를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Frejka and Calot, 2001).

노르웨이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가족 정책의 배경하에서 변화되어 온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패턴을 Frejka and Calot(2001)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연령별 출산 패턴에 노르웨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1920년대 코호트 여성까지 2명 수준을 넘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40년대 후반 코호트에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1951~1957년 출생 코호트에서 2.05~2.0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코호트의 경우 2.0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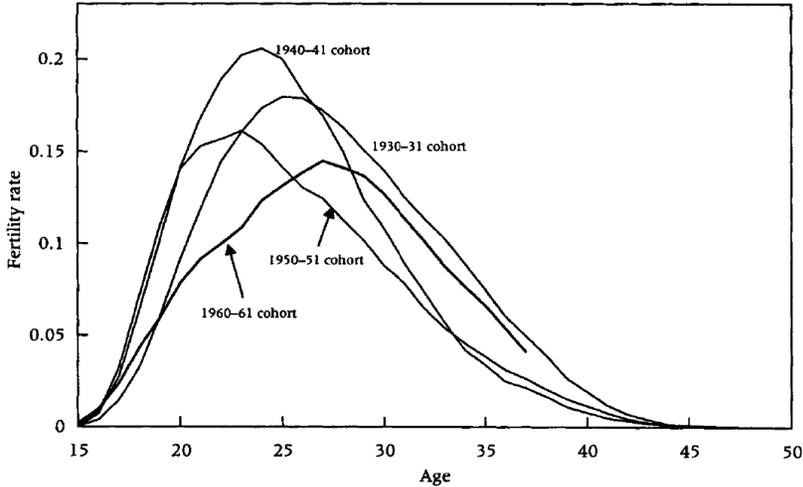
[그림 2-3] 노르웨이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08.

노르웨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연령별 출산 패턴은 코호트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50년 출생 코호트와 1960년 출생 코호트가 2.09명으로 유사하였으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자녀 출산이 높은 연령대로 연기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 2-4]를 보면 25세에 이르기까지 1960~1961 코호트 여성은 이전 코호트 여성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4~36세에 이르렀을 때 1960~1961년 코호트 여성은 1950~1951년 코호트 여성보다 출산율이 7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 미루었던 출산율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노르웨이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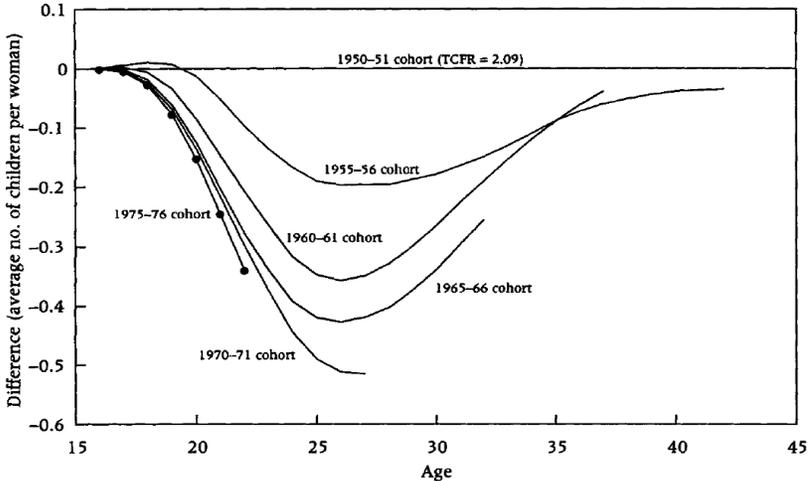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09.

한편, 1960년대 코호트와 1970년대 코호트의 출산 행태를 비교해 보면 최근의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1971년 코호트 여성이 26세 이르렀을 때 누적 출산율은 0.74로 이것은 1960~1961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여 18% 낮은 수준이다. 1975~1976 출생 코호트가 21세 이르렀을 때 누적 출산율은 0.17로 1965~1966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면 26%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가 높은 연령대에서 출산을 회복하지 않으면 완결출산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인구 대체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되려면 1960년대 후반 코호트와 1970년 이후 코호트는 젊은 시절에 연기하였던 출산을 30세 이후의 연령에서 회복해야 한다.<sup>4)</sup>

4) Frejka and Calot(2001)이 분석하지 못했던 2000년 이후 노르웨이의 기간 합계출산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까지 1.8명 수준을 유지하던 노르웨이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009년에 1.98명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 1.71명까지 하락하였다(OECD Family

[그림 2-5] 노르웨이의 출산 연기와 회복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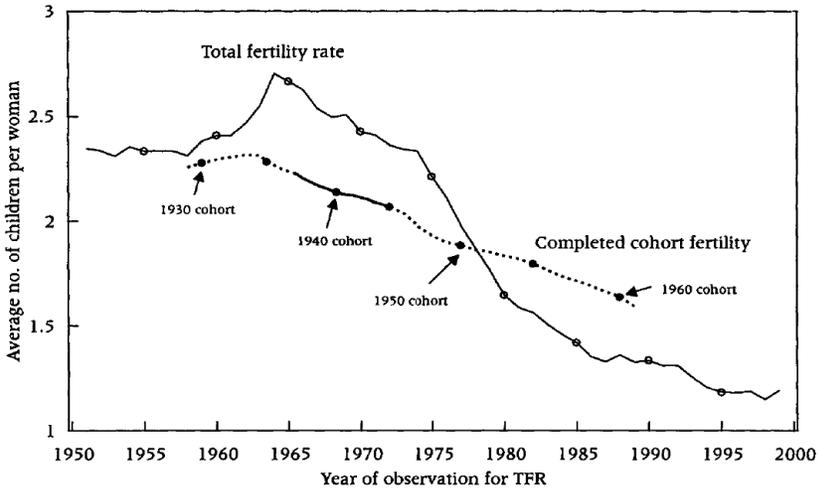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11.

이탈리아는 노르웨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르웨이는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1960년대 초반 코호트가 30대 이후의 연령에서 출산을 현저하게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이탈리아는 30대 이후의 연령에서 출산 회복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Frejka and Calot(2001)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탈리아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의 현황과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930년대에 3.0명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50년대에 이르러 2.3명으로 하락하고 1964~1965년에 2.7명으로 약간 회복한 이후 줄곧 하락하였다. 1970~1980년대 기간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

database, 2018). 이는 2000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에서 어느 정도 출산이 회복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여성들의 출산 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였으며 이러한 하락 추이는 1995년까지 이어져 1999년 이탈리아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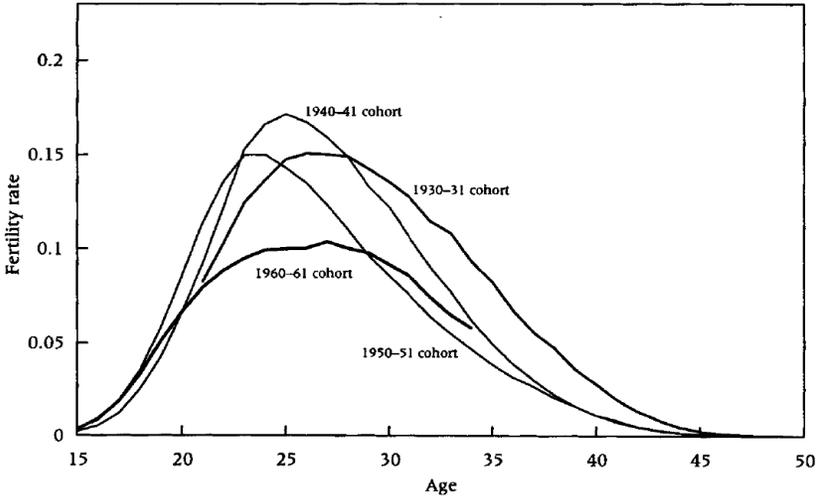
[그림 2-6] 이탈리아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12.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33~1934년 출생 코호트에서 2.3명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60~1961년 출생 코호트에서 1.61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연령별 출산 패턴도 코호트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50년대 코호트는 22세 이르기까지 1940년대 코호트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23~40세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30세 여성의 누적 코호트 출산율은 1940년대 코호트보다 30%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2-7] 이탈리아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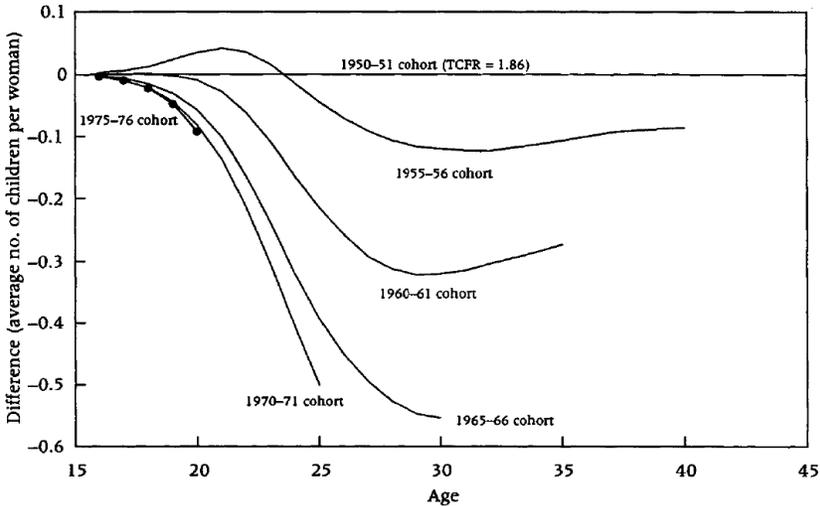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13.

1960~1961년 코호트의 20세에서의 누적 코호트 출산율은 이전 코호트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낮으며, 21~26세에 이르렀을 때 누적 출산율 역시 1950~1951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35% 더 낮다. 30세에 이르렀을 때 1960~1961년 코호트의 누적 코호트 출산율은 1.14명으로, 이는 1950~1951년 코호트의 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교하여 약 22% 낮은 수준이다. 1960~1961년 코호트 여성이 30대에 회복한 출산율은 젊은 시절에 하락한 출산율을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임기가 종결된 코호트 중심으로 볼 때 높은 연령대에서 회복한 출산율은 젊은 시절에 연기한 출산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임기가 종결되지 않은 코호트에서조차도 출산율은 이전 코호트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낮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젊은 시절에 미룬 출산이 충분히 보상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분

석 결과는 이탈리아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960~1961년 1.6명 수준에서 향후 10~15년간 지속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그림 2-8] 이탈리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연기와 보상 분석



자료: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 114.

### 3. 동아시아 국가의 선행 연구 결과<sup>6)</sup>

Frejka, Jones, Sardon(2010)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1970년대 초반의 출생 코호트까지 완결된 코호트 출산율을 분석하였으며 1980년대 코호트에 대해서

5) 2000년 이후 이탈리아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에 1.33명으로 상승하여 초저출산 국면을 극복하였고 2010년에는 1.4명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기간 합계출산율은 다시 하락하여 2016년 현재 1.34명 수준이다(OECD Family database, 2018)

6) 본 내용은 “Frejka, Jones, Sardon(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는 가입기 초기인 20대까지의 출산 경향을 보여 주었다. Frejka et al.(2010)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아시아 네 국가들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코호트 평균 자녀 출산 연령,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완결출산율 연기와 회복 양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20~1930년대 4명 이상의 수준을 보이다가 1950년대 후반에 인구 대체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1960년대 코호트까지 인구 대체 수준에 머물다가 1970년 이후 코호트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서 1950년대에 출생한 여성들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약 2명으로 나타났는데, 1970년 코호트에 와서 싱가포르 1.5명, 일본 1.4명, 홍콩 1.2명으로 하락하였다.

코호트 자녀 출산 평균 연령도 동아시아 네 국가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홍콩과 일본에서 1950년대 초반 코호트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28세였으나 1960년대 후반 코호트에서 약 30세로 상승하였다. 코호트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의 상승 속도를 보면 한국과 대만은 일본, 홍콩과 유사하나 절대적인 연령 수준은 홍콩과 일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이미 일본과 홍콩은 과거 코호트에서 출산 평균 연령이 대만과 한국보다 어느 정도 먼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50년대 중반 코호트에서 1960년대 후반 코호트까지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한국이 26.5세에서 29세로 상승하였으며 대만은 25.7세에서 27.6세로 상승하였다.

Frejka et al.(2010)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감소한 이유가 10~20대 여성들의 출산이 감소하고 30~40대에서 젊은 시절에 연기한 출산율을 보상할 만큼 현저한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1960년 코호트부터 1985년 코호트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젊은 시절에 연기한 출산이 이후의 연령에서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분석

하기 위하여 1960년 코호트 누적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하여 1965, 1970, 1975, 1980, 1985년 코호트의 누적 출산율을 비교하였다.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네 국가 간에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서 자녀 출산이 지연되었음을 말해 준다. 일본은 1965년 코호트에서 젊은 여성들의 출산력이 감소하였으며 1970, 1975년 코호트에서 어느 정도 출산이 회복되었지만 젊은 시절에 연기된 출산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도 20세 초반 여성들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최근 코호트로 와서 20세 후반의 여성들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는 30대 여성들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은 자녀 출산 연령이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고 높은 연령대 여성들의 출산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대만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 행태는 다소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높은 연령대의 출산율 회복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Frejka et al.(2010)이 분석한 코호트 완결출산율 연기와 회복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홍콩과 일본은 1960~1970년대에 젊은 여성들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자녀 출산이 감소하였으며 젊은 시절에 연기된 출산율은 매우 적은 부분만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국가에서 젊은 시절의 자녀 출산 감소는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실질적인 감소'였으며 '출산 연기'가 아니었다. 일본은 1970년 코호트 여성이 33세에 1960년 코호트 여성에 비하여 0.48명 더 적은 자녀를 낳았으며, 30대 후반에서 가서도 두 코호트 여성은 자녀 수가 동일하지 않았다. 이는 1970년 코호트 여성이 젊은 시절에 미룬 출산이 30대 이르러서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1960, 1970년 코호트에서 높은 연령대에서의 출산 회복이 매우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기준으로 1970~1974년 코호트는 1955~1959년 코호트에 비하여 0.35명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30~34세에서 두 코호트 간 출산율 격차는 0.44명으로 커졌다. 1965~1969년 코호트에서도 1955~1959년 코호트와의 출산율 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만 역시 1960, 1970년 코호트에서 30대 이후에 출산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 1965년 코호트에 비하여 1970년대 코호트의 출산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30세 이후에서 어느 정도 출산율이 회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Frejka et al.(2010)의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960년 코호트 여성들이 젊은 시절에 연기한 출산율이 이후의 연령에서 회복하는 경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1961~1962년 코호트에서 연기된 출산의 약 20%만이 회복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 코호트에서는 출산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6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코호트에서 연기된 출산의 약 7~20%만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60년대 코호트에서 연기된 출산의 약 40~60%가 이후 연령에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1961년 코호트에서 연기된 출산의 40%가 회복된 반면에 1967년 코호트에서는 20% 미만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Frejka et al.(2010)은 동아시아 선진 국가에서 출산 연기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연기된 출산이 이후 높은 연령대에서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 분석

### 1.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선진 국가로서 기간 합계출산율이 1.3명인 초저출산 이하로 하락한 경험이 있거나 아직도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한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였듯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인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 연기와 이후 연령에서의 출산 회복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어 향후 출산율 추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한 Frejka et al.(2010)은 1970년대 초반 코호트 여성까지 관찰한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여 주었으며, 1975년 출생 코호트부터 1985년 출생 코호트까지는 완결되지 않은 가임기 초반 연령의 출산 행태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Frejka et al.(2010)이 파악하지 못한 최근 연령대의 코호트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Frejka et al.(2010)이 향후 동아시아의 출산율 추이에 대해 전망한 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격하게 하락한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Frejka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양상만 언급하였고 깊이 있는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 현황과 향후 출산율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국내 정책 제언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코호트 출산율 분석을 위한 자료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는 Human Fertility Database(HFD)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sup>7)</sup> 한국은

Myrskylä et al.(2013)과 통계청(2018a, 2018b)의 자료를 코호트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sup>8)</sup>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계부(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2017)와 Chuan(2010) 등 참고문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자료원을 활용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국가별 자료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네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아시아 권역의 전반적인 출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 합계출산율, 인구 증가율,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을 분석하였다. 코호트 출산율 분석 대상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외에도 동아시아 권역에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상세한 출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두 국가에 대한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은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남겨 두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두 국가의 출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코호트 출산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Human Fertility Database(HFD)는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MPIDR)와 오스트리아의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VID)가 협력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기간 출산 자료와 코호트 출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http://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함). HFD는 2018년 현재 총 29개 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로는 대만, 일본의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다.

8) Myrskylä et al.(2013)의 1961~2010년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청(2018a, 2018b)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주민등록연앙인구와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1~2014년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Myrskylä et al.(2013)의 자료는 충남대학교 전광희 교수가 제공한 것으로(Myrskylä et al., 2013) 전광희 교수와 전화 면담을 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 2. 기간 합계출산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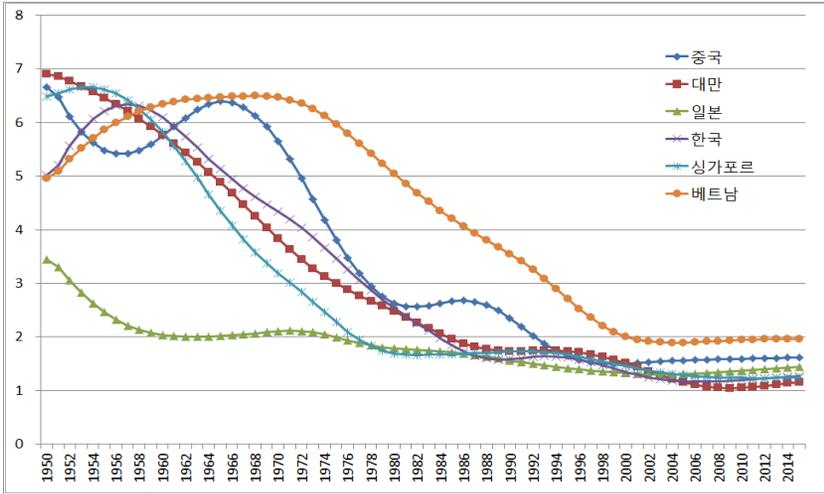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경제 개발이 현저하게 이루어진 1970~1980년대에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 1.3명이라는 초저출산 국가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은 경제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국가부터 하락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싱가포르는 1970년대 말부터, 한국과 대만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시점은 상이하지만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드는 시기는 네 국가 모두 동일하게 2000년대 초반이다. 가장 최근의 출산율 현황을 보면 2015년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44명으로 초저출산의 국면에서 약간 벗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대만은 1.16명, 싱가포르는 1.24명, 한국은 1.28명으로 초저출산 수준 기준인 1.3명보다 더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기간 합계출산율은 중국 1.62명, 베트남 1.96명 수준을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현재 초저출산 수준에 근접하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변화하는 모습은 차이가 있다. 이미 192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일본에서 출산율 변천은 비교 대상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15년 동안 인구 대체 수준(2.1명)으로 유지되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일본과는 달리 인구 대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적이 없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1950년대 말까지 6명에 가까운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싱가포르가 대만이나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977년에 인구 대체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한국과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3명을 넘는 수준을 보였다. 한국과 대만의 출산율 하락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1990년대 중반에 인구 대체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하락한 후 200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가 2010년에 들어와서 1.4명으로 회복되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에 더 하락하여 1.3명 수준보다도 더 낮게 하락하였다.

이렇게 각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국가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초저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대만은 그 속도 자체가 매우 빨랐다. 이에 따라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대응할 여력이 한국과 대만에서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구정책 전개 과정에서 보인 특징들은 본 보고서의 4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4장을 통해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9]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194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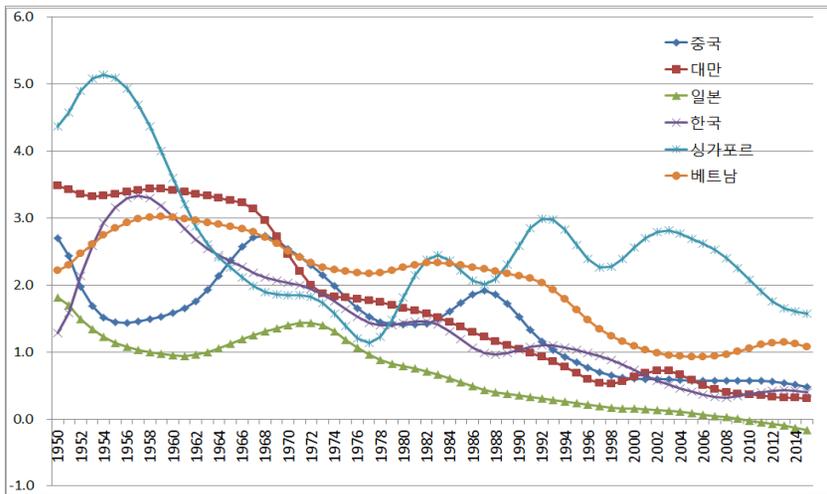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통계자료는 <부표 1> 참고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인구정책에서 정부의 개입이 크지 않았던 일본은 인구 증가율이 1970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부터 일본의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싱가포르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연도에는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민자 수를 줄인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계획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였던 1980년대 후반까지 인구 증가율이 반복적으로 증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부터 인구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인구 증가

율이 급속히 감소하다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약간 등락한 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95년까지 미약하게 등락하다가 200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0년 이후부터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10]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증가율(195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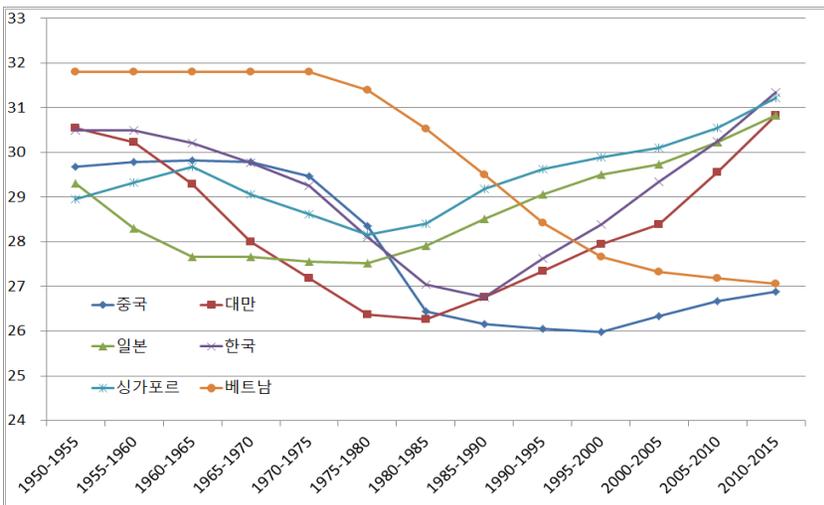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통계자료는 <부표 2> 참고

동아시아 국가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모두 1975~1980년 기간 이후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1975~1980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대만은 1980~1985년부터, 한국은 1985~1990년부터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2010년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이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나 모두 유사하게 약 31세였다. 중국은 1995~2000년부터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는데 베트남에서는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010~2015년 중국과 베트남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약 27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1970~1980년대에 현재보다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는 평균 5~6명의 자녀를 낳아 고령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에 출산하는 경우도 줄어들자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감소하였고 이후 저출산 현상과 함께 첫째 자녀 출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다시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1]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자녀 출산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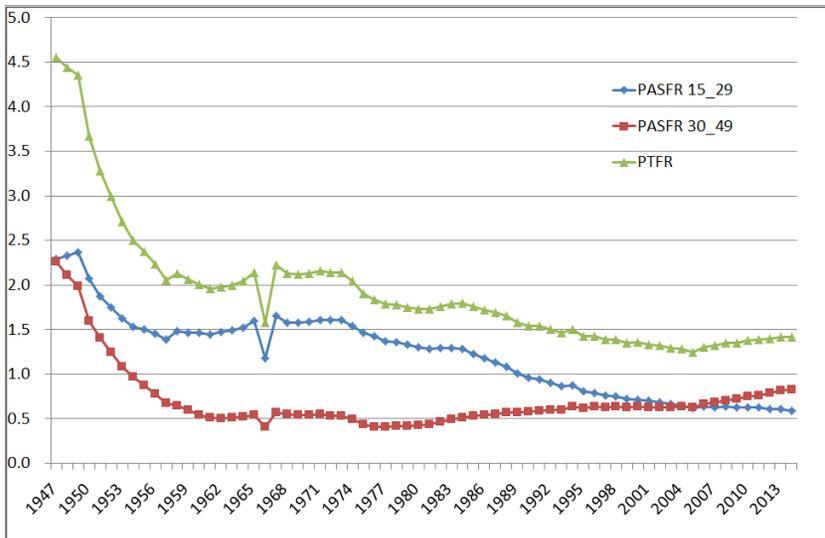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통계자료는 <부표 3> 참고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 출산 연기 현상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임기 초반에 해당하는 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과 가임기 후반에 해당되는 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일본은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1960년대 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1975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0~49세 여성의 출산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부터 역전되어 이후 기간부터는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15~29세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아졌다.

[그림 2-12]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194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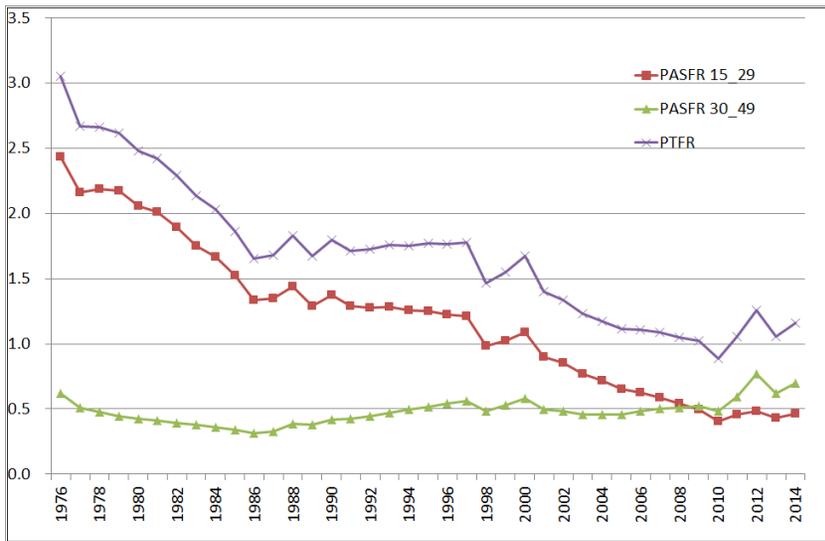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함.

대만과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빠르게 하락하였다. 1976~2014년에 대만의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4명에서 0.462명으로

1.938명 하락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1.43명에서 0.587명으로 0.843명 하락한 것보다 하락 폭이 크다. 대만에서 30~49세 여성의 출산율 회복은 매우 더디게 나타나 1986년 0.316명에서 2014년 0.697명으로 0.381명 상승하였다. 대만에서는 2009년부터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15~29세 여성들보다 높아졌다.

[그림 2-13] 대만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197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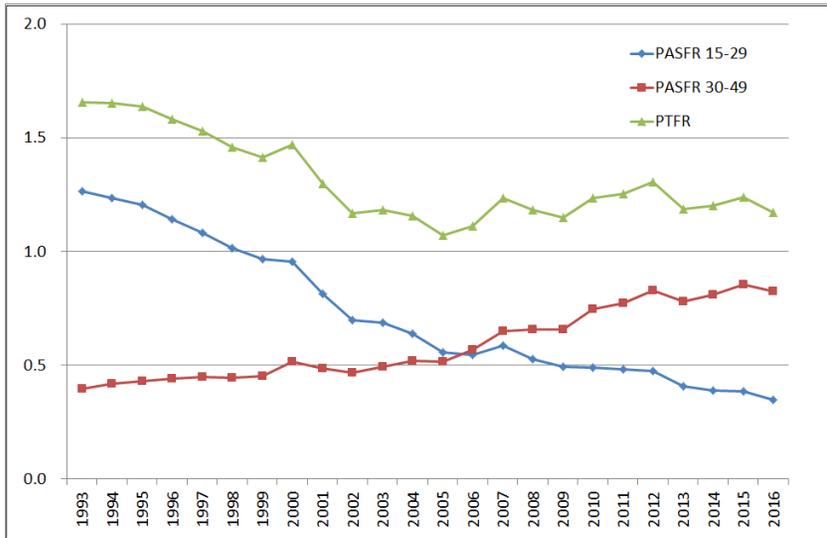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연구진이 계산함.

한국의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993년 1.264명에서 2014년 0.391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 중 출산율의 하락 폭은 0.874명으로, 같은 기간 대만의 15~29세 여성의 출산율 하락 폭인 0.823명과 유사하고 일본의 0.218명보다 크다.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2년 0.469명에서 2015년 0.854명으로 증가하여 대만, 일본과 비

슷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6년부터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15~29세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아졌다.

[그림 2-14]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PTFR)·15~2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15-29)·30~49세 여성의 기간 연령별 출산율(PASFR 30-49)(1993-2016)



자료: 통계청(2018a, 2018b)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연구진이 계산함. www.kosis.kr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

종합건대 일본, 대만, 한국 모든 국가에서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 속도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대만, 한국 모든 국가에서 그 상승 폭은 매우 작아 15~29세 여성의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보충하기에는 부족하다.

### 3.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 가.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먼저 하락한 일본은 1930년대 코호트부터 1950년대 코호트까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2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50년대 코호트부터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말 코호트에서 약 1.4명으로 하락하고 이후 1974년 코호트까지 1.4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1940년대 코호트까지는 3명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1950년대 코호트로 오면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점차 더 감소하여 1974년 코호트는 약 1.5명 수준을 보였다.

대만은 1961년 코호트부터 코호트 완결출산율 자료가 제공되었다. 1961년 코호트는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1960년대 중반 코호트부터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하락하였다. 1974년 대만은 약 1.5명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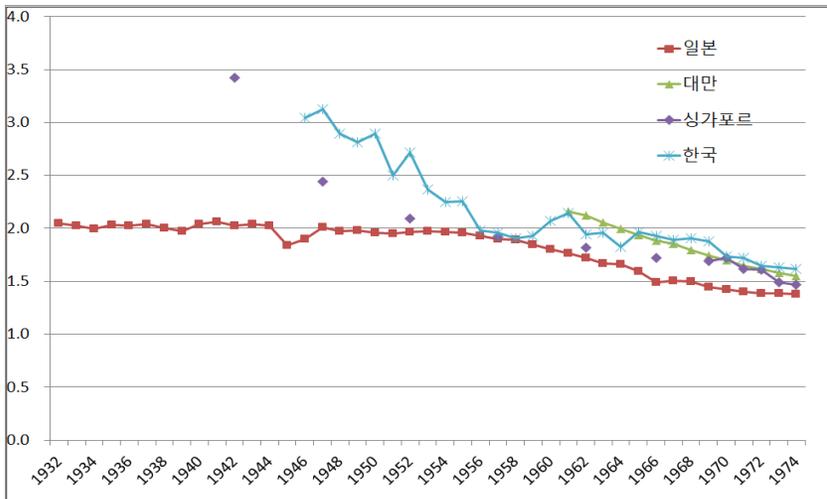
한국은 1940년대 코호트까지만 하더라도 약 3명에 가까운 코호트 완결출산율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 코호트부터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점차 더 하락하여 1974년 코호트에 와서는 1.6명 수준을 보였다.

종합전대 가임기가 거의 종료된 가장 최근의 코호트라고 볼 수 있는

1974년 코호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일본 1.4명, 싱가포르 1.5명, 대만 1.6명, 한국 1.6명이다. 네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 일본과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였으며, 두 국가보다 출산율 하락이 늦게 시작된 대만과 한국은 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코호트 완결출산율 수준을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여성들이 가임기에 갖는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jka et al.(2010)이 지적하였듯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단지 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출산 연기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평생 낳는 자녀 수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15]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1932~1974)



주: 한국, 일본, 대만은 40세까지의 완결출산율, 싱가포르는 44세까지의 완결출산율이며 5년 단위 코호트 자료의 중간연도로 보고함. 통계자료는 <부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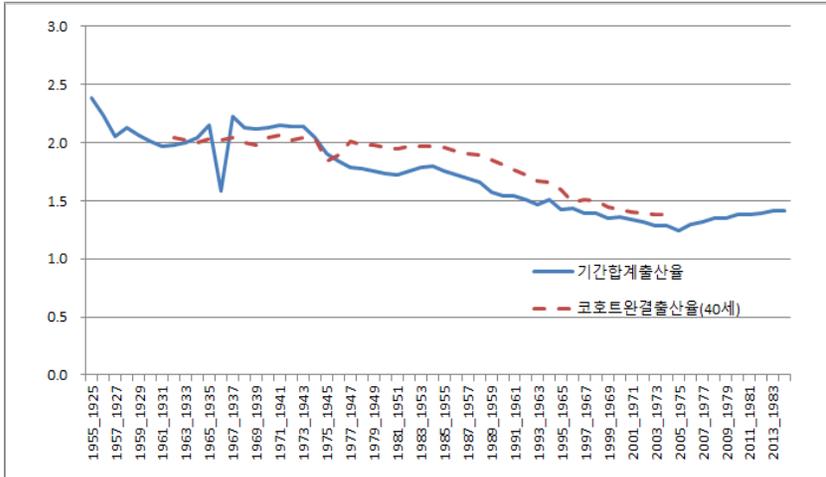
자료: 한국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2018a, 2018b); 일본, 대만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 싱가포르 Chuan (2010).

[그림 2-16]과 [그림 2-17]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같은 그래프상에서 나타내어 두 지표 간의 추이를 함께 비교한 것이다.<sup>9)</sup> 기간 합계출산율은 해당 연도에서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해당 연도에서 30세에 이른 여성이 40세에 도달했을 때 보인 완결출산율을 나타낸다. 일본과 한국 모두 여성의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은 약 3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연령 30세는 가장 활발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연령이며 해당 연도의 기간 합계출산율도 이러한 30세 여성의 출산율을 반영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그래프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해당 연도에서 30세였던 코호트 여성이 40세에 도달했을 때의 완결출산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간의 격차를 통해 해당 연도에서 30세였던 여성이 실현하지 못했던 출산율을 40세에 이르러서 실현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출산율 지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Sobotka(2017)가 지적한 다섯 가지 출산 연기 유형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46년부터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기간 합계출산율보다 높다. 하지만 2000년부터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출산 연기로 인한 기간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더 하락되지 않는 경우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향후 1.4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Sobotka(2017)가 지적한 바대로 일본은 기간 합계출산율 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9)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연도의 자료가 제공되는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6]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5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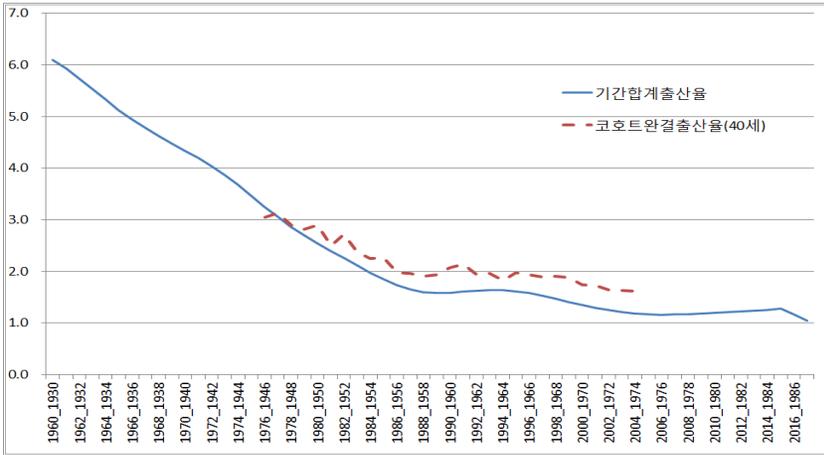
주: x축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30세에 이룬 코호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x축 좌표 1975\_1945는 1975년도의 기간합계출산율과 1975년 당시 30세인 1945년 코호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의 완결출산율을 보여 준다.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 2018년 2월 13일 인출. 통계자료는 <부표 5> 참고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는 일본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기간 합계출산율과 더불어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기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Sobotka(2017)가 지적한 기간 합계출산율 변동의 두 번째 시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들의 출산 연기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 합계출산율에서 “템포 효과”가 사라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여성들이 출산을 연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력 자체도 하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Yoo and Sobotka(2017)는 템포 효과가 제거된 2015년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17]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6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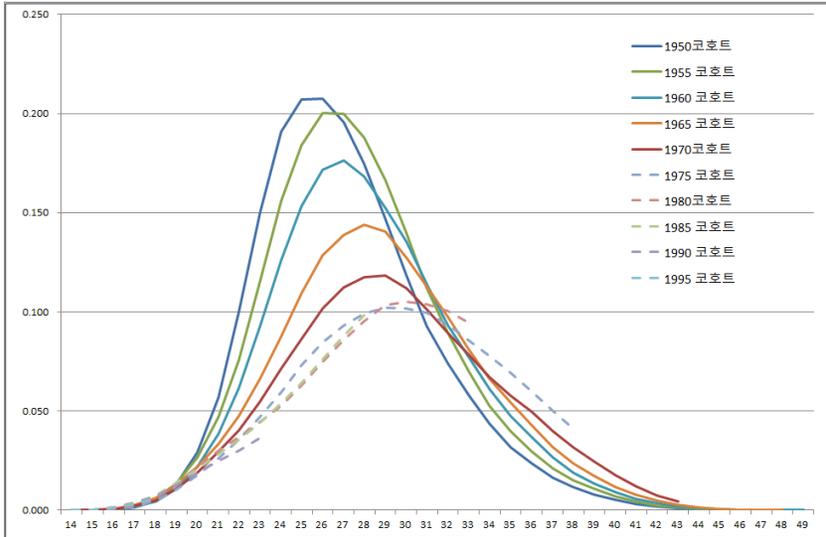


주: x축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30세에 이른 코호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x축 좌표 1976\_1946은 1976년도의 기간합계출산율과 1976년 당시 30세인 1946년 코호트가 40세에 이르렀을때의 완결출산율을 보여 준다.  
 자료: 한국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2018a, 2018b),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통계자료는 <부표 6> 참고

### 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

일본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그래프는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출산이 높은 연령대로 미루어진 모습을 보여 준다. 20세 후반 연령과 30대 이상 연령에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나 20대에서 연기된 출산율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1980년 코호트부터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은 1975년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1975년 코호트 이후부터는 출산 행태가 안정되어 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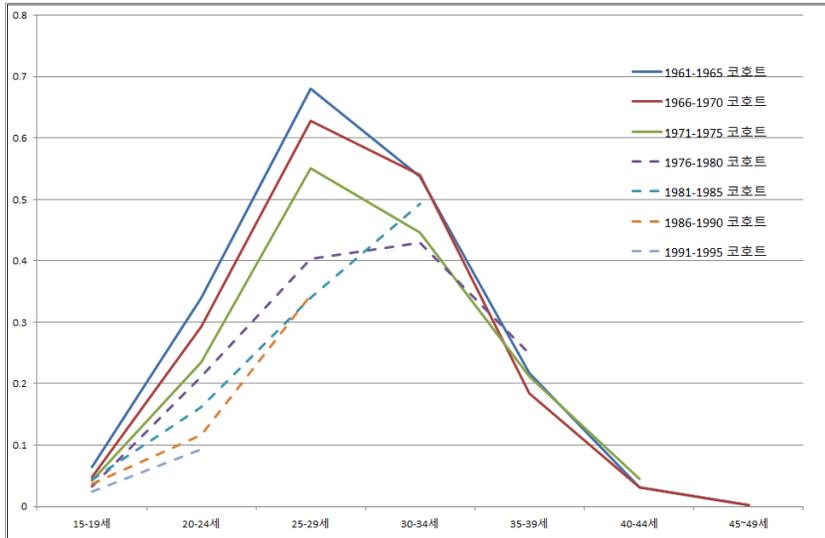
[그림 2-18] 일본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싱가포르의 연령별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출산이 이후 연령대로 연기되고 출산량도 감소하였으며 연기된 출산이 30대 이후 연령에서도 많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0대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61~1965년 코호트부터 1971~1975년 코호트까지 가장 높은 출산율 보인 연령대는 25~29세였다. 이러한 양상이 1976~1980년 코호트로 오면서 달라져 가장 많이 출산한 연령대가 30~34세로 옮겨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1981~1985년 코호트에서도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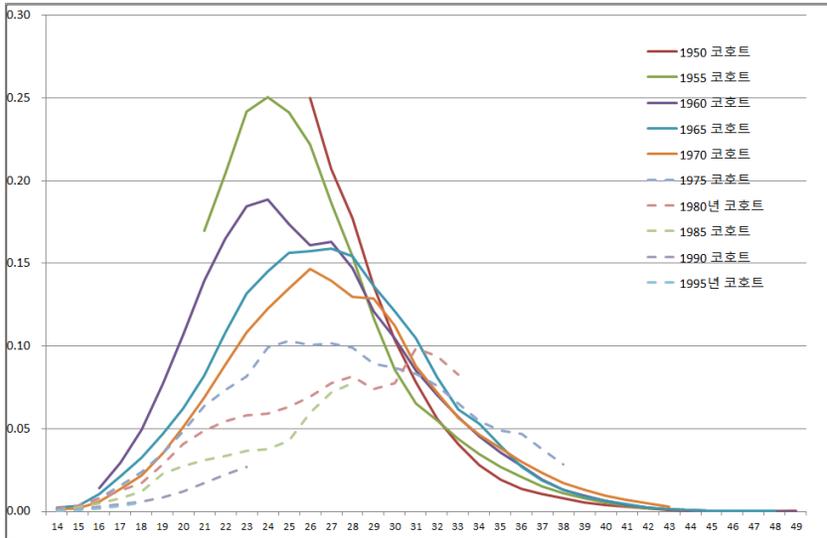
[그림 2-19] 싱가포르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61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2017). Population trends 2017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대만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은 1950년대 코호트부터 1980년대 코호트까지 출산 연기가 나타났으며 30대 이후 연령에서 출산 회복이 어느 정도 감지되었다. 30대 이후 연령에서의 출산 회복은 1975년 코호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 코호트보다 전반적으로 출산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30대 이후에 출산율이 회복되어도 과거 코호트의 출산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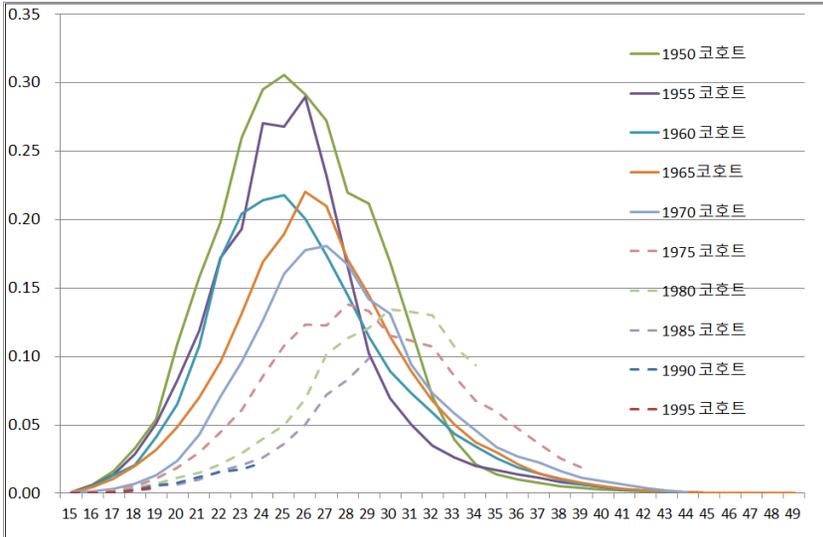
[그림 2-20] 대만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한국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추이는 대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950년 이후 코호트부터 출산량이 감소하고 출산이 연기되었으며 20대에 연기된 출산이 30대에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그 회복 정도는 20대에 연기된 출산율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였다. 30대 이후에서의 출산율 회복은 1975년 코호트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큰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코호트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과거 코호트보다 출산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20대에 연기된 출산이 30대에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 코호트의 출산 수준만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 한국의 연령별 코호트출산율의 추이(1950년 코호트~1995년 코호트)



자료: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2018a, 2018b)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 4. 출산 연기와 출산 회복 분석

본 절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출산 연기와 회복 크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Frejka and Calot(2001), Frejka and Sardon(2004), Frejka et al.(2010)이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이들의 출산 연기와 회복 분석 방법론은 Sobotka, Zeman, Lesthaeghe, Frejka, Neels(2012)의 연구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 방법론은 각 연령대의 누적 출산율 수준을 준거 대상이 되는 코호트와 이후 시기의 코호트 간에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 코호트와 준거 대상 코호트의 누적 출산율 격차를 연령별로 비교함으로써 어느 연령까지 격차가 최고점에 달하고 어느 연령부터 이러한 격차가 차츰 감소하여 준거 대상 코호트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분석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도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출산율 감소와 회복 크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본 절에서는 인구 대체 수준에 근접한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인 코호트와 이후 시기 코호트의 누적 출산율을 비교하여 최근 코호트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출산율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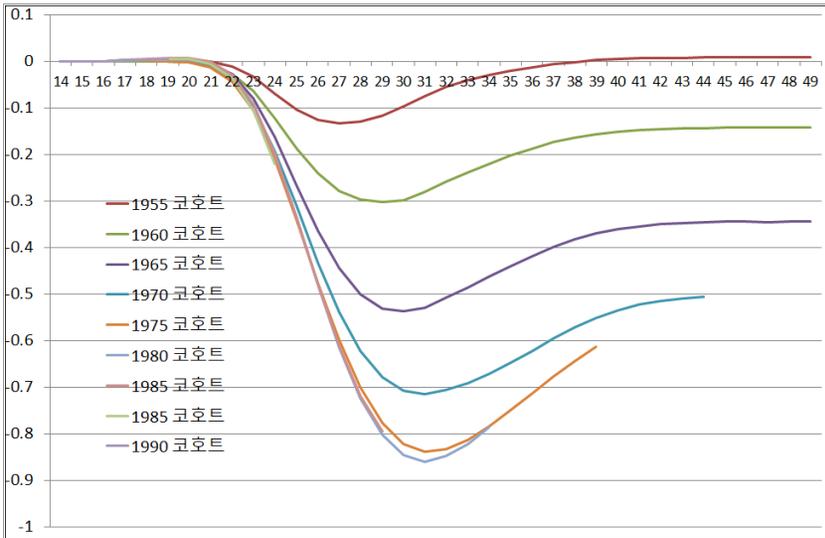
일본은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1.97명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인 1950년 코호트의 누적 합계출산율을 그 후의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50년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여 그 후 코호트 여성들은 자녀 수가 더 적다. 1955년 코호트는 1950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27세에 가장 큰 격차를(-0.134명) 보이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여 39세 이후부터는 1950년 코호트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다. 그 결과 1955년 코호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8명으로 1950년 코호트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950년 후 코호트부터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950년 코호트에 미치지 못하였다. 1960년 코호트는 1950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29세에 가장 큰 격차를(-0.303명) 보이고, 그 후에 격차는 감소하나 그 격차는 43세 이후 0.144명으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0년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83명으로 1950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0.14명 하락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1965년 코호트와 1970년 코호트를 거치면서 더욱 커져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1975년 코호트가 1950년 코호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령은 31세로 1950년 코호트에 비하여 0.839명 낮았다.

하지만 1975년 코호트 이후 1950년 코호트와 격차가 줄어들었다. 1980년 코호트 그래프는 1975년과 유사하여 1975년 코호트에 수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앞서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 분석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일본의 출산 연기 현상은 1980년 출생 코호트 이후부터 안정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2] 일본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50년 코호트 CCF=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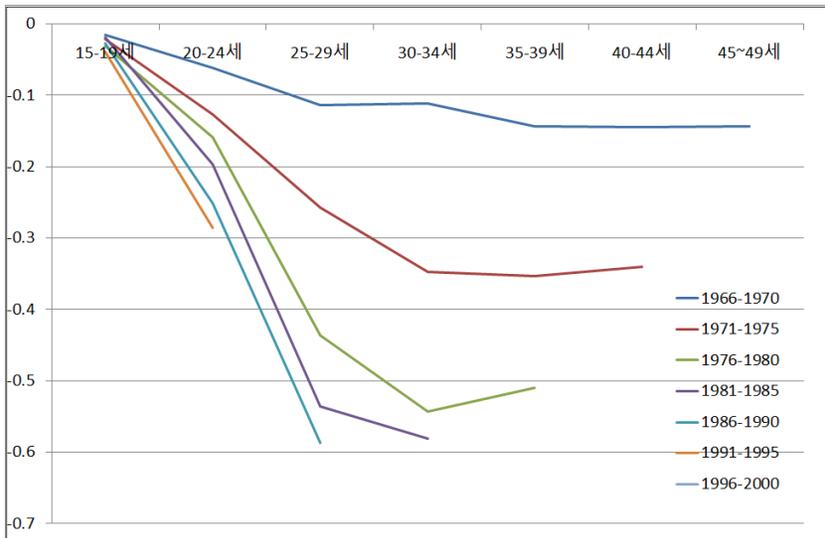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싱가포르는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87명 수준을 보인 1961~1965년 코호트를 준거로 하여 비교하였다. 싱가포르의 출산 수준은 1970년대 코호트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하락하였고 회복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1975년 코호트는 1961~1965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30~34세에서 가장 큰 격차(0.348명)를 보이고 이후에 큰 회복을 보이지 않았다. 1976~1980년 코호트에 와서 격차는 0.543명으로 커졌으며 35~39세에서 0.51명으로 약간 감소하나 그 격차는 여전히 컸다. 그러나 코호트 간에 커지던 출산율 격차는 1980년 이후 코호트부터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

다.11) 1981~1985년 코호트가 30~34세에 이르렀을 때 1961~1965년 코호트와의 격차는 0.581명으로 1976~1980년 코호트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출산 행태는 1980년 코호트 이후 안정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3] 싱가포르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1~1965년 코호트 CCF=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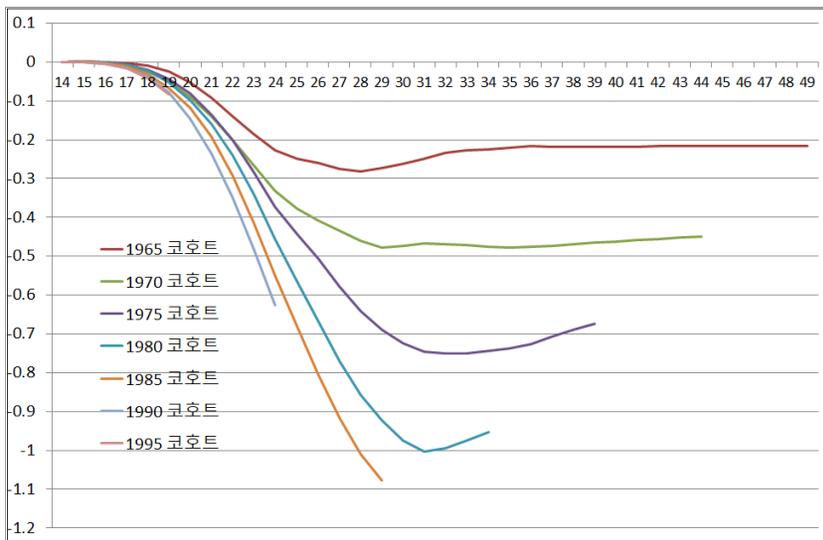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7). Population trends 2017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대만의 준거 코호트는 2.17명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인 1961년 코호트이다. 이후 코호트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61년 코호트와 큰 격차를 보인 연령과 그 차이는 1965년 코호트 28세(0.28명), 1970년 코호트 29세(0.48명), 1975년 코호트 32~33세(0.75명), 1980

11) Frejka, Jones, Sardon(2010)은 1975~1979년 출생 코호트까지만 분석하여 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년 코호트 31세(1명)이다. 즉,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1961년 코호트와의 출산 수준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1965년 코호트를 볼 때 1961년 코호트와의 차이가 35세 이후 0.22명으로 지속되었으며, 1970년 코호트 및 1965년 코호트와 1961년 코호트와의 격차는 0.48명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따라서 일본, 싱가포르와 달리 대만에서는 1980년대 이후 코호트에서도 출산 연기가 지속되었으며 그 회복 정도도 매우 미약하였다.

[그림 2-24] 대만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1년 코호트 CCF=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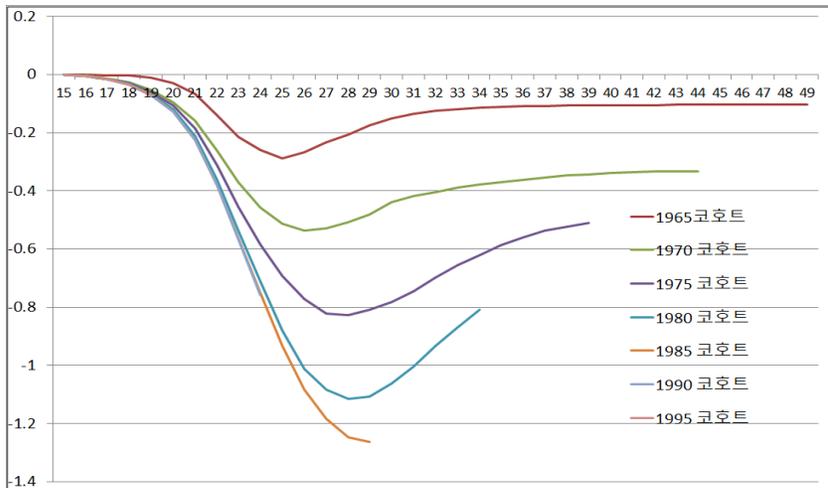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한국은 2.08명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수준을 보인 1960년 코호트와 그 후 연도의 코호트 출산율을 비교하였다. 한국의 분석 결과는 대만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960년 코호트와 그 후 코호트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령과 출산율 차이는 1965년 코호트 25세(0.288명), 1970년 코호트 26세(0.537명), 1975년 코호트 28세(0.828명), 1980년 코호트 28세(1.115명)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 격차는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년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여 최근 코호트 여성들이 자녀 낳는 시점을 연기하고 있으며 높은 연령대에서의 출산 회복도 미약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1980년 코호트 이후 출산 행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95년 코호트까지도 대만과 유사하게 출산 시기가 지속적으로 연기되었고 출산량도 감소하였다.

[그림 2-25] 한국의 누적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비교 분석: 비교 대상 코호트 1960년 코호트 CCF=2.08



자료: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2018)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 제4절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 1. Zeman et al.(2018)의 연구 결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는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코호트 완결출산율뿐만 아니라 출산 진도비도 하락하고 있다. Zeman, Beaujouan, Brzozowska and Sobotka(2018)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출산 진도비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출산 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PPR)는 자녀가 없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을 확률(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자녀 한 명을 낳은 여성이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 자녀 두 명을 낳은 여성이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을 확률(셋째 이상 자녀 출산 진도비)을 말한다. Zeman et al.(2018)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가 출산 진도비의 변화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각각의 출산 진도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분해하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변화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과거 코호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40년 코호트와 1955년 코호트 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코호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55년 출생 코호트와 1970년 출생 코호트 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특히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보인 시기와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시기에 출산 진도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 이하로 떨어진 코호트와 가장 최근 코호트 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러한 격차에 각각의

출산 진도비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동유럽, 중유럽, 서유럽, 북유럽, 독일어권, 남유럽, 유럽 외 영미권, 동아시아의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국가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포함된다. 이 분석을 위하여 출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43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1940년 코호트부터 1965~1971년 코호트까지의 출생아 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Zeman et al.(2018)의 분석 결과는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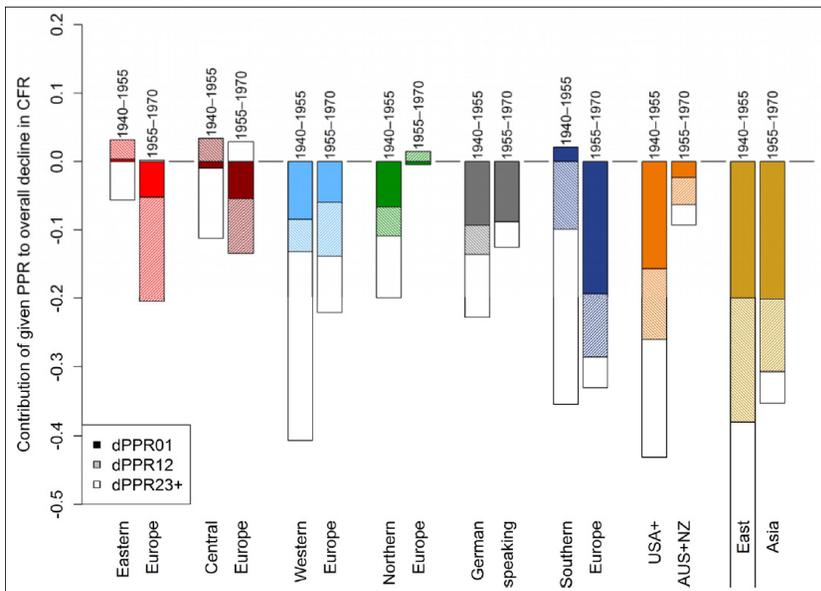
첫째,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 걸쳐 1940년 코호트와 1955년 코호트 사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분 중 3분의 2정도가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진도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55년 출생 코호트와 1970년 출생 코호트 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분의 약 60% 정도는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즉 자녀가 없는 여성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 확률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시아 세 국가에서 과거 세대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셋째 이상을 낳는 여성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세대로 와서의 출산 감소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는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 것, 다시 말해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명 이하로 떨어진 코호트부터 가장 최근 코호트 사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본은 1962년 코호트와 1969년 코호트, 싱가포르는 1964년 코호트와 1966년 코호트 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에는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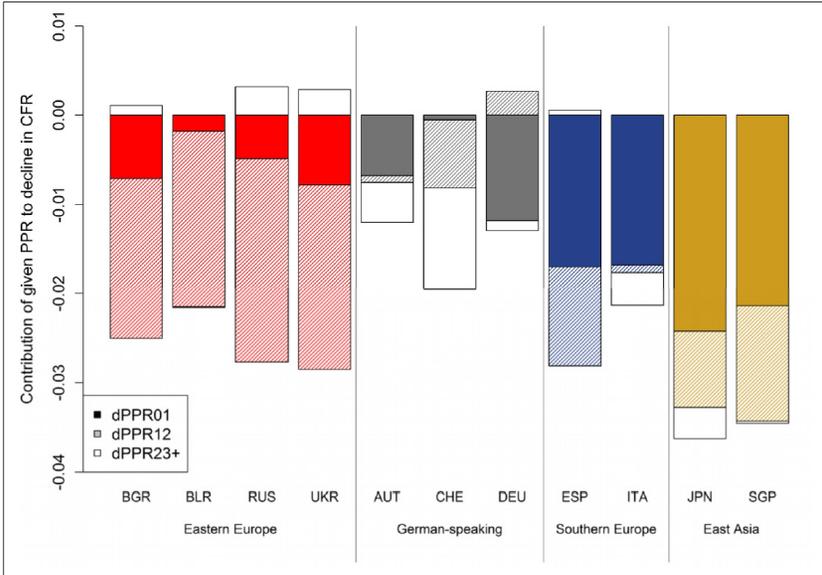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들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는 다자녀를 낳는 여성의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시점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여성들의 증가가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림 2-26] 시기별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결과(Zeman et al., 2017)



자료: Zeman et al.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p. 673.

[그림 2-27]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 이하로 하락한 이후 최근 코호트까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결과(Zeman et al., 2017)



주: 1. BGR(불가리아), BLR(벨라루스), RUS(러시아), AUT(오스트리아), CHE(스위스), DEU(서독), ESP(스페인), ITA(이탈리아), JPN(일본), SGP(싱가포르)

2. 일본은 1962년 코호트와 1969년 코호트, 싱가포르의 1964년 코호트와 1966년 코호트 간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분임.

자료: Zeman et al.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p. 675.

## 2. 한국과 일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 분해 분석

본 절에서는 Zeman et al.(2018)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출산 진도비 변화로 분해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한다. Zeman et al.(2018)은 동아시아 국가 분석에서 한국을 포함하였지만 한국을 별도로 따로 분석하지 않고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동아시아 권역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1.75명 이하로 하락한 시점 이후에 대한 분석도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해서만 수행하였으

며 한국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는 제공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를 활용하여 1941~1945, 1946~1950, 1951~1955, 1956~1960, 1961~1965, 1966~1970, 1971~1975년 코호트 간의 5세 단위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출산 진도비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해하여 그 크기를 비교 분석한다. 이 코호트의 여성들은 해당 센서스 연도에 40~44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거의 출산이 완료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5년 단위로 코호트를 합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더 안정적인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를 계산하기 위함이다. Zeman et al.(2018)이,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코호트와 낮은 코호트 두 집단 간의 차이에 주목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1940년대 코호트부터 가장 최근 연도 코호트인 1970년대 코호트까지 자료를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쳐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출산 진도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Human Fertility Database(HFD)는 일본에 대해 49세에 이르렀을 때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를 1세 단위로 제공하였다. 1953년 코호트부터 1964년 코호트까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각각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9명과 1.69명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일본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시점 이래의 감소량을 출산 진도비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한국의 분석 결과를 일본의 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sup>13)</sup>

12) 1995년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가 출생아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951~1955년 코호트에 대해서는 2000년 센서스를 이용하여 1951~1955년 코호트가 45~49세에 이르렀을 때의 출생아 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13) 한국 자료는 해당 센서스 연도에 40~44세까지 생존한 여성들의 출생아 수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본 자료는 해당 코호트의 출산 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되었다. 일본의 결과는 40세 이전에 사망한 여성들의 출산율에 대한

Zeman et al.(2018)이 제시하는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가 차지하는 부분을 분해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FR^{c2} - CFR^{c1} = \sum \left[ \left( \frac{CFR_i^{c2}}{CFR_i^{c1}} - \frac{CFR_{i+1}^{c2}}{CFR_{i+1}^{c1}} \right) \sum_{j=1} CFR_j^{c1} \right]$$

$$CFR = PPR_{0,1} + PPR_{0,1} * PPR_{1,2} + PPR_{0,1} * PPR_{1,2} * PPR_{2,3} \\ + PPR_{0,1} * PPR_{1,2} * PPR_{2,3} * \frac{PPR_{3,4+}}{1 - PPR_{3,4+}}$$

$$CFR_{fixPPR1+}^{c1,c2} = PPR_{0,1}^{c2} + PPR_{0,1}^{c2} * PPR_{1,2}^{c1} + PPR_{0,1}^{c2} * PPR_{1,2}^{c1} * PPR_{2,3}^{c1} \\ + PPR_{0,1}^{c2} * PPR_{1,2}^{c2} * PPR_{2,3}^{c1} * PPR_{3,4+}^{c1} / (1 - PPR_{3,4+}^{c1})$$

$$CFR_{fixPPR2+}^{c1,c2} = PPR_{0,1}^{c2} + PPR_{0,1}^{c2} * PPR_{1,2}^{c2} + PPR_{0,1}^{c2} * PPR_{1,2}^{c2} * PPR_{2,3}^{c1} \\ + PPR_{0,1}^{c2} * PPR_{1,2}^{c2} * PPR_{2,3}^{c1} * PPR_{3,4+}^{c1} / (1 - PPR_{3,4+}^{c1})$$

$$dPPR_{0,1}^{c1,c2} = CFR_{fixPPR1+}^{c1,c2} - CFR^{c1}$$

$$dPPR_{1,2}^{c1,c2} = CFR_{fixPPR2+}^{c1,c2} - CFR_{fixPPR1+}^{c1,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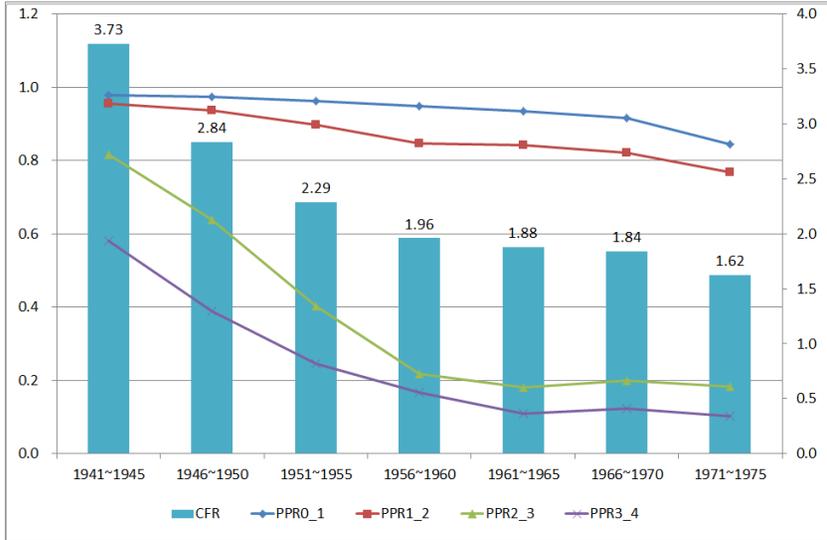
$$dPPR_{2,3+}^{c1,c2} = CFR^{c2} - CFR_{fixPPR2+}^{c1,c2}$$

---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결과에는 40세 이전에 사망한 여성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코호트의 사망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 자료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0세 이전의 사망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가임기 여성들의 사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1941~1945년 코호트부터 1971~1975년 코호트까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41~1945년 코호트에서 3.7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46~1950년 코호트에서 2.84명, 1951~1955년 코호트에서 2.29명으로 하락하였다. 1956~1960년 코호트부터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1~1975년 코호트는 1.62명 수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보였다. 출산 진도비는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가 1940년대 코호트부터 1960년대 코호트 기간에 급속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이후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1950년 출생 코호트까지 1에 가까운 안정적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1956~1960년 코호트에서 하락 폭이 커졌으며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다시 더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1950년대 코호트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마찬가지로 1971~1975년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28]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 변화(1941 출생 코호트~1975 출생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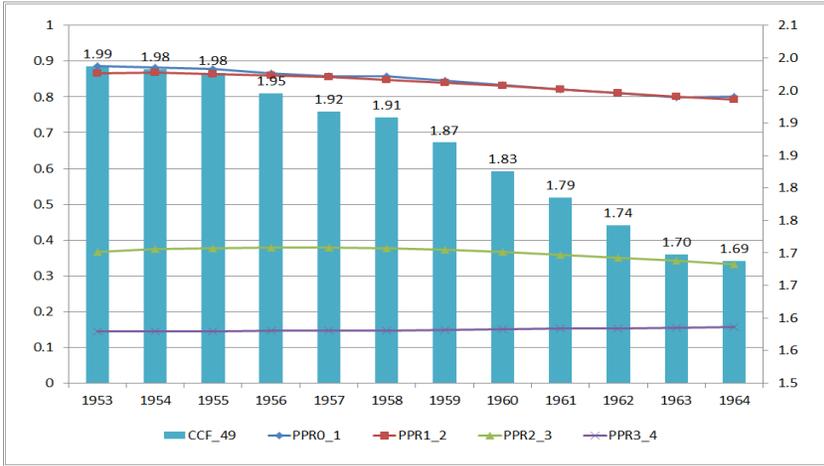


주: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는 여성이 40~44세에 이르렀을 때이며 1951~1955 코호트는 45~49세에 이르렀을 때임.

자료: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www.kosis.kr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일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53년 코호트의 약 2명에서 점차 하락하여 1964년 코호트에 이르러 약 1.69명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출산 진도비가 특히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에서 급속히 하락하였고,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도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에 일본의 출산 진도비는 1953년 코호트부터 1964년 코호트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 수준은 거의 유사하며,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보다 낮다.

[그림 2-29] 일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과 출산 진도비 변화(1953 출생 코호트~1964 출생 코호트)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출산 진도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Zeman et al.(2018)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았던 기간에는 두 자녀를 가진 여성 중 세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의 감소가 코호트 완결출산율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 출산율 하락을 주도한 집단은 무자녀에서 한 자녀로 이동하지 않는 집단, 즉 첫째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Zeman et al.(2018)이 지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Zeman et al.(2018)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유지하였던 시기와 그 아래로 하락한 시기로 구분하여 두 시기에 출산 진도비가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1940년대 코호트부터 1970년대 코호트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출산 진도비가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음이 나타났다. 즉, 과거 코호트에서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대부분의 영향을 주었던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 변화는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점차 감소하자 그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 대신 첫째 자녀를 낳은 여성 중 둘째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이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고, 특히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서부터 첫째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이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된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6~1970년 코호트에서 1971~1975년 코호트까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에는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의 변화가 67.7%,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가 25.1%,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가 7.2% 영향을 주었다.

〈표 2-1〉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서의 출산 진도비 변화 기여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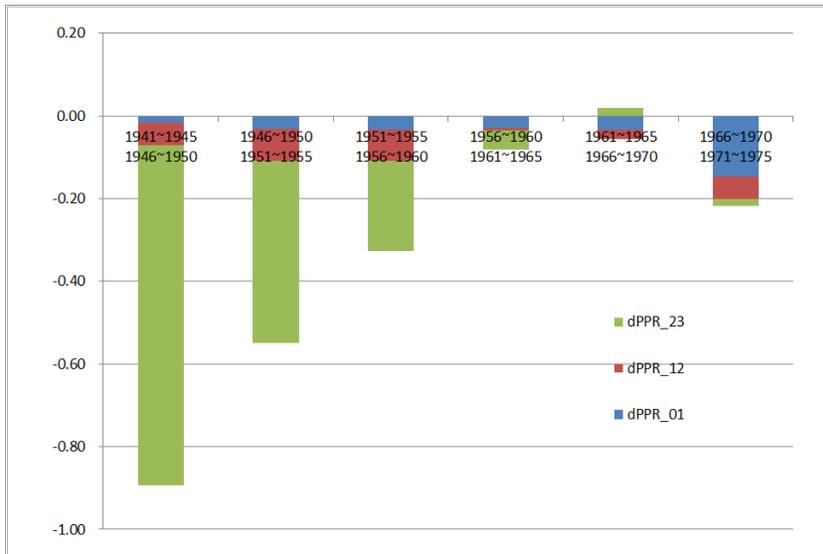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dPPR_01	dPPR_12	dPPR_23	코호트 완결출산율			
				기준 코호트	비교 코호트	변화량	
한국	1941~1945에서 1946~1950까지	-0.02(1.9)	-0.05(5.9)	-0.82(92.2)	3.73	2.84	-0.89(100.0)
	1946~1950에서 1951~1955까지	-0.03(5.9)	-0.08(14.0)	-0.44(80.1)	2.84	2.29	-0.55(100.0)
	1951~1955에서 1956~1960까지	-0.03(10.4)	-0.07(22.8)	-0.22(66.8)	2.29	1.96	-0.33(100.0)
	1956~1960에서 1961~1965까지	-0.03(36.3)	-0.01(6.6)	-0.05(57.1)	1.96	1.88	-0.08(100.0)
	1961~1965에서 1966~1970까지	-0.03(88.3)	-0.02(60.5)	0.02(-48.8)	1.88	1.84	-0.04(100.0)
	1966~1970에서 1971~1975까지	-0.15(67.7)	-0.05(25.1)	-0.02(7.2)	1.84	1.62	-0.22(100.0)

주: dPPR\_01은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임.

자료: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www.kosis.kr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그림 2-30]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서의 출산 진도비 변화 기여도 분해



주: dPPR\_01은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임.

자료: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www.kosis.kr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에서 두 번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1941~1950년 코호트 사이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는 셋째아 출산의 급속한 감소에 의해 야기되었다. 1941~1950년 코호트가 가임기 끝에 이른 시기는 1960~1980년대이며, 이 기간에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추진된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셋째아 출산이 급속하게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화는 1966~1975년 코호트 사이의 변화이다. 이 기간에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은 첫째 자녀 출산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최근 들어 만혼화 혹은 비혼화 현상이 코호트 완결출산율 하락을 주도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혼화 혹은 무자녀화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코호트 집 단별로 자녀 출산 여부(출산/비출산)와 결혼 경험 유무(없음/있음)에 대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1941~1945년 코호트부터 1971~1975년 코호트까지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거의 없었다.<sup>14)</sup> 40~44세 이르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1941~1945년 코호트가 0.7%, 1946~1950년 코호트가 1.1%, 1951~1955년 코호트가 1.6%, 1956~1960년 코호트가 2.5%, 1961~1965년 코호트가 3.5%, 1966~1970년 코호트가 6.0%, 1971~1975년 코호트가 10.1%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한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 40~44세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 경험 여성 중 40~44세 이르기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1941~1945년 코호트가 1.5%, 1946~1950년 코호트가 1.6%, 1951~1955년 코호트가 2.2%, 1956~1960년 코호트가 2.8%, 1961~1965년 코호트가 3.2%, 1966~1970년 코호트가 2.5%, 1971~1975년 코호트가 6.2%로 나타나 특히 1971~1975년 코호트에 와서 이러한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결혼 경험은 현재의 혼인 상태가 유배우, 이혼, 사별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74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표 2-2〉 각 출생 코호트의 40~44세 결혼 경험 유무 및 자녀 출생 여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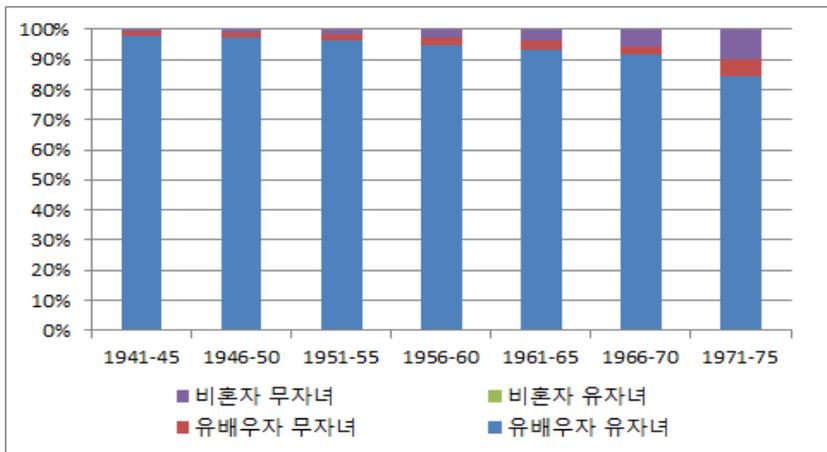
(단위: 명, %)

코호트	자녀 출산 여부	결혼 경험		계
		없음	있음	
1971~1975년 코호트	출산	0 [0.0] (0.0)	31,294 [93.8] (100.0)	31,294 [84.3] (100.0)
	비출산	3,740 [100.0] (64.4)	2,068 [6.2] (35.6)	5,808 [15.7] (100.0)
	계	3,740 [100.0] (10.1)	33,362 [100.0] (89.9)	37,102 [100.0] (100.0)
1966~1970년 코호트	출산	20 [0.8] (0.1)	36,049 [97.5] (99.9)	36,069 [91.7] (100.0)
	비출산	2,335 [99.2] (71.3)	940 [2.5] (28.7)	3,275 [8.3] (100.0)
	계	2,355 [100.0] (6.0)	36,989 [100.0] (94.0)	39,344 [100.0] (100.0)
1961~1965년 코호트	출산	0 [0.0] (0.0)	36,164 [96.8] (100.0)	36,164 [93.4] (100.0)
	비출산	1,368 [100.0] (53.2)	1,202 [3.2] (46.8)	2,570 [6.6] (100.0)
	계	1,368 [100.0] (3.5)	37,366 [100.0] (96.5)	38,734 [100.0] (100.0)
1956~1960년 코호트	출산	0 [0.0] (0.0)	37,310 [97.2] (100.0)	37,310 [94.8] (100.0)
	비출산	965 [100.0] (47.1)	1,086 [2.8] (52.9)	2,051 [5.2] (100.0)
	계	965 [100.0] (2.5)	38,396 [100.0] (97.5)	39,361 [100.0] (100.0)
1951~1955년 코호트	출산	0 [0.0] (0.0)	27,826 [97.8] (100.0)	27,826 [96.2] (100.0)
	비출산	467 [100.0] (42.7)	626 [2.2] (57.3)	1,093 [3.8] (100.0)
	계	467 [100.0] (1.6)	28,452 [100.0] (98.4)	28,919 [100.0] (100.0)

코호트	자녀 출산 여부	결혼 경험		계
		없음	있음	
1946~1950 코호트	출산	0 [0.0] (0.0)	23,310 [98.4] (100.0)	23,310 [97.3] (100.0)
	비출산	262 [100.0] (40.9)	379 [1.6] (59.1)	641 [2.7] (100.0)
	계	262 [100.0] (1.1)	23,689 [100.0] (98.9)	23,951 [100.0] (100.0)
1941~1945 코호트	출산	0 [0.0] (0.0)	21,082 [98.5] (100.0)	21,082 [97.8] (100.0)
	비출산	152 [100.0] (31.7)	327 [1.5] (68.3)	479 [2.2] (100.0)
	계	152 [100.0] (0.7)	21,409 [100.0] (99.3)	21,561 [100.0] (100.0)

주: 1. 1951~1955년 코호트는 1995년 인구센서스 2% 자료에 출생아 수 정보가 없어 200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45~49세에서의 혼인경험과 출생아 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2. [대괄호]의 퍼센트는 결혼 경험의 비율이며(열), (소괄호)의 퍼센트는 출산 여부의 비율인(행).  
 자료: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www.kosis.kr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그림 2-31] 각 출생 코호트의 40~44세 결혼 경험 유무별 자녀 출생 여부 빈도



주: 1951~1955년 코호트는 1995년 인구센서스 2% 자료에 출생아 수 정보가 없어 200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45~49세에서의 혼인경험과 출생아 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www.kosis.kr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기간 합계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 혹은 그 아래를 보이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출산 연기 그리고 이후 연령에서의 출산 회복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들 국가들의 향후 출산율 추이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모두 기간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회복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에 반등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간 합계출산율의 일시적인 하락은 여성들의 출산 연기에 따른 것이며 여성들이 연기한 출산을 이후 연령에서 회복함으로써 기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기된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출산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산율 하락이 시작된 일본은 최근 코호트 여성들에서 출산을 더 미루거나 출산 수준이 더 하락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출산 연령이 높은 연령으로 미루어져 있고 출산 수준 자체도 낮아서 출산 행태가 안정되더라도 과거 코호트 여성이 보인 출산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시작된 한국과 대만은 최근 코호트 여성들이 여전히 출산 시기를 연기하고 있으며 연

기된 출산에서 출산 수준도 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미 낮아진 출산 수준으로 인하여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 정도를 출산 진도비 변화로 분해하여 어떤 순위별 출산 행태의 변화가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를 주도하였는가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사항과 일치하였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유지하였을 때 출산율 하락은 주로 셋째 자녀를 낳는 여성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한 후 출산율 감소를 주도한 것은 첫째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의 증가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에서 두 번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시사해 준다. 첫 번째 변화는 1946~1950년 코호트에서 1951~1955년 코호트 사이의 변화로서, 과거 출산 억제 정책에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강하게 추진된 결과,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출산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주도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1966~1970년 코호트에서 1971~1975년 코호트 사이의 변화로서, 최근 들어 비혼화 혹은 무자녀화 현상에 따라 첫째아를 낳지 않는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출산을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기한 출산을 이후의 연령에서 회복하지 못하여 가임기 전반에 걸쳐 출산 수준 자체가 하락하였다. 둘째, 이미 낮아진 코호트 완결출산율로 인하여 향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들어 한국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은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의 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의 출산율 하

락은 비혼자의 증가 그리고 혼인한 부부 중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의 증가가 주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구 집단에 대해 특별히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제3절 연구 방법론

제4절 기술 분석 결과: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제5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제6절 소결



# 3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관련 << 사회적 배경 분석<sup>15)</sup>

### 제1절 서론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국가와 공동체의 사회 경제의 지배 이념이자 원리로 삼는다. 가족주의 가치는 자녀 출산을 통한 세대 재생산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뒤 급속한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의 필수 조건으로 추진했던 가족계획은 소자녀 핵가족에 대한 선호와 규범을 공고하게 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후발 주자 국가는 복지국가 발전 단계가 일정 궤도 이상으로 진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후기 산업 사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저출산,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경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14).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가족 지출의 확대를 통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2명 내외의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고용과 출산의 갈등을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부모 휴가 정책 등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15) 본 장은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가 집필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가 추진해 온 가족 정책을 본보기로 삼았다. 출산을 회복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산율 회복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윤정 외(2014)는 유럽 국가들이 가족지원제도를 포함한 복지국가 체제가 자리 잡은 후에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보였던 것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성숙한 복지국가 단계에서 들이닥친 인구 구조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Gauthier(2016)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대응이 실제 개인이 인식하는 자녀 양육 비용과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요인을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유사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으로는 미성숙한 복지국가 이외에도 여성 노동시장 참여 실태, 자녀 양육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가치, 성 역할을 둘러싼 가치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와 유사한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 고용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평등 의식의 지체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엄마에게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체계와 실천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어떠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닌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초점을 맞춰 다른 국가들과 출산의 사회적 배경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4개국의 차이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에 공통적으로 작

동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동아시아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저출산 원인의 다양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에 결혼 밖의 출산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만혼과 비혼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은 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Pacific Asia 국가들에서도 만혼과 비혼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거가 보편화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비자발적 비혼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차이는, 유럽에서는 만혼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동거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25~34세 비혼(single) 비율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50%를 상회하지만 현재 동거 비율을 ‘비혼’ 범주에서 제외한 ‘유효 비혼(effectively single)’ 비율은 유럽 전체 국가에서 55%에서 33%로 하락한다. 과거에 동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3%로 다시 하락한다. 이 수치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서 ‘비혼’으로 집계되는 인구 비율보다 훨씬 낮다(Jones, 2007).

〈표 3-1〉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비혼’과 ‘한 번도 동거한 적 없는 사람’ 비교, 25-34세 남녀, 2000년

(단위: %)

유럽	비혼	비혼, 현재 비동거	비혼, 동거한 적 없음	아시아	비혼	도시 거주 비혼
Sweden	72	33	13	Japan	49.1	
Denmark	63	31	14	South Korea	37.6	47.7
Finland	57	28	17	Hong Kong	51.6	51.6
Great Britain	43	32	16	Taiwan	42.3 <sup>a</sup>	
Ireland	55	39	32	Singapore	37.7	37.7
France	61	30	15	<i>Singapore Chinese</i>	40.7	40.7
Belgium	41	26	20	<i>Singapore Malays</i>	27.7	27.7
Luxembourg	35	20	11	<i>Singapore Indians</i>	27.1	27.1
Netherlands	53	31	23	Malaysia	30.8	35.8
East Germany	54	32	17	<i>Malaysian Chinese</i>	42.0	44.8
West Germany	50	25	19	<i>Malaysian Malays</i>	24.9	27.8
Austria	48	26	13	<i>Malaysian Indians</i>	31.8	34.7
Spain	56	45	41	Thailand	27.5	44.4
Portugal	39	34	32	China	11	
Italy	66	59	55	Philippines	33.5 <sup>a</sup>	38.4 <sup>a</sup>
Greece	44	34	29	Indonesia	17.9	23.7
				Myanmar	33.1	

주: <sup>a</sup>) 대만의 비혼은 동거를 제외하며 동거는 결혼에 포함됨. 필리핀의 비혼은 동거를 포함함.  
 자료: Jones.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 457.

둘째, 동아시아 국가의 결혼에 관한 관념이 비혼과 저출산의 원인이다. “결혼은 패키지(marriage is a package)”라고 하는 결혼 관련 관념은 동아시아에서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출산, 양육, 다른 가족에 대한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 출산 의향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의 정상적 생활 방식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자녀 출산 의향 없는 결혼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결정이 결혼 패키지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선택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는 서구와 달리 확대가족 동거와 강한 가족유대가 특징이다. 또한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이 공고하다. 가부장적 부계 중심의

가족은 여성을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묶어 놓는 주된 원인이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은 유교 전통을 이어받은 강한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상 숭배와 효는 유교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작동하는 가족의 핵심 가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양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유교 전통은 동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원리이다(Jones, 2007).

Bumpass, Rindfuss, Choe, Tsuya(2009)는 저출산을 설명하는 데 '패키지로서의 결혼' 이론을 제기했다. 동아시아에서 결혼은 다양한 차원의 가족에 대한 기대와 의무가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과 남성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남녀일수록 그러한 기대와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순히 결혼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여성에게 지워진 역할 패키지를 지연하는 것이다. 역할 패키지에 포함되는 것은 자녀 돌봄, 가사 노동, 시부모와의 동거와 시부모 부양 등이다. 서구에서 결혼의 경제적 기초의 변화가 남녀의 가족 경제에 대한 유사한 역할과 평등한 가사노동 부담을 수반했다면, 동아시아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기대, 가사노동 전담, 강도 높은 엄마 노릇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강조도 고학력 여성들의 만혼과 비혼, 자녀 출산 회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여성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모 세대와의 동거 형태(living arrangements) 변화도 만혼, 비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 간 동거가 만혼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은 두 가지이다.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 한편 부모의 노후를 책임

져야 한다는 의식은 여성의 결혼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과 한국 등에서 남아 선호 사상의 약화, 즉 한 명을 낳는다면 아들보다 딸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도, 결혼과 가족을 통한 노후 부양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크고 금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딸이 선호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부계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과 가족 형성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 양육의 비용 증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로 인한 개인적인 기회비용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초래하는 다양한 차원의 비용이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양질의(high quality)’ 자녀를 길러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엄마에게 부과되는 역할이 아빠에게 비해 크다. 자녀 양육의 비용은 남녀가 비대칭적으로 떠안고 있다. Tan, Morgan, Zagheni(2016)는 동아시아와 남유럽에서의 가장 낮은 출산율은 육아 부담을 거의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낮은 성평등 의식 수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적 비용이 크다. Anderson and Kohler(2015)는 교육에 대한 높은 가계 지출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5년 일본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를 사교육비에 지출하지만 유럽은 학비와 다른 교육 기관에 대한 가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 좋은 대학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교육과 노동시장 제도는 일본과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한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취업 기회의 상실과 실직 위험은 자녀 양육에 따르는 다른 차원의 비용이다. Westley, Choe, Retherford(2010)는 고용 불안, 일과 가족 책임 간의 갈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과 정책적 지원의 부족은 기혼 부부의 추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 탈규제와 고실업이 결혼과 출산 지연과 회피를 야기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실직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와 참여 확대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는 성 역할을 둘러싼 남녀의 긴장과 갈등이 낮은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다. McDonald(2006)는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와 가족 안에서 여성에 대한 기대와 의무 간의 긴장과 갈등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과 성평등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였다. 이 이론은 주로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개진되었으나, 그는 동아시아 국가에도 성평등 이론이 저출산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Jones(2007)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기회의 차이와 여성의 교육 수준의 증가가 비혼율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한다.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남성은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형성의 기회비용이 고학력 여성에게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고학력과 비혼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서 남성의 저학력과 비혼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할 만한 남성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가치관의 격차(values gap)' 때문이다. 고학력 여성은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반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공유에 대한 남성의 가치관은 더디게 변하고 있다. 결혼 시장에 남성이 없다가보다는 성 역할에 대한 가치와 기대

를 공유할 수 있는 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 제3절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 연구를 통해 비교 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의 결합원인 조건을 규명한다. 원인 조건으로 검증할 변수는 성 역할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출산-결혼 패키지 관념, 남녀 근로시간 격차, 여성 고용률이다.

첫째, 성 역할 관념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김영미, 계봉오, 2015).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의 기대와 욕구에 못 미치는 남성들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 고정관념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높은 성평등 의식으로 설명되곤 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되는 낮은 성평등 의식은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둘째, 자녀 가치와 자녀 양육 부담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조건이나 기존 실증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전통 사회에 비해 후기 산업 사회에서 자녀 가치는 하락한 데 비해 자녀 양육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자녀 가치와 양육 부담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는 국가 간 출산율의 차이의 주요인일 것이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출산을 회피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자녀 가치가 크면 출산에 긍정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셋째, 결혼과 출산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고학력화와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출산 연령 상승과 출산 연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은 순차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어 있지만, 서

구에서는 비혼이나 동거 가족의 출산에 수용적이고 그러한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넷째, 남녀 노동시장 참여 방식은 출산율의 원인 조건이다. De Laat and Sevilla-Sanz(2011)은 한 국가 내에서 고용률과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을 비교하면 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퍼즐에 대해, 급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한 남유럽 국가의 부상이 이러한 양(+)의 관계를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고용률과 출산율의 음(-)의 관계와 비교 국가적 차원에서 그 둘의 양(+)의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높은 여성 고용률 자체가 높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고용률이 다른 어떤 조건과 결합되어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남녀의 노동시간 격차를 남성 가사노동 참여와 여성 가사노동 부담 완화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남녀의 노동시간 격차가 고용률과 출산율을 매개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남녀 노동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성은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은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간 조절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할 때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 조건들이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출산율을 설명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 조건들의 결합을 규명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저출산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 1.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2012년 가족 및 변화하는 성 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을 이용했다. ISSP는 총 40개 국가들의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구축하여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화한 것이다. 표본 크기는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별로 대략 1000~2500개이며 중국은 약 6000여 개로 예외적으로 크다. ISSP를 통해 구축할 수 없는 출산율 변수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를 통해 구했다. 동구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던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19개국(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 영국)을 분석했다. 출산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 우리나라와 종종 비교되는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은 ISSP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변수인 자녀 가치 관련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표 3-2>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를 제시했다. ISSP 자료의 개인 단위 자료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국가 단위 변수를 구축했다. 15-49세의 성인 남녀 표본에 한정하여 분석했다.

〈표 3-2〉 표본 수, 15-49세

(단위: 명)

국가	전체	여성	남성
AU-Australia	626	387	239
AT-Austria	638	355	283
CA-Canada	261	152	109
CL-Chile	830	503	327
CN-China	3,219	1,608	1,611
TW-Taiwan	1,244	571	673
CZ-Czech Republic	1,017	571	446
DK-Denmark	783	394	389
FI-Finland	606	341	265
FR-France	1,109	753	356
HU-Hungary	550	272	278
IS-Iceland	688	347	341
IE-Ireland	546	398	148
IL-Israel	708	399	309
JP-Japan	586	324	262
KR-Korea(South)	672	356	316
LV-Latvia	580	333	247
MX-Mexico	1,084	566	518
NL-Netherlands	476	294	182
NO-Norway	745	409	336
PL-Poland	578	290	288
SK-Slovakia	466	244	222
SI-Slovenia	487	252	235
SE-Sweden	468	270	198
CH-Switzerland	641	315	326
TR-Turkey	1,131	628	503
US-United States	732	396	336
BE-Belgium	1,073	593	480
DE-Germany	876	466	410
PT-Portugal	518	263	255
GB-Great Britain	424	249	175
Total	24,362	13,299	11,063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원인 조건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 조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은 Ragin (2000)이 발전시킨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기법이다. 전통적인 질적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화가 어렵고, 다수 사례를 사용하는 양적 방법은 일반화가 가능한 반면에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이러한 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조화시키고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론은 사례중심(case-oriented)의 질적 방법과 변수중심(variable-oriented)의 양적 방법을 결합하여, 회귀분석이 다루지 못하는 중간사례(intermediate-N)들을 다룰 수 있다.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은 각각 소수 사례(small-N)와 다수 사례(large-N)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OECD 19개국이나 아시아 14개국 등 중간 규모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드물다. 질적 방법에서 20개를 넘어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양적 방법에서 20개는 표본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이승윤, 2014).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 방법의 내용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이승윤, 2014: 민기채, 2014). 첫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 방법이 양적 분석과 다른 점은, 결합된 요인들의 인과관계(conjunctural causation)의 복잡성을 분석할 때 연구자가 더 많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중심 분석은 한 사례의 총체를 이루는 개개 요소들을 전체 그림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사례의 맥락성을 중시한다.

둘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는 사례를 묘사하거나 정의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허용한다. 단순한 집합이론에서 하나의 사례는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만 갖게 되는 반면, 퍼지셋 논리는 소속 정도(membership)의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

금매기기(calibration)는 질적 개념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눈금매기기를 통해 변수중심 연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집합 이론을 활용하여 사례중심 연구의 속성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의 자녀 양육 부담 정도에 따라 국가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경우 연구자는 질적 지식을 활용하여 퍼지 점수 눈금매기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질적 개념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 방법에서 눈금매기기(calibration), 즉 집합의 소속 정도(membership) 결정은 연구자의 개념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원인 조건을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을 일정하다고 간주하고 하나의 원인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반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은 사례 내 각각의 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joint causal system)에 초점을 둔다(이승윤, 2014). 예를 들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명 요인을 가설적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 각각의 조건이 독립변수로서 출산율(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결합된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넷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는 사회과학의 집합이론적(set theoretic) 본질을 반영함으로써 이론과 경험적 자료의 분석이 일치될 수 있게 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의 활용은 어떤 원인 조건들의 집합적 조합이 결과 조건의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연구 방법은 동아시아 국가 저출산 원인의 특수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도출하려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 분류를 선형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가설에 기반을 둔 원인 조건의 결합 배열의 차이를 국가 비교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저출산 원인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밝힐 수 있다.

#### 제4절 기술 분석 결과: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결합요인의 원인 조건의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ISSP 조사에 포함된 변수들을 분석했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숫자가 클수록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1)’, ‘다소 찬성(2)’, ‘찬성도 반대도 아님(3)’, ‘다소 반대(4)’, ‘매우 반대(5)’로 응답하도록 했다. <표 3-3>의 (1)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긍정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반대로 조정하였다.

<표 3-3>은 여성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업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즉, 여성이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데 동의하는 편인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이 여성의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반대하는 의견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반대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중국·대만과 한국·일본이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2.39), 대만(2.48)은 한국(3.17), 일본(3.26)보다 이 항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국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데에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였다. 여권이 높다고 알려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대만보다도 더 여성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대체로 여성의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표 3-3〉 여성 취업이 미취학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국가	(1) 자녀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녀 어려움	(3) 가정생활 어려움	(4) 자녀 양육 부담	(5) 전업주부 가치
AU-Australia	3.75	3.50	3.47	3.55	2.68
AT-Austria	3.98	2.67	2.82	3.33	3.08
CA-Canada	4.09	3.60	3.69	3.71	3.03
CL-Chile	3.30	2.49	2.45	2.74	2.83
CN-China	3.53	2.69	2.97	2.39	2.68
TW-Taiwan	3.88	2.97	3.69	2.48	2.17
CZ-Czech Republic	3.78	3.25	3.22	2.66	3.14
DK-Denmark	4.36	4.06	4.26	3.96	3.32
FI-Finland	4.05	3.89	4.13	3.34	3.06
FR-France	4.29	3.64	3.55	3.35	3.37
HU-Hungary	3.71	2.70	2.82	2.45	2.85
IS-Iceland	4.32	3.92	3.93	3.74	2.76
IE-Ireland	3.87	3.50	3.56	3.52	2.82
IL-Israel	3.31	2.86	2.96	2.93	3.56
JP-Japan	3.99	3.62	3.43	3.26	2.06
KR-Korea(South)	3.77	2.36	2.56	3.17	1.86
LV-Latvia	3.76	2.56	2.73	2.64	2.69
MX-Mexico	3.45	2.22	2.23	2.57	2.69
NL-Netherlands	3.58	3.50	3.33	4.00	3.48
NO-Norway	3.84	3.94	3.67	3.82	3.46
PL-Poland	3.68	3.11	3.38	3.10	2.84
SK-Slovakia	4.19	3.22	3.02	2.24	2.98
SI-Slovenia	4.26	3.54	3.29	3.23	3.20
SE-Sweden	4.19	4.07	4.15	3.87	3.37
CH-Switzerland	3.99	3.14	3.03	3.19	2.73
TR-Turkey	2.91	2.41	2.80	2.23	2.69
US-United States	3.93	2.82	3.54	3.16	2.54
BE-Belgium	4.05	3.49	3.46	3.46	3.10
DE-Germany	4.27	3.54	3.56	3.80	3.45
PT-Portugal	4.01	2.75	3.18	3.15	3.24
GB-Great Britain	4.04	3.37	3.53	3.42	2.76

주: (1) 취업한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5)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남녀 경제활동에 관한 인식은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숫자가 클수록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1)’, ‘다소 찬성(2)’, ‘찬성도 반대도 아님(3)’, ‘다소 반대(4)’, ‘매우 반대(5)’로 응답하도록 했다. (1)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긍정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반대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클수록 성 역할 분업에 대하여 강한 반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수치가 낮다. 즉,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데에 다른 국가들보다 동의하는 개인의 비율이 더 높다. 중국은 성별 분업 관념에 대해 2.85, 즉 다소 찬성에 가까운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과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지하는 이념을 가졌던 사회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3점대로 나타나 성별 분업에 ‘다소 반대’하는 편이지만, 스웨덴(4.52), 노르웨이(4.33), 덴마크(4.54)에 비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성별 분업 의식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3-4〉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국가	(1) 가계 소득 동등 기여	(2) 성별 분업
AU-Australia	3.59	3.89
AT-Austria	3.91	3.39
CA-Canada	3.70	4.14
CL-Chile	4.02	3.46
CN-China	3.97	2.85
TW-Taiwan	3.87	3.40
CZ-Czech Republic	4.38	2.80
DK-Denmark	4.33	4.54
FI-Finland	4.04	4.09
FR-France	4.27	4.42
HU-Hungary	4.01	2.75
IS-Iceland	4.17	4.34
IE-Ireland	3.75	3.97
IL-Israel	4.25	3.63
JP-Japan	3.28	3.79
KR-Korea(South)	3.72	3.46
LV-Latvia	4.07	2.59
MX-Mexico	4.18	2.84
NL-Netherlands	3.81	4.05
NO-Norway	4.21	4.33
PL-Poland	3.89	3.13
SK-Slovakia	4.26	2.66
SI-Slovenia	4.26	3.90
SE-Sweden	4.47	4.52
CH-Switzerland	3.74	3.73
TR-Turkey	3.75	2.81
US-United States	3.79	3.64
BE-Belgium	4.08	4.06
DE-Germany	4.04	4.04
PT-Portugal	4.49	3.84
GB-Great Britain	3.78	3.94

주: (1) 남자 여자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2)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5〉는 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 방식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와 ‘막내가 학교 들어간 후’에 (1) 전일제로 일해야 한다, (2) 시간제로 일해야 한다, (3) 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차이’ 값이 클수록 출산·양육기 여성이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은 평균 2점대로 나타났는데, 시간제로 일하거나 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2.22)과 대만(2.12)에 비해 일본(2.56)과 한국(2.36)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여성이 일하고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스웨덴(1.67), 덴마크(1.56), 핀란드(1.73), 노르웨이(1.66)는 여성이 전일제나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았다.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중국(1.50), 대만(1.53), 일본(1.91), 한국(1.79)으로 중국과 대만에서보다 일본과 한국에서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 스웨덴(1.31), 핀란드(1.29), 노르웨이(1.26), 덴마크(1.20)에서는 여성이 전일제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미취학 자녀일 때 시간제나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높고,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전일제나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았다. 이렇게 여성이 자녀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조정하는 방식은 북유럽 국가보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차이’ 값을 통해 판단하건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때와 취학 상태일 때 노동시장 참여 인식의 변화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여성의 취업 형태

국가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	차이
AU-Australia	2.41	1.67	0.73
AT-Austria	2.50	1.81	0.70
CA-Canada	2.12	1.49	0.63
CL-Chile	2.19	1.90	0.29
CN-China	2.22	1.50	0.72
TW-Taiwan	2.12	1.53	0.59
CZ-Czech Republic	2.19	1.68	0.51
DK-Denmark	1.56	1.20	0.36
FI-Finland	1.73	1.29	0.45
FR-France	2.05	1.39	0.66
HU-Hungary	2.14	1.68	0.46
IS-Iceland	1.61	1.31	0.29
IE-Ireland	2.12	1.54	0.58
IL-Israel	1.91	1.48	0.42
JP-Japan	2.56	1.91	0.64
KR-Korea(South)	2.36	1.79	0.58
LV-Latvia	2.32	1.63	0.69
MX-Mexico	2.31	2.17	0.14
NL-Netherlands	2.19	1.75	0.44
NO-Norway	1.66	1.26	0.40
PL-Poland	2.35	1.48	0.87
SK-Slovakia	2.10	1.47	0.63
SI-Slovenia	1.80	1.20	0.60
ES-Spain	2.01	1.41	0.60
SE-Sweden	1.67	1.31	0.36
CH-Switzerland	2.16	1.92	0.25
TR-Turkey	2.49	2.20	0.29
US-United States	2.08	1.45	0.64
BE-Belgium	1.93	1.47	0.46
DE-Germany	2.04	1.67	0.37
PT-Portugal	1.80	1.24	0.56
GB-Great Britain	2.30	1.58	0.71

주: 1-전일제로 일해야 한다, 2-시간제로 일해야 한다, 3-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 평균치가 높을수록 전일제로 일하기보다는 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함.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6〉은 결혼과 출산의 강한 연계성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나타낸다. 숫자가 클수록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은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1)’, ‘다소 찬성(2)’, ‘찬성도 반대도 아님(3)’, ‘다소 반대(4)’, ‘매우 반대(5)’로 응답하도록 했다. (2)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긍정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반대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클수록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상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다. 중국(2.04), 대만(2.61), 일본(2.16), 한국(2.08)은 다른 국가들보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소 많았다. 스웨덴(3.64), 노르웨이(3.50), 핀란드(3.38), 덴마크(3.58) 등 북유럽 국가는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도 반대도 아님’과 ‘다소 반대’ 사이에 놓여 있다. “한부모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2.48)을 제외하고 한국(3.05), 일본(2.96), 대만(3.49)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아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한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나 한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출산·양육과 자녀와 가족 형태

국가	(1)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2) 한부모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
AU-Australia	3.15	3.29
AT-Austria	3.19	3.16
CA-Canada	3.11	3.33
CL-Chile	3.40	3.58
CN-China	2.04	2.48
TW-Taiwan	2.61	3.49
CZ-Czech Republic	2.66	3.34
DK-Denmark	3.58	3.71
FI-Finland	3.38	3.12
FR-France	3.88	2.99
HU-Hungary	3.20	-
IS-Iceland	3.48	3.78
IE-Ireland	3.37	3.39
IL-Israel	2.30	2.70
JP-Japan	2.16	2.96
KR-Korea(South)	2.08	3.05
LV-Latvia	2.85	2.87
MX-Mexico	3.02	3.36
NL-Netherlands	3.70	2.99
NO-Norway	3.50	3.38
PL-Poland	2.65	3.27
SK-Slovakia	2.52	2.71
SI-Slovenia	3.85	3.04
ES-Spain	-	-
SE-Sweden	3.64	3.48
CH-Switzerland	3.06	2.93
TR-Turkey	1.62	2.65
US-United States	2.61	3.23
BE-Belgium	3.69	3.24
DE-Germany	3.43	3.35
PT-Portugal	3.55	3.41
GB-Great Britain	3.22	3.40

주: 숫자가 클수록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에 가까움을 의미함.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7〉은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시한다. 숫자가 클수록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1)', '다소 찬성(2)', '찬성도 반대도 아님(3)',

‘다소 반대(4)’, ‘매우 반대(5)’로 응답하도록 했다. 먼저 자녀 가치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자.

자녀 가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에 비해 국가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보다는 대체로 ‘반대도 찬성도 아니’거나 ‘찬성’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자녀 가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중국(1.65), 대만(1.74), 일본(1.79), 한국(2.01)으로 덴마크(1.47), 스웨덴(1.6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3.14), 일본(2.95), 중국(3.01), 대만(3.10)으로 스웨덴(2.70), 노르웨이(2.87)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한국(2.53), 일본(2.09), 중국(2.07), 대만(2.35)으로 스웨덴(2.05)과 핀란드(1.98)에 비해서 찬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자녀 가치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에 비해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더 강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약된다.”에 대해 한국(2.53), 일본(2.88), 중국(2.94), 대만(2.47)으로 스웨덴(3.94)과 노르웨이(3.80)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에 대해서도 한국(2.64), 일본(3.04), 중국(3.12), 대만(2.67)으로 스웨덴(3.44)과 핀란드(3.55)보다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만과 한국은 자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이 꽤 높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2.60), 일본(3.00), 중국(3.22), 대만(2.70)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는 스웨덴(3.09)과 노르웨이(3.16)보다 동의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대만과 한국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자녀가 취업 기회를 더 제약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3-7〉 출산과 자녀양육 관련 인식

국가	자녀의 성장 기쁨	사회적 지위	도움 원천	자유 제약	재정 부담	취업기회 제약
AU-Australia	1.89	3.34	2.22	3.72	3.28	2.92
AT-Austria	1.72	2.94	2.48	2.72	2.40	2.44
CA-Canada	1.92	3.09	1.98	3.60	3.32	3.07
CL-Chile	1.56	3.31	2.44	3.04	3.10	3.11
CN-China	1.65	3.01	2.07	2.94	3.12	3.22
TW-Taiwan	1.74	3.10	2.35	2.47	2.67	2.70
CZ-Czech Republic	1.70	2.90	2.38	2.99	2.42	2.69
DK-Denmark	1.47	3.02	2.50	3.74	3.30	3.05
FI-Finland	2.08	3.03	1.98	3.83	3.55	3.53
FR-France	1.61	3.20	2.72	3.02	2.16	2.90
HU-Hungary	1.54	3.04	2.28	3.16	2.44	2.43
IS-Iceland	1.78	2.40	2.06	3.78	3.64	3.21
IE-Ireland	1.77	3.22	1.96	3.70	3.36	2.95
IL-Israel	1.64	2.86	2.27	3.17	2.99	2.89
JP-Japan	1.79	2.95	2.09	2.88	3.04	3.00
KR-Korea(South)	2.01	3.14	2.53	2.53	2.64	2.60
LV-Latvia	1.79	2.45	2.17	3.29	3.21	3.10
MX-Mexico	1.45	3.37	2.48	3.02	3.40	3.18
NL-Netherlands	2.09	3.00	2.56	3.50	3.35	3.36
NO-Norway	1.76	2.87	2.45	3.80	3.80	3.16
PL-Poland	1.69	2.66	2.00	3.29	2.64	2.89
SK-Slovakia	1.54	2.84	2.16	3.56	3.12	2.92
SI-Slovenia	1.57	3.34	2.39	3.74	2.99	3.05
SE-Sweden	1.60	2.70	2.05	3.94	3.44	3.09
CH-Switzerland	1.75	3.10	2.01	3.24	2.42	2.61
TR-Turkey	1.42	2.52	2.10	2.67	2.49	2.89
US-United States	1.74	3.04	1.97	3.64	3.45	3.21
BE-Belgium	1.77	2.89	2.40	3.28	2.82	3.24
DE-Germany	1.68	3.08	2.09	3.33	2.87	2.65
PT-Portugal	1.62	3.18	1.97	2.86	2.20	2.91
GB-Great Britain	1.88	3.25	2.40	3.66	3.34	2.98

주: (1)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2)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3) 성인 자녀는 노부모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4)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약된다. (5)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6)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표 3-8>에 따르면 중국(57.3), 대만(45.3), 일본(55.1)은 엄마가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은 아빠는 전일제,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부부가 모두 시간제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6.6%, 44.7%로 높았다. 북유럽 국가 간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덴마크는 엄마 시간제, 아빠 전일제가 39.2%, 부부 전일제가 38.2%로 비율이 비슷했고, 핀란드, 노르웨이는 엄마 시간제, 아빠 전일제가 각각 40.1%, 40.3%로 비율이 높았다.

〈표 3-8〉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정-직장 생활 분할 바람직한 방식 인식

(단위: %)

국가	엄마 전업	엄마 시간제	부부 전일제	부부 시간제	아빠 시간제	아빠 전업
AU-Australia	37.9	47.8	1.4	11.9	0.6	0.4
AT-Austria	42.7	41.5	2.8	12.2	0.3	0.5
CA-Canada	30.3	38.9	16.2	14.1	0.0	0.5
CL-Chile	28.3	51.8	9.0	10.1	0.7	0.1
CN-China	57.3	28.4	10.4	3.2	0.3	0.4
TW-Taiwan	45.3	39.0	13.3	1.9	0.2	0.2
CZ-Czech Republic	55.9	28.9	11.1	2.9	0.7	0.5
DK-Denmark	5.6	39.2	38.2	15.8	1.0	0.1
FI-Finland	17.1	40.1	25.0	17.2	0.2	0.4
FR-France	16.0	48.4	18.4	16.0	0.6	0.5
HU-Hungary	56.3	30.7	12.3	0.7	0.0	0.0
IS-Iceland	5.7	39.4	25.9	28.0	0.9	0.0
IE-Ireland	24.7	49.1	13.3	11.6	0.9	0.4
IL-Israel	30.3	47.7	14.8	5.5	1.1	0.6
JP-Japan	55.1	37.6	5.3	2.0	0.0	0.0
KR-Korea(South)	35.3	47.3	10.8	5.8	0.6	0.1
LV-Latvia	58.7	31.0	7.4	2.4	0.3	0.2
MX-Mexico	48.1	25.4	7.3	16.5	1.4	1.3
NL-Netherlands	15.1	34.6	3.5	46.6	0.0	0.2
NO-Norway	6.4	40.3	32.7	19.7	0.9	0.0
PL-Poland	40.1	34.5	21.4	3.7	0.2	0.2
SK-Slovakia	51.6	36.7	10.7	0.6	0.0	0.3
SI-Slovenia	15.2	45.2	33.5	5.9	0.0	0.2
SE-Sweden	7.0	24.8	21.4	44.7	1.6	0.5
CH-Switzerland	20.8	42.5	4.2	31.7	0.5	0.3
TR-Turkey	69.6	21.5	5.1	2.7	0.3	0.8
US-United States	34.1	44.3	12.6	8.4	0.2	0.5
BE-Belgium	15.5	52.7	16.6	14.8	0.3	0.0
DE-Germany	19.9	52.8	10.6	16.5	0.3	0.0
PT-Portugal	11.8	53.3	23.2	10.8	0.2	0.6
GB-Great Britain	33.0	52.2	6.1	8.7	0.0	0.0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정과 직장 생활 분할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중국은 아빠가 전업, 엄마가 전일제(61.8%), 대만은 부부가 전일제(40.0%), 일본은 부부가 전일제(55.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은 부부가 전일제(40.1%), 아빠 전업, 엄마 전일제(42.9%)로 일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거나 아빠가 전업으로 자녀를 돌보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아버지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아야 하고, 엄마가 시간제나 전업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의 지배적인 관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부부가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가정 양립 모델이라고 인식하였다. 스웨덴은 부부가 전일제(56.2%), 핀란드도 부부 전일제(50.1%), 덴마크도 부부 전일제(45.8%), 노르웨이도 부부 전일제(41.6%)로 나타났다.

〈표 3-9〉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정-직장 생활 분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인식

(단위: %)

국가	엄마 전업	엄마 시간제	부부 전일제	부부 시간제	아빠 시간제	아빠 전업
AU-Australia	6.9	3.0	70.1	5.8	1.3	13.0
AT-Austria	2.8	2.8	60.4	4.3	5.8	23.8
CA-Canada	10.5	0.6	50.0	12.2	2.9	23.8
CL-Chile	4.7	3.9	15.7	3.4	8.6	63.6
CN-China	4.0	1.1	23.8	6.3	3.0	61.8
TW-Taiwan	3.0	0.7	40.0	24.0	2.3	30.1
CZ-Czech Republic	2.2	1.7	27.7	9.2	11.9	47.4
DK-Denmark	16.5	1.3	45.8	19.4	1.5	15.5
FI-Finland	14.6	3.2	50.1	15.6	1.7	14.8
FR-France	19.0	4.3	39.1	13.4	1.9	22.2
HU-Hungary	4.4	4.4	26.7	10.9	8.1	45.5
IS-Iceland	15.7	1.1	43.4	12.3	2.6	24.9
IE-Ireland	10.4	6.1	59.1	9.4	0.9	14.0
IL-Israel	8.3	4.9	25.3	8.4	3.9	49.2
JP-Japan	2.3	0.9	55.4	17.8	3.7	19.9
KR-Korea(South)	5.1	0.1	40.1	8.9	2.9	42.9
LV-Latvia	10.8	7.1	32.5	2.9	7.7	39.1
MX-Mexico	9.4	7.3	15.8	6.1	15.5	45.8
NL-Netherlands	9.0	1.4	74.1	3.2	0.6	11.6
NO-Norway	17.1	4.1	41.6	15.8	0.9	20.3
PL-Poland	10.6	6.7	28.8	11.7	3.5	38.8
SK-Slovakia	2.9	4.8	26.7	10.7	10.9	44.0
SI-Slovenia	9.8	1.6	30.8	10.6	3.6	43.5
SE-Sweden	23.8	3.1	56.2	8.6	0.3	8.0
CH-Switzerland	10.3	4.3	51.0	3.7	6.0	24.7
TR-Turkey	8.2	5.6	5.3	3.2	4.8	72.9
US-United States	5.1	1.5	38.6	12.6	4.7	37.5
BE-Belgium	12.2	3.9	46.7	12.2	0.6	24.5
DE-Germany	11.4	1.6	60.2	8.6	3.2	15.0
PT-Portugal	3.0	2.4	34.9	5.6	3.7	50.4
GB-Great Britain	9.1	4.4	62.7	7.3	2.6	13.8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 제5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1. 변수 구축

본 절에서는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율의 결합원인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가 원인 조건으로 분석한 변수는 성 역할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근로시간 격차, 출산 전 결혼 관념, 여성 고용률이다. Gauthier(2016)와 신윤정 외(2014)가 지적한 바대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출산율의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국가가 조세 및 재정 정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있기도 하므로, 가족지출과 같은 정책 변수도 원인 조건의 하나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대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회지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있고, 국가의 정책 현황은 개인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책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축했다.

출산율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는 ISSP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들의 가중치 적용 평균치를 국가 단위 변수로 구축했다. 독립변수 모두 15-49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국가 단위 변수를 구축했다. 근로시간 격차와 여성 고용률을 계산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성별 구분 없이 전체 표본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성 역할 관념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

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의 4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원점수를 계산했다. 각 항목 응답 점수를 모두 더한 후 4로 나누어 0-5 사이의 원점수를 계산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뚜렷한 성 역할 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여성 취업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 역할 관념은 여성의 전통적인 남성 역할 수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 수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ISSP 조사에는 남성의 가사나 돌봄 노동 분담 관련 인식 질문이 없다.

자녀 가치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도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항목을 사용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 3으로 나누어 원점수를 구했다.

자녀 양육 부담은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 항목을 사용했다. 자녀 가치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 3으로 나누어 원점수를 구했다.

출산-결혼 관념은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항목을 사용했다.

남녀 근로시간 격차는 남녀의 근로시간 중위수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했다. 여성 고용률은 15-49세 여성 가운데 취업 비율을 구해 사용했다.

##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

연구의 분석에 적용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민기채(2014)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론의 실제 과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원점수를 퍼지 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인 ‘측정’, 둘째, 불리언 대수를 이용한 퍼지 소속점수에 대한 ‘연산’, 셋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집합관계에 대한 ‘검증’, 넷째, 간명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축약’이다.

첫째, 원점수를 퍼지 점수로 변환한다. 단순한 집합이론에서 한 사례가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정의하지만 fs/QCA에서 퍼지셋 논리는 집합의 소속 정도를 연구자가 결정한다. 연구자는 1(완전 소속)과 0(완전 소속 되지 않음)이라는 한계점 내에서 부분적인 소속을 의미하는 0과 1 사이의 퍼지 점수를 정하는 것이다. 퍼지셋 점수는 등간이나 연속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1까지의 연속형 점수로 측정하여 요인이 집합에 어느 정도 속하는지, 즉 각 국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했다. 0.5는 소속도 비소속도 아님을 의미한다. 1에 가까울수록 집합에 더 많이 속하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집합에 덜 속하는 것이다. 퍼지 점수는 연구자가 가진 객관적, 질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어느 수준이 0.5라고 할 것 인지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 기준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퍼지셋 분석에서는 어느 사례도 완전하게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지 않았다고 설정하기보다는 0.95와 0.05의 한계점을 설정한다. 퍼지셋 점수로 변환했을 때 점수가 양극단으로 분포하도록 유도하여 집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수 중 최댓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솟값에 0.05의 가중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는다. fs/QCA의 개발자인 Ragin은 표준화 작업을 지양하고 기준점 설정을 연구자가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임의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0.5 기준점으로 중위수를 사용했다. 중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각 원인 조건별로 기준점 설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나, 조건 간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개념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0.5 기준점으로 중위수를 사용한 이유는 출산율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인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퍼지셋 점수로 변환할 때 0.95의 값을 가진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완전히 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출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의미할 뿐이다. OECD 국가는 이미 모두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0.95의 값을 갖고 완전히 포함되는 국가라고 해서 고출산 국가는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완전히 소속되지 않는 값인 0.05로 측정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의미하며,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퍼지셋 연산은 불리언 대수를 활용한 방식을 차용한다. 불리언 대수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집합공식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다. 합집합은 ‘혹은(logical or)’으로 나타내며 덧셈부호(+)로 표시한다. 교집합은 ‘그리고(logical and)’로 나타내며 둘 이상의 조건이 결합되는 복합집합으로 곱하기부호(\*)로 표시한다. 여집합은 1에서 퍼지 점수를 뺀 점수이며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이 되는 조건들을 ‘속성(attributes)’으로 설명하는데, 속성이 K개 라면, 인과적 결합요인은  $2^K$ 까지 구성된다. 본 연구가 선택한 속성은 성평등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근로시간, 출산 전 결혼 관념, 고용률 등 6개이다. 예를 들어 각 속성은 집합과 여집합으로 구성되며, 집합

은 대문자로 여집합은 소문자로 표시한다. 높은 성평등 관념(S)과 낮은 성평등 관념(s), 높은 수준의 자녀 가치(P)와 낮은 수준의 자녀 가치(p), 높은 수준의 자녀 양육 부담(M)과 낮은 수준의 자녀 양육 부담(m), 높은 수준의 출산 전 결혼 관념(R)과 낮은 수준의 출산 전 결혼 관념(r), 높은 수준의 근로시간(O)과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o),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K)과 낮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k) 같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인과적 결합요인은  $2^6$ 으로 64개이다. 예를 들어 64개 가운데 하나의 결합배열은 ‘성평등 관념 수준이 높고 자녀 가치가 높은 수준이고 자녀 양육 부담이 낮으며 출산 전 결혼해야 한다는 관념이 낮은 수준이며 근로시간 격차가 낮은 수준이고 여성 고용률이 높음(SPmrgK)’이 될 수 있다.

셋째, 집합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consistency)과 설명력(coverage)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원인 조건에 동의하는 결과집합의 정도를 평가하는 반면, 설명력은 필요조건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조건이 결과의 사례들과 병행되는 정도를 평가한다(Ragin, 2008, pp. 44-45; 민기채, 2014, p. 236에서 재인용). 일관성은 유의성(significance)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 조건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적 주장이 얼마나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설명력은 사례들이 가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Ragin이 권고한 0.80의 일관성 수준기표를 사용했다(Ragin, 2000).

일관성 검증은 Y-일관성 검증과 N-일관성 검증으로 나뉜다. Y-일관성 검증은 수준기표를 선정한 후, 모델이 수준기표와 얼마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N-일관성 검증은 X 집합이 Y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X 집합이 Y 여집합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이 얼마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원인 조건

이 결과 조건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원인 조건이 결과 조건의 여 집합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을 비교함으로써 일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충분조건 검증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Y-일관성 검증과 N-일관성 검증을 모두 통과한 결합원인 배열만을 고려한다(민기재, 2014).

퍼지 점수를 구한 후 결합요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검증을 실시한다. 필요조건 검증은 결과가 원인의 부분집합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원인 조건의 값이 일관되게 결과의 값보다 높을 때 이를 필요조건이라 한다( $Y_i \leq X_i$ ). 이는 결과가 존재하면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조건 검증은 원인이 결과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한 조건의 값이 결과의 값보다 항상 낮을 때 이는 충분조건이다( $X_i \leq Y_i$ ). 이는 원인이 존재하면 항상 결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넷째,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원인 조건 조합들을 축약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복잡한 해법, 간명한 해법, 중간 해법 등 축약된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 3. 분석 결과

〈표 3-10〉은 원인과 결과집합의 원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출산율은 2012년 기준 중국(1.60), 대만(1.10), 한국(1.30), 일본(1.41)이다. 성평등 관념은 중국(2.70), 대만(3.12), 한국(2.88), 일본(3.34)으로, 점수가 낮은 중국과 한국이 대만과 일본에 비해 여성의 취업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성 역할 관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4.00), 핀란드(3.64), 덴마크(4.12), 노르웨이(3.77)로,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

성 취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녀 가치에 관해서는 비교 대상 국가 모두 3점을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녀 가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에 서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중국(2.21), 대만(2.38), 한국(2.55), 일본(2.08)으로, 스웨덴(1.94)보다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자녀 가치에 대해 찬성하는 수준이 가장 높아, 스웨덴 다음으로 점수가 높다. 즉,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은 자녀 가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해서는 중국(3.07), 대만(2.61), 한국(2.58), 일본(2.83)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웨덴 3.26, 노르웨이 3.41, 덴마크 3.26으로,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출산-결혼 관념에 대해서는 중국(2.04), 대만(2.61), 한국(2.08), 일본(2.16)으로, 자녀를 원한다면 결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여성 근로시간과 남녀 근로시간 격차를 살펴보자. 여성의 근로시간은 중국(48), 대만(44), 한국(40), 일본(40)이다. 남녀 근로시간 격차를 보면, 중국은 4시간, 대만은 8.33시간, 한국과 일본은 20시간으로 한국과 일본의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 스웨덴, 덴마크는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0으로, 남녀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1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중국(48.58), 대만(71.83), 한국(54.21), 일본(68.21)이다.

〈표 3-10〉 주요 변수의 원점수

국가	결과집합	원인집합						
	출산율	성평등 관념 (점)	자녀 가치(점)	자녀 양육 부담 (점)	결혼 먼저(점)	여성 근로시간 (시간)	남녀 근로시간 격차 (시간)	여성 고용률 (%)
AU-Australia	1.93	3.52	2.39	3.19	3.15	35	12.50	75.73
AT-Austria	1.44	2.92	2.19	2.46	3.19	38	5.00	80.64
CA-Canada	1.61	3.72	2.24	3.23	3.11	31	22.50	67.22
CN-China	1.60	2.70	2.21	3.07	2.04	48	4.00	48.58
TW-Taiwan	1.10	3.12	2.38	2.61	2.61	44	8.33	71.83
DK-Denmark	1.73	4.12	2.17	3.26	3.58	37	0.00	75.13
FI-Finland	1.80	3.64	2.11	3.42	3.38	38	5.00	69.10
FR-France	1.99	3.65	2.42	2.63	3.88	35	12.50	78.49
IE-Ireland	2.01	3.56	2.23	3.28	3.37	33	17.50	52.85
JP-Japan	1.41	3.34	2.08	2.83	2.16	40	20.00	68.21
KR-Korea(South)	1.30	2.88	2.55	2.58	2.08	40	20.00	54.21
NL-Netherlands	1.72	3.55	2.32	3.19	3.70	32	20.00	66.47
NO-Norway	1.85	3.77	2.19	3.41	3.50	38	7.32	83.13
SE-Sweden	1.91	4.00	1.94	3.26	3.64	40	0.00	75.19
CH-Switzerland	1.53	3.25	2.24	2.72	3.06	36	18.18	75.24
US-United States	1.88	3.23	2.19	3.35	2.61	40	4.76	63.18
BE-Belgium	1.79	3.45	2.12	2.90	3.69	38	5.00	74.18
DE-Germany	1.41	3.65	2.15	2.85	3.43	36.5	8.75	68.45
GB-Great Britain	1.92	3.52	2.44	3.28	3.22	32	20.00	59.85

주: 성평등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결혼 전 출산은 5점 척도 점수임.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11〉은 원점수를 퍼지 점수로 변환하는 데 사용한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3-1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출산율	성평등 관념 (점)	자녀 가치 (점)	자녀 양육 부담 (점)	결혼 먼저 (점)	여성 근로시간 (시간)	남녀 근로시간 격차 (시간)	여성 고용률(%)
mean	1.68	3.45	2.23	3.02	3.12	37.44	11.12	68.82
sd	0.25	0.36	0.14	0.31	0.56	4.19	7.52	9.55
min	1.10	2.69	1.94	2.45	2.04	31.00	0.00	48.58
p50	1.72	3.52	2.20	3.18	3.21	38.00	8.75	69.09
max	2.01	4.12	2.54	3.41	3.88	48.00	22.5	83.12

주: 성평등 관념, 자녀 가치, 자녀 양육 부담, 결혼 전 출산은 5점 척도에서의 점수임.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12〉는 변수의 지수값을 퍼지 점수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 순으로 정리했다.

〈표 3-12〉 퍼지 점수

국가	출산율	성평등 관념	자녀 가치	자녀 부담	결혼 먼저	남녀 근로시간 격차	여성 고용률
	F	S	P	M	R	G	K
IE-Ireland	0.953	0.546	0.550	0.777	0.670	0.871	0.085
FR-France	0.943	0.660	0.864	0.093	0.953	0.694	0.882
AU-Australia	0.893	0.500	0.834	0.500	0.454	0.694	0.805
GB-Great Britain	0.885	0.499	0.883	0.765	0.500	0.921	0.206
SE-Sweden	0.873	0.915	0.047	0.712	0.871	0.047	0.786
US-United States	0.834	0.257	0.452	0.898	0.176	0.203	0.296
NO-Norway	0.786	0.779	0.439	0.947	0.780	0.380	0.953
FI-Finland	0.681	0.648	0.250	0.953	0.673	0.217	0.500
BE-Belgium	0.647	0.438	0.273	0.236	0.892	0.217	0.748
DK-Denmark	0.500	0.953	0.392	0.719	0.839	0.047	0.784
NL-Netherlands	0.493	0.536	0.728	0.505	0.900	0.921	0.405
CA-Canada	0.366	0.728	0.575	0.643	0.432	0.953	0.432
CN-China	0.351	0.047	0.500	0.383	0.047	0.164	0.047
CH-Switzerland	0.279	0.267	0.576	0.127	0.401	0.887	0.788
AT-Austria	0.202	0.099	0.443	0.047	0.484	0.217	0.922
JP-Japan	0.179	0.338	0.190	0.184	0.063	0.921	0.468
DE-Germany	0.179	0.652	0.332	0.198	0.728	0.500	0.477
KR-Korea(South)	0.113	0.088	0.953	0.076	0.052	0.921	0.102
TW-Taiwan	0.047	0.186	0.821	0.083	0.176	0.464	0.642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text{모형: 출산율} = \text{성 역할 관념} + \text{자녀 가치} + \text{자녀 양육 부담} + \text{결혼 먼저} + \text{남녀 근로시간 격차} + \text{여성 고용률}$$

원인집합의 수가 6개이므로 가능한 배열은 64개이다. 이 가운데 사례가 1개 이상 존재하고, Y-일관성 값이 0.90이상인 배열만을 고려했다. <표 3-13>에 제시된 원인집합 배열 가운데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통과한 원인집합 배열을 찾아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표 3-13>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 배열

배열	Y-일관성	사례 수	최적 사례(Bestfit)
spMrgk	0.967	1	US-United States
SPMRGk	0.963	2	IE-Ireland, NL-Netherlands
SpMRgK	0.959	3	DK-Denmark, NO-Norway, SE-Sweden
SPmRGK	0.924	1	FR-France
SPMrGk	0.918	1	CA-Canada
spmrGk	0.794	1	JP-Japan
spmRgK	0.791	1	BE-Belgium
sPmrGK	0.761	1	CH-Switzerland
spmrgK	0.755	1	AT-Austria
sPmrgK	0.686	1	TW-Taiwan
sPmrGk	0.671	1	KR-Korea(South)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14>는 각 원인 조건이 출산율에 대한 필요조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Y-일관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10% 수준에서 필요조건으로 확인된 것은 근로시간 격차 변수이다.

〈표 3-14〉 출산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Y-일관성 검증 결과

구분	Y-일관성	검증 기준값	F	P	설명력	p<0.05	p<.10
성 역할 관념 S	0.732	0.8	1.11	0.306	0.817		
자녀 가치 P	0.705	0.8	1.33	0.263	0.712		
자녀 양육 부담 M	0.759	0.8	0.24	0.628	0.876		
결혼 먼저 R	0.778	0.8	0.08	0.779	0.787		
근로시간 격차 G	0.615	0.8	4.18	0.056	0.613		통과
여성 고용률 K	0.715	0.8	0.78	0.388	0.707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15〉는 각 원인 조건의 출산율에 대한 N-일관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녀를 원한다면 결혼해야 한다는 원인 조건이 10% 수준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표 3-15〉 출산율에 대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 결과

구분	Y-일관성	N-일관성	F	P	설명력	p<0.05	p<.10
성 역할 관념 S	0.732	0.577	1.62	0.219	0.817		
자녀 가치 P	0.705	0.647	0.13	0.725	0.712		
자녀 양육 부담 M	0.759	0.537	1.84	0.192	0.876		
결혼 먼저 R	0.778	0.491	3.72	0.070	0.787		통과
근로시간 격차 G	0.615	0.599	0.01	0.935	0.613		
여성 고용률 K	0.715	0.585	0.51	0.483	0.707		

주: Y-일관성 $\geq$ N-일관성 여부를 검증함.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결합배열에 대해 충분조건 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자.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 Y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을 충분조건이라 부른다. 원인조합이 스스로 결과를 산출해 내면 이 원인조합은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충분조건을 검증할 때 Y-일관성 검증과 N-일관성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검증 기준은 .80,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여 검증했다.

Y-일관성 통과한 배열은 총 64개 가운데 34개이다. Y-일관성 검증을

통과한 배열 중 N-일관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배열만이 검증 기준을 통과했다(〈표 3-16〉 참조). 2개의 배열 중 SpMRgk 배열은 최적 사례가 없는 원인조합이지만, 이 배열을 포함하여 출산율의 충분조건을 해석했다. 이 배열은 최적 사례가 3개인 SpMRgK의 사례와 축약의 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16〉 출산율에 대한 충분조건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 결과

배열	Y-일관성	검증 기준값	F	P	N-일관성	F	P	최적 사례 수
SpMRgk	0.979	.800	124.18	0.000	0.824	5.51	0.030	0
SpMRgK	0.959	.800	36.78	0.000	0.654	6.14	0.023	3

주: Y-일관성 $\geq$ N-일관성 여부를 검증함.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축약의 과정을 통해 최소배열 축소집합은 하나의 원인조합, 즉 SpMRg로 축약될 수 있다. 이 배열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높은 출산율=높은 수준의 성평등 관념+높은 수준의 자녀 가치+낮은 수준의  
자녀 양육 부담+높은 수준의 출산 전 결혼 먼저에 대한  
반대+낮은 수준의 남녀 근로시간 격차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가져오는 원인집합 배열은 성별 분업에 반대하고, 자녀 가치가 높으며, 자녀 양육 부담이 낮으며, 출산과 결혼의 연계가 느슨하며,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은 것이다. 이 5가지 원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여성 고용률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여성 고용률 수준이 높은 원인까지 결합한 배열에 해당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이 원인집합 배열의 충분조건으로서 설명력은 0.389이고 일관성은 0.961이다. 북구 유럽 국가의 높은 여성 고용

률은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원인조건과 결합하여 높은 출산율을 야기하고 있지만,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크지 않다면 여성 고용률 수준은 높은 출산율을 야기하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3-17〉 원인집합 배열에 따른 국가 유형

배열	최적 사례(Bestfit)
spMrgk	US-United States
SPMRGk	IE-Ireland, NL-Netherlands
SpMRgK	DK-Denmark, NO-Norway, SE-Sweden
SPmRGK	FR-France
SPMrGk	CA-Canada
spmrGk	JP-Japan
spmRgK	BE-Belgium
sPmrGK	CH-Switzerland
spmrGk	AT-Austria
sPmrgK	TW-Taiwan
sPmrGk	KR-Korea(South)

자료: ISSP. (2012). 원자료 분석.

〈표 3-17〉은 각 국가에 해당하는 원인집합 배열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spmrGk, 한국은 sPmrGk, 대만은 sPmrgK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의 충분조건과 상당히 동떨어진 특성을 보였다. 모두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고 있다. 여전히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 인식하며, 여성이 취업했을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의식이 높다.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대만에서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축에 속한다. 자녀의 성장을 보는 데 기쁨을 느끼며, 자녀가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고, 도움의 원천이라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일본, 한국, 대만에

서 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높은 출산율의 충분조건인, 성평등 역할 의식, 높은 자녀 가치, 낮은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결합원인과 거리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남녀 근로시간 격차는 큰 편이다.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대만 여성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남녀 근로시간에 차이가 별로 없고 여성 고용률이 높다.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부모의 상황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는 노동시장적 특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적 가설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 사례가 없다.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는데 여성 고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외에도 호주, 핀란드, 독일, 영국은 해당되는 원인집합 배열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정된 성별 분업에 대한 반대 의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평등주의는 다른 조건들과 결합될 때에 출산율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스웨덴은 성평등 역할 의식과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결합원인의 충분조건에 고용률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원인 조건들과 함께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6절 소결

본 연구는 퍼지셋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국가 관점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합원인 조건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성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의 수준이 아직도 높다.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는 증가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는 남성들과의 역할 갈등이 동시에 커지면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습은 동거와 비혼 출산을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전반적인 확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는 결혼 패키지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며, 결혼율이 낮아지니 출산율도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다.

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양육에 따른 부담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녀로부터 갖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세대 간 지원이라는 가치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는 경향과 자녀의 양(quantity)보다는 질(quality)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자녀 양육을 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적어, 이러한 점도 자녀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관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만은 비교적 여성 고용률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근로시간은 길지만 남녀의 근로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과 일본은 근로시간도

길고 남녀의 근로시간 차이가 큰 편이다.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서 남녀 근로시간 차이가 전혀 없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는 원인집합 배열은 성별 분업에 반대하고, 자녀 가치가 높으며, 자녀 양육 부담이 낮으며, 출산과 결혼의 연계가 느슨하며,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은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원인집합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높고, 자녀 가치가 낮고(일본 제외), 자녀 양육 부담이 크고,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크며(대만 제외), 여성 고용률이 낮은(대만 제외) 조건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할 때 각 국가의 출산 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요인에서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자녀는 어느 정도 부모에게 심리적 만족, 사회적 지위, 도움의 원천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출산의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모자랐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과 표준적인 자녀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있어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근로시간,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고용률 수준 자체보다는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은 것이 출산율 충분조건인 결합요인이었다. 남녀 근로시간 격차를 크게 유지하면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의

근로시간 격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을 분할할 것인지에 관한 인식을 반영한다. 동아시아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방식에서 다소 상이한 인식과 실천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데도 근로시간 격차가 큰, 즉 맞벌이여도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만은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서 근로시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상당히 길다.

본 연구는 퍼지셋 방법을 적용하여 2012년 OECD에 가입된 19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율을 설명하는 결합원인들을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어떠한 하나의 요인이 독자적으로 출산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간 사례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제 4 장

##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인구정책

제3절 중국의 인구정책

제4절 대만의 인구정책

제5절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제6절 한국의 인구정책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4

##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분석<sup>16)</sup> <<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인구변동 요인 중 출산력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을 살펴본다.<sup>17)</sup>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가족 정책)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저출산 대응 조치들의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유형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조치들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기존 서구 국가들이 추진한 조치들과 큰 차이는 없다. 보육시설 등 양육 환경 개선, 자녀 양육을 위한 모성-부성 휴가 제도 개선, 출산 장려 수당 등 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도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조치들의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출산율 상승의 징후는 관측되지 않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시점 기준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구정책의 형성 및 역사적 전개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각 국가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라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

16) 본 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혜봉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17)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개별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목표와 인구학적 변화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된다(May, 2012, pp. 1-2). 인구정책의 정의 그리고 인구정책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May(2012)를 참고할 수 있다.

여 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시점에서 관측되는 인구정책 분석을 넘어, 인구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은 — 세계의 다른 국가 혹은 국가군과 구분되는 —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 내부에 존재하는 인구정책에서의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인구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의 국가별 특수성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차별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이며,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하여(중국의 특별행정구) 관련 인구정책 자료를 획득하기가 극히 어려운 홍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장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선, 제한적인 연구들이나마 선행 연구들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정리하며(제2절~제6절), 이에 기초하여 제7절에서는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종합한다.

## 제2절 일본의 인구정책

###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인구정책

1859년 문호 개방 후 9년 만인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막부 체제를 끝내고 국왕 친정 형태의 통일 국가를 이룩할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의 인구는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정체된 반면,

메이지유신 이후인 19세기 후반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1872년 3,480만 명 수준이었던 일본의 인구는 1940년 7,190만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율(연)은 1873년 0.43%에서 1920년 1.08%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에도 시대 동안 광범위하게 행해진 인공임신중절과 영아 살해를 금지하는 한편 피임 도구의 생산과 배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Inoue, 2001, pp. 24-25).

그러나 일본에서 출산 통제(산아 제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이미 메이지 정부하인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1922년 생어(Margret Sanger)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대체로 1920년대 일본의 인구정책 분위기는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다양한 가족계획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졌다(May, 2012, p. 79). 더욱이 1920년대 말 세계공황의 여파로 실업, 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구 통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구 통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됨으로써 1930~1931년에 일본산아제한협회, 일본산아조절동맹, 무산자산아제한동맹과 같은 민간 주도의 인구 통제 운동이 활성화된다(유연실, 2017, pp. 129-132).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 및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를 강조한 전체주의의 발흥에 따라 이러한 일본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쇠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20년대 가족계획 운동이 짧은 기간에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까

지 진행된 일본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달리 출산을 감소와 조음하는 모습을 보였음이 지적된다. 예컨대, 1920년에서 1940년까지의 기간에 농업 등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872년 시작된 일본의 의무 교육 체계는 1907년 6년 의무 교육 체계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지 유신 이후 1920년대 1.5%까지 상승했던 일본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말에는 1%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Inoue, 2001, p. 2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말 인구 통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되기는 했지만, 전체주의가 발흥한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인구정책은 대체로 인구 증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1939년 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의 전신인 인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41년에는 아동수당, 세제 혜택 등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인구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정점에 이른 일본 정부의 인구 증가 노력(예컨대,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금지)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을 뿐 1920년경에 시작된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1920년 인구 1,000명당 36.2명이었던 조출생률(CBR)은 1940년 29.4명까지 떨어졌다. 조출생률은 1940년에서 1943년 사이 인구 1,000명당 30명을 다소 상회하기도 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착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 3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Inoue, 2001, pp. 25-26).

## 2. 전후 재건기 인구정책: 1940년대 중반~1950년대 중반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1945~1952년)의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는 전후 급속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통제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Ogino, 2016, p. 99). 제2차세계대전 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출산율은 1950년대 초에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전후 사망률 또한 감소함으로써 급속한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49년 미국의 인구 전문가들 또한 일본을 방문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피임 도구의 보급 등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Inoue, 2001, pp. 26-27).

전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피임은 개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출산 통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 끝에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피임 도구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Inoue, 2001, p. 27). 다른 한편으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 가족계획 관련 실험적 노력들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일본 내각은 1951년 사후적 성격의 인공임신중절 대신 피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과 함께 이를 위해 공중보건 간호사 등 가족계획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Ogino, 2016, p. 101). 가족계획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피임 실천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실패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임 실천의 효과성 부족을 고려할 때 1950년대 초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주로 인공임신중절에 기인함을 시사한다(Inoue, 2001, pp. 29-30).

다른 한편 1950년대 초반 니혼 고깁(Nippon Kokan: NKK)의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하여 노무관리 전략 차원에서 피용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민간 부문이 가족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중반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하여 대규모 공공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100여 개 이상의 기

업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Ogino, 2016, pp. 101-102). 이렇게 민간 기업(조직)과 개인들이 가족계획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족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는 지속되지 않게 된다(Inoue, 2001, p. 28). 이렇게 가족계획에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우생학적 논거(1940년 국민우생법 제정 및 1941년 시행)에 기초한 일본의 인공임신중절은 1948년 7월 우생보호법 제정을 통해 합법화된다.<sup>18)</sup> 1940년의 국민우생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1947년까지 제한된 건수의 수술만이 이루어졌다(연간 200건 미만). 반면 1948년 합법화 이후 보고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949년 102천 건에서 1955년 1,170천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국민우생법과 달리 우생보호법은 우생학적 목적(일정한 조건하에서의 강제 불임 수술)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인공임신중절은 우생학적 차원을 넘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하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로 기능하게 되었다.<sup>19)</sup> 이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 초 일본의 급

18) 기존 국민우생법은 담당 의사로 하여금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거나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임이나 불임 수술이 필요 이상으로 행해지는 것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伊佐智子, 2009, p. 139).

19) 메이지 13년인 1880년, 프랑스 형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구)형법(메이지 15년부터 메이지 41년까지 시행)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메이지 40년인 1907년, 독일 형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신)형법 또한 동일하게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伊佐智子, 2009, p. 133).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하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함으로써, 특히 경제적 사유를 광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관련 처벌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Ogino, 2016, pp. 99-100). 참고로, 일본에서는 형법상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근거로 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伊佐智子, 2009, p. 137), 현재의 모성보호법 및 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생보호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격한 출산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noue, 2001, pp. 27-30). 참고로, 일본의 합계출산율(TFR)은 1947년 4.566에서 1952년 2.995로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1957년에는 대체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1957년 TFR=2.058)(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비록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방임적 인구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지만, 1948년의 우생보호법 제정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주택 및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성격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은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의 인공임신중절’과 지역우생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심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구분하였다(伊佐智子, 2009, pp. 141-142). 법 제정 후에 이루어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49년 개정법에서 ‘심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경제적 사유(경제 조항)’가 추가되었다(伊佐智子, 2009, p. 144). 이러한 경제 조항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지 않자 1952년 추가적인 우생보호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1952년 개정법은 ‘임의의 인공임신중절’과 ‘심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지정 의사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伊佐智子, 2009, p. 145).

우생보호법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함으로써 외형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배려하는 양상을 띤 반면 장애인의 경우 강제적인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생보호법이 지닌 이러한 문제는 1996년에 우생보호법이 모성보호법으로 개정되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장애인 집단에서 우생보호법을 비판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우생보호법을 둘러싸고 여성 집단과 장애인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생보호법(모성보호법)은 ‘부모’에게 원인이 있는 유전성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임신중절은 합법화하였지만, ‘태아’의 장애로 인한 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伊佐智子, 2009, pp. 147-148).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는 후속적으로 여성 집단과 장애인 집단 간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일본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신도(神道)나 불교와 같은 종교계 차원의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점도 인공임신중절이 대중화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후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및 대중화와 비교하여 피임 및 가족계획의 도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 부문의 활동과 성공 사례에 기초하여 1951년야야 비로소 생식건강 관련 위험이 큰 인공임신중절 대신 피임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피임 실천 관련 인력을 훈련하기 시작하였다(Ogino, 2016, pp. 100-101). 그러나 피임 실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중요한 출산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일본에서 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 동안 가파른 감소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Goto, Fujiyama-Koriyama, Fukao, Reich, 2000, p. 301). 전후 재건기를 거쳐 일본의 출산율이 1950년대 후반 대체 수준까지 하락하는 데에 가족계획(피임)보다는 인공임신중절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3. 출산율 안정기 인구정책: 195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1955년까지의 전후 재건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동안 일본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데, 이 기간에 일본의 순재생산율(NRR)은 1966년(NRR=0.73)을 제외하고 대체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0.9~1.06 수준)(Inoue, 2001, p. 30).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대체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일본이 전후 재건 사업을 마무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하락한 점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발전 차원에서 출산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 기간에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인구배당 효과 또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noue, 2001, p. 30). 195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피임 실천율 또한 크게 상승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경우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다. 결국 일본은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가족계획이 추진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1950년대 후반 거시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하는 대신 개인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Inoue, 2001, p. 31) 당시 일본의 인구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및 도시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대체로 충족되었지만 건설 부문, 영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과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정책의 필요성이 경제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1974년 부카레스트(Bucharest)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전에 이루어진 인구문제심의회 회의는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기침체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관련 논의를 상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Inoue, 2001, pp. 30-31).

#### 4. 저출산기 인구정책: 1970년대 중반~현재

일본은 1957년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하지만(1957년 TFR=2.058), 이후 1974년까지 큰 변화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국면에 진입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며(1974년 TFR=2.04)(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대체적으로 평균 혼인 연령의 상승과 비혼 인구의 증가 그리고 혼인 내 출산율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Retherford, Ogawa, Matsukura, 2001). 물론 이는 일본 고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과 1980년의 석유 위기 후 일본 경제는 195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에 걸친 급격한 성장세를 멈추게 된다. 반면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5년 32%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9년 남성을 추월한 후 1995년에는 48%까지 상승하였다(Inoue, 2001, pp. 31-32).

일본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과 출생 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경제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가 1970년대 초반 이후 계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 간 긴장 혹은 갈등 관계가 조성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태아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자리하였다(Ogino, 2016, p.106, p. 113).<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장애인 단체의 긴밀한 공동 노력으로 경제적 사유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는 저지되었으며, 후속적으로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영향과 맞물려 1996년 우생보호법을 모성보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생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伊佐智子, 2009, p. 152).<sup>21)</sup>

제2차세계대전 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1989년의 이른바 ‘1.57 쇼크’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정책적 개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았으며(2005년 TFR=1.247), 정책적 개입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과거 전체주의 기간의 출산 장려 정책의 유산으로 인해 ‘명시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에 관한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20)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사유로 태아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출산 전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아의 장애가 발견될 경우 경제적 사유에 기초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지만 이는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와도 관련된다(伊佐智子, 2009, p. 156).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의 생존권 간 갈등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1) 일본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형법이 오늘날까지 존재함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모성보호법에 의해 경제적 사유에 기초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의사의 승인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伊佐智子, 2009, p. 139). 1996년 우생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여성 단체가 낙태죄와 우생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伊佐智子, 2009, p. 152).

보였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Kramer, 2014, pp. 103-104).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다양한 출산 장려 프로그램, 양성 평등,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94년의 에인절플랜(Angel Plan), 1999년의 뉴에인절플랜(New Angel Plan), 2002년의 플러스원플랜(Plus-One Plan), 2003년의 저출산 대응 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혹은 공급을 능가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보육 시설 부족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1992년에 도입된 부모 휴가 또한 일련의 확대 과정을 거쳤지만 단시간 혹은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사각지대가 크게 남아 있다. 부모 휴가는 최초에는 무급으로 도입되었지만, 1995년 휴가 직전 월 급여의 25% 수준의 유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급여율 인상 조치 과정을 거친 후 2010년 현재 50% 수준인데 이는 여전히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아동수당 또한 최초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고순위 출생(third and higher birth order)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1972년 도입되었는데, 이후 아동수당 지급 기간이 중학교 졸업까지 확대되는 한편 저순위 출생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 또한 인상하였다. 그러나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원액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Tsuya, 2015, pp. 100-102).

기본적으로 일본은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한 제한적이다. 일본 여성은 정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voice strategy) 대신 탈퇴 전략(exit strategy) 방식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여성 의견의

부재는 인구정책 측면에서 여성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정책 영역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세계화, 여성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일본 사회가 경험한 구조적 변화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된다(Kramer, 2014, pp. 106-108).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과거 자민당 정부가 인구정책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비록 과거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또한 인구정책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자민당 정부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치 체제에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뒤에서 살펴볼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대만의 상황은 일본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중국의 인구정책

#### 1. 1970년대 이전 인구정책

1949년 국공 내전 승리 후 중국의 인구정책은 빈번한 정책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초기 마오쩌둥은 인구 증가가 국력의 원천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sup>22)</sup>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증가를 넘어섬에 따라 출산 억제로 입장을 바꾸게 된다(이중희, 2007, p. 296). 당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출

22) 과잉 인구는 자본주의의 착취 시스템의 산물이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대체될 경우 과잉 인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White, 2016, p. 333).

산 억제 정책은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53년 정무원(현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인구 압력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박광준, 오영란, 2011, p. 210), 같은 해 정무원 부총리였던 덩 샤오핑은 1950년 이후 금지된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을 상당히 완화하는 조치를 승인하였다(유연실, 2014, p. 374).

1953년에는 제1차 전국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54년 공표된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는 5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박광준, 오영란, 2011, p. 210). 이에 따라 일군의 학자들이 인구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특히 마인추(馬寅初)는 1957년 제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한 ‘신인구론’에서 중국의 과잉 인구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이경희, 2004, p. 45). 1956년 계획 출산의 교육 지도를 위한 지방 조직을 확립한 후 1957년부터 전면적인 출산 제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중국농업발전12년계획(1956~1967)을 수정하여 출산 제한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 기간 중 다시 인구 증가 방향으로 정책을 회귀하였다(박광준, 오영란, 2011, pp. 210-211).

이후 대약진 운동 기간의 도시 인구 증가 그리고 1960년 전후 대기근 기간 이후 이루어진 인구 증가 현상에 따라 1963년부터 다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64년 국무원은 산아제한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아 제한 기술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출산 억제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이경희, 2004, pp. 48-49; 이중희, 2007, pp. 296-297).<sup>23)</sup>

23) 박광준, 오영란(2011, p. 208)은 중국의 가족계획(계획생육)이 1955~1957년경에 시작되어 대략 25년 후인 1979년경에 확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기간을 출산 억제 정책의 철회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전을 중단하는 잠정적인 논의의 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 2. 만희소(晩稀少) 정책: 1970년대

중국의 출산율은 1970년까지, 대기근 등 위기 동안의 변동을 제외하면, 대략 6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가파른 변동을 보여 1980년 출산율은 2.2명까지 감소하는데, 이러한 10년 기간에 걸친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에 해당한다. 이전에 가장 가파른 감소를 보인 경우는 1947년 4.5명에서 1957년 2명 수준으로 감소한 일본의 사례인데, 이보다 중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Bongaarts and Greenhalgh, 1985, p. 585).

제한적이고 비효과적이었던 초기 출산 억제 정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1970년대 중국의 인구정책은 1970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1960년대 후반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획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이중희, 2007, p. 297).

이에 따라 1971년 시행된 晩稀少 캠페인(later-longer-fewer campaign)은 혼인 시기를 늦추고, 첫째 출산과 후속 출산 간의 터울을 늘리고, 출산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만혼은 통상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남성 28세, 여성 25세, 농촌 지역에서 남성 25세, 여성 23세를 의미하였다. 첫째 출산과 후속 출산 간 터울 확대는 도시 지역에서 4년, 농촌 지역에서 3년 정도로 해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는 초기 농촌 지역에서 3명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2명으로 해석되었지만, 1977년에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2명으로 제한되었다(Bongaarts and Greenhalgh, 1985, p. 586).

### 3.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 1980년대~2000년대

마오쩌둥 사망 후 새롭게 등장한 지도부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1978년 헌법에 가족계획에 대한 국가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1980년의 개정 혼인법은 모든 부부(쌍방)가 피임을 실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78년 중반 경에 결정되어 1979년 초에 발표되었으며, 세기 말까지 전체 인구를 12억 명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초기에 혼인 및 출산 연기도 강조되었지만,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자녀 수를 제한하는 조치에 비해 혼인 및 출산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Bongaarts and Greenhalgh, 1985, p. 587).

1980~1984년은 기존 晚稀少 정책에서 한 자녀 정책으로 계획 출산이 강화되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또한 크게 나타났다. 대중의 반발에 직면하여 1984년 당중앙위원회는 한 자녀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확인하되 세기 말까지 12억 명 수준에서 인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더 유연한 방식의 정책 집행을 허용하였다(Bongaarts and Greenhalgh, 1985, p. 588).

1991년 이후 중국의 인구정책은 큰 변화 없이 이전 시기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1년에는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생육법(中華人民共和國人口與計劃生育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 출산 정책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하였다(이 중희, 2007, p. 3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출산 억제 정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인 방식에 기초하여 추진된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박광준, 오영란, 2011, p. 209).

중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논의된다(대략 1992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전문가 집단은 대략 10년 후인 2000년대 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대략 20년 후인 2010년대 초에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Feng, 2015, pp. 17-20).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출산을 둘러싼 중국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전환을 상당한 정도로 지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유엔(UN)의 2017년 세계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졌으며(2.02), 2000년 1.50, 2010년 1.59, 2015년 1.62 수준으로 추정된다(United Nations, 2017).

#### 4. 단독이태(單獨二胎)-전면이태(全面二胎) 정책: 2010년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전면이태(全面二胎) 정책]. 한 자녀 정책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자본, 자연자원, 소비재 부족에 직면한 계획경제하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임시 조치로 설계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인구와 사회에 관한 이해 없이 대체로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2016년에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되었지만, 정책적 개입이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2013년 11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음에도[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 불구하고 정책 대상 1,100만 부부 중 2015년 8월 기준으로 단지 169만 부부만이 신청함으로써(15.4%) 이미 중국의 저출산 현상이 정책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들의 선택이 반영된 측면이 더욱 강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Feng, Gu, Cai, 2016, pp. 83-85). 2018년에는 국무원 조

직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연합뉴스, 2018) 사실상 1980년대 이후의 계획생육 정책이 폐기되었다.

1979년 이후 진행된 한 자녀 정책의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한 자녀 정책의 효과가 경제 및 정치 개혁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출산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출산력 변천은 이미 한 자녀 정책 출범 이전인 1970년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출산에 대한 한 자녀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평가하기 쉽지 않은 반면 White(2016, pp. 352-360)는 다른 영역에서의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정책하의 중국의 가족계획은 출산하는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자발성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였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정책이다. 둘째, 한 자녀 정책의 시대별 및 지역별 추진 방식에 따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세대 간 가족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도시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대부분 한 자녀 가족인 반면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들은 대체로 농촌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또한 세대를 가로질러 가족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축소되는 한편, 세대 간 성장 조건 및 가치관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가의 승인 없이 출생한 자녀(黑孩子)는 공식적인 행정통계에 등록되지 않아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 여아 살해나 성감별에 기초한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음이 지적되고 있다.

## 제4절 대만의 인구정책

### 1. 출산 억제 정책: 1960년대~1980년대 중반

국민당 정부가 내전에서 패배한 후 장제스 정부는 1953년 출산 장려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이는 대만 인구 증가가 국민당 정부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본토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Liu, 2001, p. 67). 참고로,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1950년 6.03에서 1951년 7.04로 정점을 기록하였다(Lee and Lin, 2016, pp. 260-26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농촌재건위원회가 초빙한 바클레이(George W. Barclay)는 대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출산 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출산 억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촌재건위원회는 가족계획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가족계획에 대한 저항 또한 지속되었다(Liu, 2001, pp. 67-68). 1959년 농촌재건위원회 의장이었던 몰린(Chiang Molin) 박사는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후속적으로 1961년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미국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에 기초하여 대만 인구학 센터(Taiwan population Studies Center)가 설립되어 인구와 발전 전략의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hen, 2012, p. 84).

1960년대 들어 경제발전 측면에서 인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3년 12월 장제스는 처음으로 대만의 인구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음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대만의 인구정책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1966년에는 가족계획이 제4차경제계획(1965-1968년)의 핵심 요소로 설정된다(Liu, 2001, pp. 70-71). 1968년 5월 타이베이에서 동아시아 국제 인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대만 정부는 1950년대부터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회계연도별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표명한다. 이에 따라, 1969년 4월 인구정책 관련 정부 지침이 마련되어 다양한 가족계획 조치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Liu, 2001, p. 73).

대만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2%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는 1979년에 달성된다. 같은 해 장징궈는 향후 10년 내에 인구 증가율을 1.25%로 낮추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우생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렇게 1989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1.25% 아래로 낮추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983년에 인구정책 지침을 개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는 인구 증가율이 1.10%까지 떨어진 1986년에 조기 달성된다. 이렇게 정책 목표를 3년 일찍 달성한 배경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출산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지적된다(Liu, 2001, p. 74). 대만의 우생보호법은 인공임신중절을 의료적 사유에 한정하여 1985년에야 합법화되었지만(Liu, 2001, p. 74),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 부문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주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Chen, 2012, p. 84).

## 2. 인구정책 전환기: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대만은 1984년 합계출산율이 2.05로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다. 이

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인구학자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구정책의 주된 관심이 출산 통제에서 인구 고령화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Lee, 2009, p. 79; Lee and Lin, 2016, p. 259). 이에 따라 1988년부터 대만의 국가 인구정책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0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0.8% 아래로 낮추는 한편, 1988년 1.8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을 점진적으로 2.1까지 상승시켜 2025년경에 제로(zero) 인구 증가율을 달성하고자 하였다(Liu, 2001, pp. 74-75). 참고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1986년 1.656에서 1987년 1.683으로 소폭 증가한 후 1988년 1.831까지 상승하였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후속적으로 마련된 1992년의 인구정책 지침은 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대신 합리적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992년 인구정책 지침이 학술적 측면은 반영하였지만, 실질적인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조치들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일반 대중(특히, 고등교육 수료자)의 경우 여전히 출산 억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Chen, 2012, p. 84). 대만은 1985-1996년 합계출산율을 1.7-1.8 사이에서 유지하였지만, 1998년부터 가파른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이에 따라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환경주의 및 페미니즘 진영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페미니즘이 출산 장려 정책을,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인식함을 비판한 반면 환경주의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과거의 과잉 인구가 환경에 초래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즘과 환경주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출산 장려 정책의 시행을 지

연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Chen, 2012, p. 84; Lee, 2009; pp. 79-81; Lee and Lin, 2016, pp. 270-271).<sup>24)</sup>

### 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2000년대 중반~현재

1985~1996년에 1.7-1.8로 유지되던 합계출산율은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된다. 후속적으로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초저출산의 준거점으로 논의되는 1.3 아래인 1.23까지 떨어졌으며, 201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95로 비도시 지역 인구가 4분의 1 이상인 국가 중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Lee and Lin, 2016, p. 260). 이러한 인구학적 배경하에서 대만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학자는 물론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활동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역할과 관련하여 FWRPD(Foundation for Women Right Promotion and Development)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5년 FWRPD는 다양한 여성 집단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대만 인구정책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모든 존재의 공존 가치를 강조하였다. 2004년 이후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 기초하여 국가 인구정책 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이 2006년 6월에 이루어진다(Lee, 2009, p. 81).

이렇게 대만의 인구정책 지침은 페미니즘과 환경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24) 대만의 민주진보당은 2000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반세기 이상 지속된 국민당의 장기 집권을 종식하게 된다. 1990년대 일부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민주진보당을 지지했는데, 이들은 민주진보당 집권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Lin, 2016, p. 271). 잘 알려져 있듯이, 2008년에 국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지만, 2016년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이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 변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에 기초하여 2006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2006년의 개정 인구정책 지침은 기존의 인구 증가와 관련된 논의 대신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구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태학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심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가족과 재생산 측면에서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인구-건강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지침은 또한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였다(Lee, 2009, p. 81).

심각한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만들기 위해 대만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MOI)는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인구정책 백서 발간을 추진하여 2008년 5월에 발표하였다. 2008년 인구정책 백서는 2006년의 인구정책 지침과 기본 방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백서는 대만 사회에 현안으로 등장한 세 가지 이슈와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하였다. 인구 고령화 완화 및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출산력 관련 조치,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욕구 및 삶의 질 개선 관련 조치, 인권, 사회복지, 국가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 이민자의 관리와 관련된 조치들이 바로 그것이다(Lee, 2009, p. 81). 비록 구체적인 출산율 수준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로 (1) 종합적인 보육 체계 구축, (2) 모성 및 부성 휴가 제도 개선, (3) 피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4) 자녀 양육 친화적 근로 환경 구축, (5) 생식건강 관련 보건의료 체계 개선, (6) 아동의 권리 및 아동 보호 체계 개선, (7) 혼인 기회 제공 및 공공재로서의 아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Lee, 2009, pp. 82-84).

2008년 도입된 인구정책 백서는 대만 인구정책이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과 달리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

에 새로운 인구정책 지침은 기존의 양적 지표들을 거부하는 한편 생태학적 균형과 사회 정의를 포함하여 인구와 발전을 둘러싼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2008년 인구정책 백서는 구체적인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출산율 감소 추세에서 반등시키는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2013년 판 인구정책 백서에는 향후 10년 동안 인구의 자연 증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출생 건수를 목표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연간 18만 건)(Lee and Lin, 2016, p. 272). 이렇게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인구정책 백서가 출생 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인구정책이 1994년 카이로 국제 인구개발회의 이후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인구정책 백서가 민주진보당(2000~2008년)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2013년 인구정책 백서는 국민당(2008~2016년) 집권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였는데, 민주진보당은 기존 국민당 정부하에서 추진된 일부 사회정책들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국민당 정부의 인구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족 가치의 재건을 강조한 반면 민주진보당 정부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더 진보적 성격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진보당의 정책들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Hsueh, 2018).

비록 저출산에 직면하여 2000년대 이후 추진된 대만의 인구정책이 과거의 인구정책 패러다임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이념을 가로질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지만, 기존 발전 국가 모델하에서 지연되었던 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정책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대만 인구정책이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제5절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 1. 독립국가 이전 인구정책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는 싱가포르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의 야당 없이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Kramer, 2014, p. 160). 일본, 대만, 한국처럼 과거에 동일하게 발전국가 모델을 취한 국가들이 현재 보여 주고 있는 모습과 달리 싱가포르는 발전국가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정책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립과 가족 부양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시민 (productive citizen)’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스웨덴 등 유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와는 명확히 다르고 할 수 있다(Sun, 2012, p. 68).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인종-민족 간 조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구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수립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인종-민족 간 조화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인종-민족에 기초한 전통적인 문화를 대신하여 경제적 합리성과 능

력주의를 강조하는 국가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Drakakis-Smith and Graham, 1996, p. 71).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외형적인’ 인종-민족 간 조화는 인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이 지적된다. 강제에 의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조화가 달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인종-민족 간 조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1960년대 초 차이나타운을 근거지로 하여 공산주의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인종 문제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인종-민족 문제가 싱가포르 국가 건설 과정에서 근본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 아파트를 제공하고자 한 대규모 공공 주택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도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민족 간 갈등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공공 주택 단지별로 국가 수준의 인종-민족 구성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준다(Kramer, 2014, pp. 113-114).

싱가포르는 1960년대 중반까지 가족계획 혹은 출산 통제 관련 공식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40년대 말부터 자발적 형식의 가족계획이 도입되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가족계획 관련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59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 선거 공약의 일부로 구체화되었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인민행동당의 5개년(1959~1964년) 정책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Yap, 2001, pp. 91-92). 참고로, 출산율은 1947년 6.55에서 1964년 4.95까지 감소하였지만(Kramer, 2014, p. 116),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 출산 억제 정책: 196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출산 억제 정책 기간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하에 가족계획 사업이 강하게 추진되는 특징을 보였다. 1966년 싱가포르 가족계획인구위원회(Singapore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Board)가 설립됨과 함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민간 조직인 가족계획협회(Family Planning Association)의 지속적인 요청 외에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독립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의 분리 그리고 천연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인구 증가율은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인구 증가율이 과거의 4~5% 수준에 비해 감소했지만, 독립 직전에도 대략 2.5%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주목한 것이 바로 출산 통제라고 할 수 있다 (Yap, 2001, pp. 91-94).

1966년부터 가족계획 5개년 사업이 추진되었고,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1975년 대체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는 예정보다 5년 빨리 목표를 달성한 것에 해당한다. 가족계획 5개년 사업은 제3차 사업이 끝난 198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에는 불임 수술이 합법화되었으며, 1975년에는 불임 수술 사유에서의 제약 또한 없어진다. 인공임신중절도 1970년 합법화되어 1975년에 자유화되었다(Yap, 2001, pp. 94-96).

1969년 인공임신중절 법안과 관련된 토론에서 리관유 총리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에서의 출산율이 높을 경우 싱가포르 인구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것에 관한 우려를 포함으로써 싱가포르 출산 억제 정책에서 우생학적 목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Kramer, 2014, pp. 116-117). 1970년대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함에 따라 1984년에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와 같은 강한 출산 억제 조치 대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선별적 조치를 도입하였다.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대졸 이상 부모(여성)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Graduate Mother Scheme).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부모(여성)에게 추가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 여성들이 셋째 이상 출산을 할 경우 병원비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저학력, 저소득 부모가 둘째 출산 이후 불임 수술을 할 경우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Graduate Mother Scheme 프로그램은 우생학적 논란 그리고 1984년 선거에서의 야당의 성공 등으로 인해 1985년에 폐기된다. 그러나 싱가포르 인구정책에서 우생학적 고려는 명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ramer, 2014, p. 119; Yap, 2001, pp. 97-98).

### 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1980년대 중반~현재

싱가포르의 출산 억제 정책은 1986년 6월 국가 가족계획을 주도한 싱가포르 가족계획연구위원회(SFPPB)가 해체됨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된다(Yap, 2001, p. 98). 1987년 3월 이후 싱가포르 인구정책(New Population Policy)은 공식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3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결혼율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인구정책의 핵

심 요소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일련의 재정적 및 비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 환급 및 소득 공제 혜택, 육아비 지원 등 일-가정 갈등 완화 조치,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및 교육 관련 우선권 부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저소득, 저학력 부부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을 통해 자녀를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주택 및 자녀 교육 관련 유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Yap, 2001, pp. 98-99). 이는 싱가포르 인구정책에서 우생학적 고려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87년의 출산 장려 정책들은 2004년에 정교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공공 주택에 대한 우선권 제공, 유급 모성 휴가 기간 확대(12주), 자녀에 대한 소득세 공제 및 세금 환급, 주당 5일 근무 시행, 결혼 및 부성 휴가(3일) 시행, 자녀 돌봄 휴가(2일), 여성 공무원 유연 근무, 출산 수당, 자녀 보조금 및 아동 보육 보조금 지급, 아동 보육 관련 가사 도우미 및 조부모 관련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관련 경제적 유인 제공에 한정됨으로써 출산과 관련된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현금 지급이 큰 역할을 하는 반면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비록 이들 출산 관련 조치들이, 자산조사 방식 대신,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소득이나 교육 등에서의 중상층을 대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Kramer, 2014, p. 120).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싱가포르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종-민족 구성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싱가포

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싱가포르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민족(중국계, 말레이계, 인디아계, 기타)의 출산율이 상이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Kramer, 2014, p. 115). 예컨대, 싱가포르 2016년 출산율은 2015년의 1.24에 비해 다소 하락한 1.20 수준이지만, 인종-민족별로 말레이계 1.80, 중국계 1.07, 인디아계 1.04로 격차를 보인다(Strategy Group, 2017, p. 12).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민이 싱가포르 인구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민은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해 온 우생학적 측면과도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계는 교육 수준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민이 우생학적 고려를 충족할 수 있는 동시에 인종-민족 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 정책에 수반된 위험도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이민은 싱가포르 2011년 5월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야당의 의회 진입이 쉽지 않은 싱가포르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87석 중 6석만을 가져가는 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전체 투표의 대략 40%를 획득하는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민이 인구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Kramer, 2014, pp. 126-127).

## 제6절 한국의 인구정책

### 1. 출산 억제 정책: 1960년대~1980년대 후반

한국의 인구정책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연구(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로 간략한 수준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사망률은 20세기 초반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전쟁 기간에 유엔(UN)군에 의한 항생제 도입은 영유아 및 아동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출산 상황에서 사망률의 감소는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특히 1955~1960년 인구 증가율은 2.9%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되었기에 경제발전, 산업화, 출산력 변화에서 정부의 역할이 주효했음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되지만 정부 개입의 효과만으로 귀착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 인구이동이나 인구분산 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출산력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Kwon, 2001, p. 40).

한국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시작 시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출산력 변천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정부 정책이 인식된다. 그러나 1960년경 인구 압력이 컸으며, 소가족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산력 변천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족계획이 농촌 지역부터 추진되었고 도시-농촌 간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출산율 감소는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더 가파르게 감소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당국과 대부분의 인구학자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 소가족 규범으로의 이행 과정이 매우 급격한 동시에 저항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소가족 규범에 유리한 사회적 조건이 가족계획 사업 추진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Kwon, 2001, p. 59, p.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임 실천을 둘러싼 광범위한 장애를 제거

하고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Kwon, 2001, p. 41). 한국의 가족계획은 경제개발 목적하에서 추진되었으며, 표면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지향했지만 실제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족계획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출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의 지원 없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은 196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가족계획 사업은 농촌에서 우선 시행된 후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농촌 및 도시 빈민 지역의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후속적으로 이들 지역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였다(Kwon, 2001, pp. 42-43). 구체적으로, 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제69차 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결의가 있었다. 1960~1965년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준비기의 성격을 지니는데, 특히 1962~1964년에 조직과 인력을 크게 정비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 53).

가족계획사업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확대기에 진입하는데, 이 기간은 제2~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이상 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는 1966년 4명에서 1981년 2.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5년간 피임 실천율도 20%에서 56%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966년 5.4에서 1981년 2.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인구 증가율 또한 1966년의 2.6%에서 1981년 1.6%로 1%포인트 감소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p. 57-58).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집권한

신군부 정권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기로 진입함에 따른 인구 증가를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가족계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Kwon, 2001, p. 45). 구체적으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 합계출산율을 1981년 2.7에서 1988년까지 대체 수준으로 낮추어 2000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1%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92).

1982년부터 출산 억제 정책이 강화된 후 피임실천율은 1982년 56%에서 1986년 67%까지 증가하였다. 1977~1981년에 대략 109만 건이었던 불임수술은 1982~1986년에 173만 건으로 58.7% 증가하였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에서 설정된 1988년 합계출산율 2.1 목표는 1983년에 조기 실현 되었으며, 1986년 인구 증가율도 당초 1.49% 목표를 초과하여 1.25%까지 낮아졌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110).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60~1965년에 결혼 연기와 인공임신중절이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1965년 이후에는 가족계획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65~1970년에는 결혼 연기 및 인공임신중절과 함께 피임이 출산율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won, 2001, p. 51).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감소는 1960년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 1960년대의 출산율 감소가 전통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강한 인구 압력하에서 이루어진 반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생존의 문제 대신 자녀의 미래에 관한 부모의 관심이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복지 정책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교

육 기회 및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추가적으로 출산력 변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won, 2001, pp. 53-54).

## 2. 인구정책 전환기: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1980년대 초반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하락하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향후 인구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출산 억제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동시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출산 억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1976년부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인구정책심의위원회와 인구정책실무위원회가 1990년에 폐지되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116). 그러나 보건 사회부의 가족계획사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94년 카이로(Cairo) 국제인구개발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1995년 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발전위원회와 인구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을 심의하였다. 1995년 인구정책발전위원회는 기존 출산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사업에 포함하여 인구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 전환을 심의하였으며, 이러한 방향 전환은 1996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식화되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118, p. 127).

이른바 ‘인구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기간(1996~2004년)으로 명명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기간은 인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145). 이는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1993~1998년)가 정치 부문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10여 년 동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구 문제가 더 이상 과거 고출산율 시대와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p. 125-126).

이렇게 1990년대 중반에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인구정책의 향후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및 WTO 가입으로 점차 자유화되었으며, 특히 1997년 말의 IMF 경제 위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복지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험한 1990년대 말 경제 위기는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장경섭, 2011, p. 72). 이후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출산율이 1.3 아래로 떨어지는 이른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김대중 정부(1998~2003년)도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로 인구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2000년대 중반~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등장한 노무현 정부(2003~2008년)는 저출산의 원인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4년에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160). 잘 알려져 있듯이, 이후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

화 문제 대응의 법적 기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매 5년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추진된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산율 추세의 안정화 혹은 반등의 징후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또다시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출생아 수 또한 40만 명 아래로 하락하였다. 2018년에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본 장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구정책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이 대체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유사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국가별 특수성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인구정책 방향 모색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을 비교하여 종합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장에서 검토한 국가들 중 일본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인구변천

을 경험한 국가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전후 재건이 끝난 1950년대 후반에 이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195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은 일본이 전후 재건을 마무리하고 경제 호황을 누리던 기간에 해당하는데, 결국 전후 일본이 보여 준 출산력 패턴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국가 주도의 출산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출산력 변천은, 서구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대신 사회 경제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 억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주도의 자유방임적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출산율 감소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계획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이 큰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역할은 가족계획과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제도적(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본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지 대략 20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초반은 이미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5 아래로 떨어지고 후속적으로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시점으로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저출산 대응 정책이 늦게 추진된 것이다. 일본이 보인 이러한 패턴은 기본적으로 과거 출산 억제 시기에 정부가 보인 자유방임적 접근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이는 일정 부분 지난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의 출산 장려 관련 전체주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일본 인구정책은, 비록 정책 부재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대응 방식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반면 복지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 운영 원리는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 등 핵심 집단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선진국 인구정책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인구정책이 보여 주는 뚜렷한 방향성 혹은 철학의 부재는 향후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인구정책 형성 및 전개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들은 일본에 비해 경제발전 측면에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출산 억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대만과 한국은 1980년대 전반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함에 따라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인구정책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 위기 및 이에 동반된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진행된 200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결국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 조치들이 검토된 시점은 자유방임적 정책 지향이 강한 일본과 유사하게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것이다.

다른 한편 이들 두 국가는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국가들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은 1980년대 신군부 정권하의 강한 출산 억제 정책 그리고 1990년대 말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 전환을 검토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한 1980년대 초반 이후 인구정책 방향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한편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말까지 출산율이 1.7~1.8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만은 페미니즘과 환경주의 진영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으며,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대응 정책 논의에 이들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이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한국에 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 추세를 완화하거나 안정화하는 것 이외의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2008년 인구정책 백서와 달리 2013년 백서에서는 연간 출생 진수를 목표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만의 인구정책이 과연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는가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 2013년의 인구정책 백서가 과거 2006년 및 2008년과는 이념적으로 상이한 정부(국민당)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재집권에 성공한 민주진보당하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가로질러, 장기적인 안목하에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보와 보수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만의 인구정책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한국의 인구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 중반 완전한 독립 국가를 달성한 후부터 강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하락한 후 대만이나 한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1980년대 중후반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민족 구성 그리고 인구정책에서의 우생학적 고려로 인해 출산 장려 정책을 둘러싼 이슈는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체제 측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는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Holliday, 2005), 1990년대 말 이후 복지 부문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복지 부문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재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인구정책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도 과거 진보 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25)</sup>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현재까지 인민행동당(PAP) 중심의 권위주의 정부가 장기 집권 하고 있는 관계로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정책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에 비해 중국은 체제상의 특징으로 인해 1970년대 이전에는 인구정책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큰 혼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출산 억제로 인구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출산 억제 정책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출산 억제 정책이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되었지만, 강력한 국가

25) 물론 정치적 지형 측면에서 볼 때 일본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입 방식을 통해 1990년대 초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하락한 1990년대 초반 이후 20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도 인구정책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 과거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이었던 한 자녀 정책에서 후퇴하여 2013년 단독이태(單獨二胎) 그리고 2016년 전면이태(全面二胎)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정도로 인권(human rights)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의 출산력 변천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과거 인구정책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인구통계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정책적 대응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인구정책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인구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구통계 자료의 구축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체계적인 인구통계 구축과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 출산 관련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국가별 인구정책 사례 분석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 주는 특징적인 사항들을 종합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분석 결과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들의 출산 연기, 경제적 환경의 악화, 복지 정책의 후퇴 등에 따라 기간 합계출산율이 등락하고는 있다. 하지만 여성의 완결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은 여성들이 미루어 왔던 출산을 이후 연령대에서 실현함으로써 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복지 정책이 후퇴하는 시기에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지만 궁극적으로 2명까지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고찰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들은 출산율 연기함과 동시에 연기한 출산을 이후 연령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출산량 자체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특히 급속하게 출산율이 하락한 한국은 최근 코호트에 와서 코호트 완결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이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자’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자녀 출산

이 여전히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와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출산율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퍼지셋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 비교 관점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합원인 조건을 분석한 결과, 어떤 하나의 요인이 독자적으로 출산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않고, 동일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각 국가의 출산 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는 원인집합 배열은 ‘성별 분업에 반대하고, 자녀 가치가 높으며, 자녀 양육 부담이 낮고, 출산과 결혼의 연계가 느슨하며,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적은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원인집합 배열은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이 높고, 자녀 가치가 낮고, 자녀 양육 부담이 크고,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크며,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만 다른 요인에서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낮아져야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녀의 질(quality)에 영향을 주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있어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출산력 변천을 주도한 일본은 상대적으로 국가 주도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출산 억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자유방임적인 접근 방식은 후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체되는 동시에 그 대응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에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측면에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형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지만, 집권 정부의 이념 지향 차이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진보와 보수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만의 인구정책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한국의 인구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인구정책에서 우생학적 고려가 강하며 인민행동당(PAP)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과거의 발전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반면 싱가포르는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초기 인구정책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큰 혼선을 보였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강도는 가장 강하였다. 2013년과 2016년 이후 한 자녀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구 통계 자료가 미비한 것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초저출산 현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구해 온 정책적인 방안이 유럽 국가 등 다른 권역에 속한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초저출산 현상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특수성과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의 특수성과 유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이 국가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대만과 한국은 대체로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발전국가 모델이 쇠퇴하는 한편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싱가포르의 여전히 발전국가 모델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발전국가 모델과 마찬가지로 고출산 시기에 국가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출산 억제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발전국가 모델과 유사한 측면도 보여 주었다.<sup>26)</sup>

둘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에서는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저출산 문

26) 중국적 특수성 그리고 세계화 흐름 속에서 현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 이후의 성장 과정은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국가 모델과 친화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윤상우, 2005).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발전국가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예컨대, 이정구, 2012)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과 관련하여 윤상우(2018)는 경제성장의 핵심을 민간 기업에서 국유 기업으로 대체하는 한편 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였다.

제 및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강한 국가가 존재하며, 복지 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복지 체제를 생산주의(productivism)로 분류하는 Holliday(2005)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일정 정도 변화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관측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물론 최근 들어 (동)아시아 복지 체제의 특수성 혹은 예외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방향 전환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셋째,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여성들의 고등교육 기회 및 노동 시장 참여 증가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반면 양성 불평등, 특히 자녀 양육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과거의 출산 억제 시대와 달리 최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 장려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Kramer(2014)는 이러한 사회는 특히 출산 파업(birth strike)이 효과적인 저항의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중심의 사회 운영 원리를 구축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주의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사회재생산이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 큰 위기를 초래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후속적으로 재생산 과정에서 성 불평등 강화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국가들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 체제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재생산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족, 특히 여성이 부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여 출산 장려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은 물론 우생학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사례는 동아시아 인구정책이 지닌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대만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의 인구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삶의 질 대신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석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초저출산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 수립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주의적인 가치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어 기존에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조와 내용에서 근본적인

27) 장경섭(2011)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재생산 위기를 가족에 대한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의존성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초래한 위험가족(risk family)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의 변화와 확대도 필요하지만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국가 발전’ 혹은 ‘선진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sup>28)</sup> 이는 한국 인구정책이 발전주의적인 시각하에 정책을 추진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전주의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적인 가치는 아직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가치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자원 마련에 대한 당위성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단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가치 확립이 필요하다.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8) 2006년부터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국가 발전을 명백한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 구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 국가 도약’,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2.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을 2013년부터 보편적으로 확대하였다.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아동 수당의 도입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늦은 감이 있고 지원 대상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주로 취약한 가정을 중심으로 하였던 아동과 가족 대상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정책이 잔여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어 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자녀 양육 부모들이 재정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정책과 서비스 정책은 확대하였지만 자녀 양육을 둘러싼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현금 혹은 서비스 급여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을 둘러싼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

조 개혁일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되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동 수당 등 현금 지원보다는 자녀 교육에 부모들이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감소하기 위해 공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적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보육 정책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은 6시간, 맞벌이 여성은 종일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맞벌이 여성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적인 부담이 여전히 크다. 보육 서비스의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이 자녀 양육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은 보육 서비스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장시간 근로와 탄력적이지 못한 근로 환경 등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서구 유럽 국가의 경우 자녀 양육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직장에서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자녀 양육을 위하여 개인의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등 자녀 양육을 둘러싼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후에야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변화는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용이하지는 않다. 교육 체계와 노동시장 체계의 변화는 단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전반에 걸쳐 다른 영역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 양육을 둘러싼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로 인해 미칠 사회적인 여파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전반적인 사회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응 추진

출산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 국가는 가족 정책, 사회 보험 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 기본적인 사회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명백한 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지향성을 정책 내용 안에 담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을 이미 경험하였고 심각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구 이슈에 개입함으로써 출산율을 현격하게 하락시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성공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적은 수의 자녀

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며 국가가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하는 것에 국민들의 반대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작금의 저출산 시대에 와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고, 개인의 출산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도 크다. 정책 결정자들은 과거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통해 쉽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 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안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유인이 포함되어 자녀를 낳는 것이 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을 지급하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면, 다자녀 가정에게 더 큰 연금 크레디트를 제공하여 자녀 많은 가정이 노후에 더 많은 연금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강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 사회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하듯이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전 정부 부처에 걸쳐 다양하다.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부서들을 총괄하는 지휘 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가족아동고령자고등심의위원회의 가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가족심의위원회는 정부, 고용주, 노동자, 학계 대표가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언한다. 위원회가 회의만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하여 보고서를 집필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정부 부처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계의 대표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하나로 수렴된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언을 정부에 건의한다. 위원회가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저출산 이슈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자문 기구로서 실질적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5.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미래 세대가 부담할 사회적 부양비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미래 세대의 건강함 발달을 위해서 현세대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세대 간 이전이 통합적인 방향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세대 통합적인 재정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칭 ‘저출산 대응 특별 회계’를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대응 특별 회계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sin tax) 형태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스웨덴 방식의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데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장세 부과나 부모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특히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짊어질 사회적 부양비 문제가 점점 가까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김영미, 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31(3), 1-30.
- 민기채. (2014).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44, 223-259.
- 박광준, 오영란. (2011).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한국사회정책**, 18(4), 203-235.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신윤정, 박종서, 김은정, 기재량, 최인선. (20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합뉴스. (2018). 중국 '가족계획 정책부서' 폐지... "산아제한 완전철폐 신호". <https://m.yna.co.kr/view/AKR20180912053400009>에서 2018.11.28. 인출.
- 유연실. (2014).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1949~58) 인구정책의 변화. **중국사연구**, 89, 359-392.
- \_\_\_\_\_. (2017). 근대 동아시아 마거릿 생어의 산아제한 담론 수용: 1922년 마거릿 생어의 중·일 방문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09, 111-166.
- 윤상우. (2005). '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한국사회학**, 39(2), 135-162.
- \_\_\_\_\_. (2018).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아시아리뷰**, 7(2), 33-61.
- 이경희. (2004).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사회이론**, 26, 42-74.
-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 杜鹏, 陆杰华, 奥山正司, 高橋泉. (2013). **한·중·일 인구 동향과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윤. (2014).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 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정구. (2012).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태연구**, 19(2), 69-103.
- 이중희. (2007). 중국의 인구 정책과 고령화의 추세, 원인 및 특성. **중국학**, 29, 293-318.
-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 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통계청. (2018a). 주민등록인구현황 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 www.kosis.kr에서 2018.2.13. 인출.
- 통계청. (2018b).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자료. www.kosis.kr에서 2018.2.13. 인출.
- 통계청. (2018c).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1985, 1990, 2005, 2010, 2015). 2018.3.5.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인구정책 30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伊佐智子. (2009).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젠더와 문화**, 2(2), 131-162.
- Anderson, T., Kohler, H. P.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Bongaarts, J. and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ongaarts, J. and Greenhalgh, S. (1985). An alternative to the one-child policy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4), pp.585-617.
- Bongaarts, J. and Sobotka, T. (2012).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 review*, 38(1), 83-120.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2.00473.x](https://doi.org/10.1111/j.1728-4457.2012.00473.x)
- Bumpass, L., Rindfuss, R. R., Choe, M. K., Tsuya, N. O.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The Case of Japan*.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
- Chen, Y-H. (2012). Trends in low fertility and polity responses in Taiw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1), 78-88.
- Chuan, K. E. (2010). Will Singapore's fertility rise in the near future? A cohort analysis of fertility. *Asian Population Studies*, 8(1), 69-82.
- De Laat, J., Sevilla-Sanz, A. (2011). The Fertility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puzzle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Men's Home Production. *Feminist Economics*, 17(2), 87-119. DOI: 10.1080/13545701.2011.573484
-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7). Population trends 2017.
- Drakakis-Smith, D., Graham, E. (1996). Shaping the nation state: Ethnicity, class and the new population polic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2, pp.69-89.
- Feng, W. (2015). China's long road toward recognition of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Rindfuss, R. R., Choe, M. K. (eds.). *Low and Low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87-106.
- Feng, W., Gu, B., Cai, Y. (2016). The end of China's one-child policy. *Studies in Family Planning*, 47(1), pp.83-86.
- Frejka, T. (2017). The Fertility Transition Revisited: A Cohort Perspective.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2, 89-116.
- Frejka, T.,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103-132.
- Frejka, T., Gietel-Basten, S. (2016).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1990.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1(1), 3-56.
- Frejka, T., Jones, G. W., Sardon, J. P.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Frejka, T., Sardon, J. P. (2004). *Childbearing Trends and Prospects in Low-Fertility Countries: A Cohort Analysis*, *European Studies of Popul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Population Stud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authier, A. H. (2016). *Social norms,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low-fertility countries*. In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ast Asia*. Springer.
- Goldstein, J. R., Sobotka, T., Jasilioniene, A.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699.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9.00304.x>
- Goto, A., Fujiyama-Koriyama, C., Fukao, A., Reich, M. R. (2000). Abortion trends in Japan, 1975-95. *Studies in Family Planning*, 31(4), pp.301-308.
- Holliday, I. (2005). East Asian social polic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farewell to productivism? *Policy and Politics*, 33(1), 145-162.
- Hsueh, J. C. T. (2018). *How Taiwan boosted fertility*.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https://ifstudies.org/blog/how-taiwan-boosted-fertility>에서 2018. 5. 31. 인출.
- Human Fertility Database(HFD). (2018).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and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 <http://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 2. 13. 인출.

- Inoue, S. (2001).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Japan,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23-37.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2012). 가족 및 변화하는 성 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 <http://w.issp.org>에서 2018년 5월 17일 인출.
- Jones, G.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Jones, G. W., Straughan, P. T., Chan, A. W. M. eds. (2008).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n countries: Causes and policy responses*. 지역: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Kohler, H-P., Billari, F. C., Ortega, H.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ramer, S. P. (2014). *The Other Population Crisis: What Governments Can Do about Falling Birth Rat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won, T-W. (2001).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39-64.
- Lee, M. (2009). Transition to below replacement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Taiw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1), pp.71-86.
- Lee, M., Lin, Y.-H. (2016). Transition from anti-natalist to pro-nalist policies in Taiwan, in Rindfuss, R. R., Choe, M. K.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259-281.

Lesthaeghe, R. (2001).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Recent fertility trends and forecasts in six Western Europea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IUSSP Seminar 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Japan, 21-23 March (also available as IPD Working paper 2001-01 at <http://www.vub.ac.be/soco/index.htm>).

Lexis, W. (1975). *Einleitung in die Theorie der Bevölkerungsstatistik.* Strassburg, K. J. Trübner.

Liu, P. K. C. (2001). Population policy and programs in Taiwan,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65-87.

McDonald, P.(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Washington, DC: Springer.

Myrskylä, M., Goldstein, J. R., Cheng, Y-H. A. (2013). New Cohort Fertility Forecasts for the Developed Worl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1-57.

Ní Bhrolcháin, M., Beaujouan, É. (2012). Fertility postponement is largely due to rising educational enrolment. *Journal of Demography*, 66(3), 311-327.

OECD. (2018).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년 4월 11일 인출.

\_\_\_\_\_. (2014).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http://www.oecd.org/els/family/)

- database.htm에서 2018년 9월 8일 인출.
- Ogino, M. (2016). From abortion to ART: A history of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the women's reproductive rights movement in Japan after World War II, in Solinger, R., Nakachi, M. (eds.). *Reproductive States: Global Perspectives on the Invention and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98-123.
- Ragin, C. (2000). *Fuss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therford, R. D., Ogawa, N., Matsukura, R. (2001).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p.65-102.
- Rindfuss, R. R. and Choe, M. K. (Edit).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 \_\_\_\_\_.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 Ryder, N. B. (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Mason W. M., Fienberg S. E. (eds).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Springer. doi: [https://doi.org/10.1007/978-1-4613-8536-3\\_2](https://doi.org/10.1007/978-1-4613-8536-3_2)
- Shin, YJ., Song, MY., Kim, SW, Ma, C., Tabuchi, R., Teng, Y. M. . . . Anh, D. N. (2015).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2), 195-220. doi:[https://doi.org/10.1111/j.1728-4457.2004.010\\_1.x](https://doi.org/10.1111/j.1728-4457.2004.010_1.x)

- \_\_\_\_\_.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 Biosoc. Sci.*, 49, S20-S45.
- Sobotka, T., Zeman, K., Lesthaeghe, R., Frejka, T. (2011).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Fertility: New Analytical and Projection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European Demographic Research Paper 2011-2*,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Vienna.
- Sobotka, T., Zeman, K., Lesthaeghe, R., Frejka, T., Neels, K. (2012).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Fertility: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in a European Context.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6, 417-452.
- Strategy Group. (2017). *Population in Brief 2017*. Prime Minister's Office. Government of Singapore.
- Sun, S. H. (2012).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Making Future Citizens*. New York: Routledge.
- Tan, P. L., Morgan, S. P., Zagheni, E. (2016). A case for “reverse one-child”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Examining the link between education costs and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 327-350.
- Tsuya, N. O. (2015).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Japan: Patterns,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in Rindfuss, R. R., Choe, M. K. (eds.). *Low and Low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87-106.
- United Nations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DVD>에서 2018. 5. 31. 인출.

- Yap, M. T. (2001).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Singapore,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89-113.
- Yoo, S. H., Sobotka, T. (2017). Ultra-low fertility in Korea: The role of tempo effec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working paper, 1-20.
- Westley, S. B., Choe, M. K., Retherford, R. D. (2010). Very low fertility in Asia: Is there a problem? Can it be solved? *AsiaPacific Issue*, 94, 1-12.
- White, T. (2016). China's population policy in historical context, in Solinger, R., Nakachi, M. (eds.). *Reproductive States: Global Perspectives on the Invention and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29-368.
- Zeman, K., Beaujouan, É., Brzozowska, Z.,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pp. 651-690.



<부표 1>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1950~2015)

연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1950	6.67	6.90	3.44	5.02	6.49	4.96
1951	6.47	6.86	3.31	5.21	6.54	5.08
1952	6.11	6.77	3.05	5.56	6.62	5.31
1953	5.83	6.68	2.82	5.85	6.66	5.52
1954	5.62	6.58	2.63	6.06	6.66	5.70
1955	5.48	6.46	2.46	6.22	6.62	5.86
1956	5.42	6.34	2.32	6.31	6.54	6.00
1957	5.42	6.21	2.21	6.34	6.42	6.12
1958	5.48	6.07	2.13	6.31	6.25	6.21
1959	5.60	5.93	2.07	6.22	6.06	6.29
1960	5.75	5.77	2.04	6.10	5.82	6.35
1961	5.92	5.61	2.02	5.93	5.56	6.39
1962	6.09	5.44	2.01	5.74	5.27	6.43
1963	6.24	5.26	2.01	5.53	4.97	6.45
1964	6.35	5.08	2.01	5.33	4.66	6.46
1965	6.40	4.88	2.02	5.13	4.36	6.48
1966	6.38	4.68	2.03	4.94	4.07	6.49
1967	6.29	4.47	2.04	4.77	3.82	6.49
1968	6.13	4.26	2.07	4.62	3.58	6.49
1969	5.92	4.04	2.09	4.47	3.38	6.49
1970	5.65	3.83	2.11	4.34	3.19	6.47
1971	5.32	3.63	2.12	4.19	3.01	6.42
1972	4.96	3.44	2.11	4.04	2.84	6.35
1973	4.57	3.27	2.09	3.86	2.65	6.25
1974	4.18	3.13	2.05	3.67	2.46	6.13
1975	3.81	3.00	2.00	3.46	2.27	5.97
1976	3.47	2.88	1.94	3.25	2.10	5.80
1977	3.18	2.78	1.89	3.05	1.95	5.61
1978	2.94	2.67	1.84	2.87	1.83	5.42
1979	2.75	2.58	1.81	2.70	1.74	5.23
1980	2.63	2.48	1.78	2.54	1.69	5.05
1981	2.57	2.37	1.77	2.40	1.67	4.87
1982	2.56	2.27	1.76	2.26	1.66	4.69

198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연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1983	2.58	2.16	1.75	2.11	1.67	4.52
1984	2.62	2.06	1.73	1.97	1.67	4.36
1985	2.66	1.96	1.71	1.84	1.68	4.21
1986	2.68	1.88	1.69	1.73	1.69	4.06
1987	2.65	1.82	1.66	1.65	1.70	3.93
1988	2.59	1.77	1.63	1.60	1.71	3.80
1989	2.49	1.75	1.60	1.58	1.72	3.68
1990	2.35	1.74	1.56	1.58	1.73	3.55
1991	2.19	1.74	1.53	1.60	1.73	3.42
1992	2.02	1.74	1.50	1.63	1.73	3.26
1993	1.87	1.75	1.47	1.64	1.72	3.09
1994	1.74	1.75	1.44	1.64	1.70	2.90
1995	1.64	1.74	1.41	1.62	1.67	2.71
1996	1.57	1.71	1.39	1.58	1.63	2.53
1997	1.53	1.68	1.37	1.53	1.59	2.36
1998	1.50	1.63	1.35	1.47	1.55	2.21
1999	1.49	1.57	1.34	1.41	1.50	2.10
2000	1.50	1.51	1.32	1.35	1.45	2.01
2001	1.51	1.44	1.31	1.29	1.41	1.95
2002	1.52	1.36	1.30	1.25	1.37	1.92
2003	1.54	1.29	1.30	1.21	1.34	1.90
2004	1.55	1.22	1.30	1.18	1.31	1.89
2005	1.57	1.16	1.31	1.17	1.29	1.89
2006	1.57	1.11	1.32	1.16	1.27	1.90
2007	1.58	1.08	1.33	1.16	1.26	1.91
2008	1.58	1.05	1.34	1.17	1.25	1.92
2009	1.59	1.05	1.36	1.18	1.24	1.94
2010	1.59	1.05	1.37	1.19	1.24	1.95
2011	1.59	1.06	1.39	1.21	1.23	1.95
2012	1.60	1.08	1.40	1.22	1.23	1.96
2013	1.60	1.11	1.42	1.24	1.23	1.96
2014	1.61	1.13	1.43	1.26	1.24	1.96
2015	1.62	1.16	1.44	1.28	1.24	1.96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부표 2〉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증가율(1950~2015)

연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1950	2.703	3.477	1.811	1.283	4.374	2.211
1951	2.430	3.425	1.696	1.583	4.571	2.298
1952	1.976	3.351	1.492	2.134	4.893	2.465
1953	1.684	3.326	1.337	2.582	5.079	2.613
1954	1.518	3.334	1.222	2.925	5.141	2.741
1955	1.443	3.360	1.137	3.162	5.089	2.846
1956	1.430	3.391	1.076	3.298	4.934	2.927
1957	1.452	3.417	1.030	3.338	4.692	2.982
1958	1.489	3.432	0.995	3.294	4.374	3.013
1959	1.531	3.431	0.968	3.180	4.001	3.022
1960	1.579	3.416	0.949	3.020	3.601	3.012
1961	1.649	3.390	0.944	2.841	3.211	2.990
1962	1.760	3.361	0.958	2.674	2.869	2.963
1963	1.928	3.331	0.996	2.541	2.603	2.935
1964	2.141	3.299	1.056	2.444	2.413	2.906
1965	2.369	3.266	1.125	2.360	2.259	2.877
1966	2.576	3.225	1.191	2.270	2.109	2.842
1967	2.710	3.135	1.252	2.184	1.982	2.791
1968	2.737	2.965	1.308	2.117	1.898	2.714
1969	2.663	2.727	1.355	2.066	1.854	2.615
1970	2.542	2.458	1.397	2.028	1.844	2.508
1971	2.420	2.202	1.433	1.992	1.853	2.409
1972	2.292	1.999	1.439	1.941	1.829	2.326
1973	2.144	1.874	1.394	1.862	1.734	2.267
1974	1.982	1.824	1.302	1.757	1.576	2.229
1975	1.815	1.811	1.184	1.639	1.384	2.202
1976	1.654	1.796	1.063	1.524	1.208	2.179
1977	1.525	1.773	0.958	1.438	1.135	2.168
1978	1.447	1.741	0.880	1.399	1.229	2.182
1979	1.420	1.700	0.829	1.403	1.479	2.216
1980	1.415	1.656	0.792	1.432	1.816	2.260
1981	1.408	1.615	0.753	1.462	2.148	2.300
1982	1.424	1.571	0.709	1.462	2.379	2.327
1983	1.492	1.515	0.658	1.410	2.449	2.335
1984	1.601	1.447	0.601	1.312	2.370	2.323
1985	1.733	1.374	0.542	1.188	2.213	2.299
1986	1.855	1.300	0.485	1.069	2.065	2.267
1987	1.913	1.229	0.437	0.986	2.009	2.234
1988	1.864	1.162	0.399	0.956	2.095	2.202
1989	1.717	1.099	0.371	0.979	2.311	2.169
1990	1.520	1.042	0.350	1.028	2.590	2.136
1991	1.328	0.987	0.331	1.072	2.846	2.097

200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연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1992	1.161	0.927	0.310	1.097	2.993	2.032
1993	1.027	0.855	0.287	1.097	2.981	1.927
1994	0.928	0.773	0.261	1.069	2.826	1.786
1995	0.847	0.684	0.234	1.028	2.601	1.629
1996	0.765	0.597	0.208	0.988	2.390	1.477
1997	0.694	0.538	0.186	0.942	2.266	1.344
1998	0.645	0.528	0.170	0.881	2.268	1.236
1999	0.618	0.564	0.160	0.807	2.388	1.155
2000	0.605	0.626	0.152	0.727	2.557	1.089
2001	0.598	0.689	0.144	0.648	2.701	1.030
2002	0.593	0.725	0.135	0.575	2.789	0.981
2003	0.588	0.715	0.121	0.511	2.810	0.949
2004	0.581	0.660	0.105	0.457	2.767	0.935
2005	0.575	0.582	0.085	0.408	2.693	0.929
2006	0.571	0.506	0.066	0.362	2.619	0.929
2007	0.569	0.445	0.046	0.329	2.528	0.939
2008	0.568	0.401	0.024	0.322	2.403	0.966
2009	0.567	0.378	0.001	0.338	2.249	1.007
2010	0.567	0.364	-0.024	0.369	2.076	1.057
2011	0.565	0.348	-0.049	0.401	1.902	1.106
2012	0.557	0.333	-0.075	0.425	1.754	1.139
2013	0.539	0.321	-0.103	0.432	1.655	1.144
2014	0.512	0.312	-0.132	0.421	1.601	1.121
2015	0.479	0.305	-0.162	0.402	1.573	1.082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부표 3〉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자녀 출산 평균 연령

구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1950-1955	29.68	30.55	29.31	30.49	28.95	31.81
1955-1960	29.79	30.23	28.29	30.49	29.32	31.81
1960-1965	29.83	29.30	27.67	30.21	29.67	31.81
1965-1970	29.78	27.99	27.67	29.77	29.06	31.81
1970-1975	29.46	27.18	27.56	29.26	28.61	31.81
1975-1980	28.34	26.37	27.52	28.11	28.17	31.40
1980-1985	26.43	26.27	27.92	27.05	28.41	30.53
1985-1990	26.15	26.76	28.51	26.77	29.18	29.50
1990-1995	26.05	27.35	29.06	27.63	29.63	28.43
1995-2000	25.98	27.94	29.50	28.38	29.89	27.67
2000-2005	26.34	28.39	29.73	29.34	30.10	27.33
2005-2010	26.67	29.56	30.22	30.25	30.55	27.18
2010-2015	26.88	30.83	30.84	31.34	31.21	27.06

자료: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부표 4〉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1930~1974)

코호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1930				
1931				
1932	2.05			
1933	2.02			
1934	2.00			
1935	2.04			
1936	2.03			
1937	2.04			
1938	2.00			
1939	1.98			
1940	2.04			
1941	2.06			
1942	2.02		3.42	
1943	2.04			
1944	2.03			
1945	1.84			
1946	1.90			3.05
1947	2.01		2.44	3.13
1948	1.98			2.89
1949	1.98			2.82
1950	1.96			2.90
1951	1.95			2.50
1952	1.97		2.09	2.71
1953	1.97			2.37
1954	1.97			2.25
1955	1.96			2.26
1956	1.93			1.98
1957	1.90		1.92	1.96
1958	1.89			1.91
1959	1.85			1.93
1960	1.81			2.07
1961	1.76	2.16		2.14
1962	1.72	2.12	1.82	1.94

코호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1963	1.67	2.06		1.96
1964	1.66	2.00		1.82
1965	1.60	1.94		1.97
1966	1.49	1.89	1.72	1.93
1967	1.51	1.86		1.89
1968	1.50	1.80		1.91
1969	1.44	1.74	1.69	1.88
1970	1.42	1.70	1.72	1.74
1971	1.40	1.65	1.62	1.72
1972	1.39	1.61	1.61	1.64
1973	1.38	1.58	1.49	1.63
1974	1.38	1.55	1.47	1.62

주: 한국, 일본, 대만은 40세까지의 완결출산율, 싱가포르는 44세까지의 완결출산율이며 5년 단위 코호트 자료의 중간연도로 보고함.

자료: 한국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2018a, 2018b); 일본, 대만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에서 2018년 2월 13일 인출); 싱가포르 Chuan (2010).

〈부표 5〉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추이(1955~2014)

연도_코호트	기간합계출산율	코호트완결출산율(40세)
1955_1925	2.38	
1956_1926	2.24	
1957_1927	2.06	
1958_1928	2.13	
1959_1929	2.06	
1960_1930	2.01	
1961_1931	1.96	
1962_1932	1.97	2.05
1963_1933	2.00	2.02
1964_1934	2.05	2.00
1965_1935	2.15	2.04
1966_1936	1.58	2.03
1967_1937	2.22	2.04
1968_1938	2.13	2.00
1969_1939	2.12	1.98
1970_1940	2.13	2.04
1971_1941	2.15	2.06
1972_1942	2.14	2.02
1973_1943	2.14	2.04
1974_1944	2.04	2.03
1975_1945	1.90	1.84
1976_1946	1.84	1.90
1977_1947	1.79	2.01
1978_1948	1.77	1.98
1979_1949	1.75	1.98
1980_1950	1.73	1.96
1981_1951	1.73	1.95
1982_1952	1.76	1.97
1983_1953	1.79	1.97
1984_1954	1.80	1.97
1985_1955	1.76	1.96
1986_1956	1.72	1.93
1987_1957	1.69	1.90
1988_1958	1.66	1.89
1989_1959	1.58	1.85
1990_1960	1.54	1.81
1991_1961	1.54	1.76
1992_1962	1.51	1.72
1993_1963	1.46	1.67
1994_1964	1.51	1.66
1995_1965	1.43	1.60

연도_코호트	기간합계출산율	코호트완결출산율(40세)
1996_1966	1.43	1.49
1997_1967	1.39	1.51
1998_1968	1.39	1.50
1999_1969	1.35	1.44
2000_1970	1.36	1.42
2001_1971	1.34	1.40
2002_1972	1.32	1.39
2003_1973	1.29	1.38
2004_1974	1.29	1.38
2005_1975	1.25	
2006_1976	1.30	
2007_1977	1.32	
2008_1978	1.35	
2009_1979	1.35	
2010_1980	1.38	
2011_1981	1.38	
2012_1982	1.40	
2013_1983	1.42	
2014_1984	1.41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https://www.humanfertility.org>) 2018년 2월 13일  
인출.

〈부표 6〉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완결출산율의 추이(1960~2017)

연도_코호트	기간 합계출산율	코호트 완결출산율(40세)	연도_코호트	기간 합계출산율	코호트 완결출산율(40세)
1960_1930	6.10		1989_1959	1.58	1.93
1961_1931	5.93		1990_1960	1.58	2.07
1962_1932	5.74		1991_1961	1.60	2.14
1963_1933	5.53		1992_1962	1.63	1.94
1964_1934	5.33		1993_1963	1.64	1.96
1965_1935	5.13		1994_1964	1.64	1.82
1966_1936	4.94		1995_1965	1.62	1.97
1967_1937	4.77		1996_1966	1.58	1.93
1968_1938	4.62		1997_1967	1.53	1.89
1969_1939	4.47		1998_1968	1.47	1.91
1970_1940	4.34		1999_1969	1.41	1.88
1971_1941	4.19		2000_1970	1.35	1.74
1972_1942	4.04		2001_1971	1.29	1.72
1973_1943	3.86		2002_1972	1.25	1.64
1974_1944	3.67		2003_1973	1.21	1.63
1975_1945	3.46		2004_1974	1.18	1.62
1976_1946	3.25	3.05	2005_1975	1.17	
1977_1947	3.05	3.13	2006_1976	1.16	
1978_1948	2.87	2.89	2007_1977	1.16	
1979_1949	2.70	2.82	2008_1978	1.17	
1980_1950	2.54	2.90	2009_1979	1.18	
1981_1951	2.40	2.50	2010_1980	1.19	
1982_1952	2.26	2.71	2011_1981	1.21	
1983_1953	2.11	2.37	2012_1982	1.22	
1984_1954	1.97	2.25	2013_1983	1.24	
1985_1955	1.84	2.26	2014_1984	1.26	
1986_1956	1.73	1.98	2015_1985	1.28	
1987_1957	1.65	1.96	2016_1986	1.17	
1988_1958	1.60	1.91	2017_1987	1.05	

자료: 한국 Myrskylä et al.(2013), 통계청 KOSIS(2018a, 2018b),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